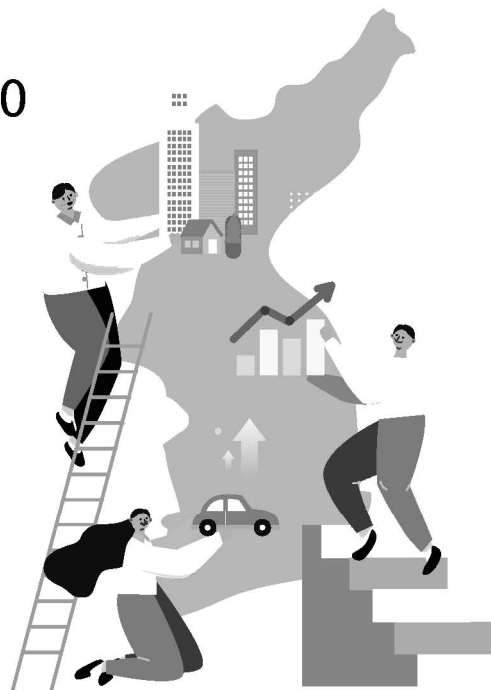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창립토론회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일시
2020. 10. 5. (월) 14:00~1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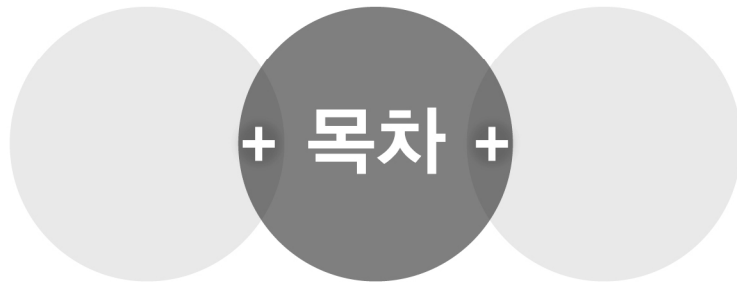
장소
세종시청 5층 대회의실



- 주최** ▶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 균형발전국민포럼, 지방분권세종회의
- 주관** ▶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 후원** ▶ 세종특별자치시청, 대전세종연구원,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세부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부 개회식	14:00 ~ 14:03	3'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 김수현 센터장
	14:03 ~ 14:07	4'	▸ 내빈소개	
	14:07 ~ 14:11	4'	▸ 개 회 사	
	14:11 ~ 14:15	4'	▸ 환 영 사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2부 토론회	14:15 ~ 15:35	80'	[제1주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좌 장: 이상선 상임대표(지방분권충남연대)	
			▸ 발표: 진종현 교수 (공주대학교)	
			▸ 토론: 김상봉 교수(고려대학교) 김진국 대기자 (중앙일보) 박수현 前 청와대 대변인 이민원 前 위원장(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조판기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	
	15:35 ~ 15:50	15'	< 휴 식 >	
	15:50 ~ 17:10	80'	[제2주제]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비전 좌 장: 김준식 상임대표(지방분권세종회의)	
			▸ 발표: 초의수 교수 (신라대학교)	
			▸ 토론: 박재율 상임공동대표 (지방분권전국회의) 반영운 교수 (충북대학교) 이광진 기획위원장 (대전경실련) 이두영 공동대표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지남석 연구실장 (대전세종연구원)	
	17:10 ~ 17:30	20'	▸ 토론종합 및 폐회	
이동 및 만찬	17:30 ~ 19:00	90'	▸ 만 찬	



주제발표 ①

»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1

진 종 현 교수 (공주대학교)

토론문

김 상 봉 교수(고려대학교) 29

김 진 국 대기자 (중앙일보) 33

이 민 원 前 위원장(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37

주제발표 ②

»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비전 47

초 의 수 교수 (신라대학교)

토론문

박 재 율 상임공동대표 (지방분권전국회의) 85

반 영 운 교수 (충북대학교)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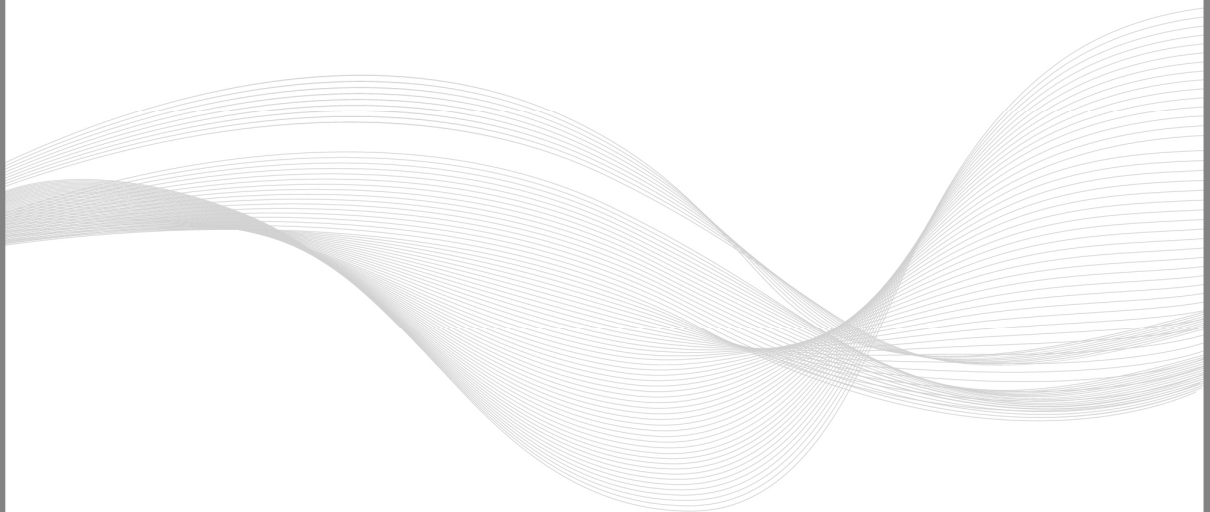
이 두 영 공동대표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91

지 남 석 연구실장 (대전세종연구원) 117

주제발표 ①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진 종 현 교수 (공주대학교)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 : 광역권 메가시티 전략을 중심으로

일시 : 2020년 10월 5일(수) 14:00

발제 : 진종헌 공주대학교 교수

주관 :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센터

Ⅰ.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추진과정

Ⅱ. 광역권 균형발전 전략

Ⅲ. 어떻게 광역권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가
: 메가시티리전

I.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추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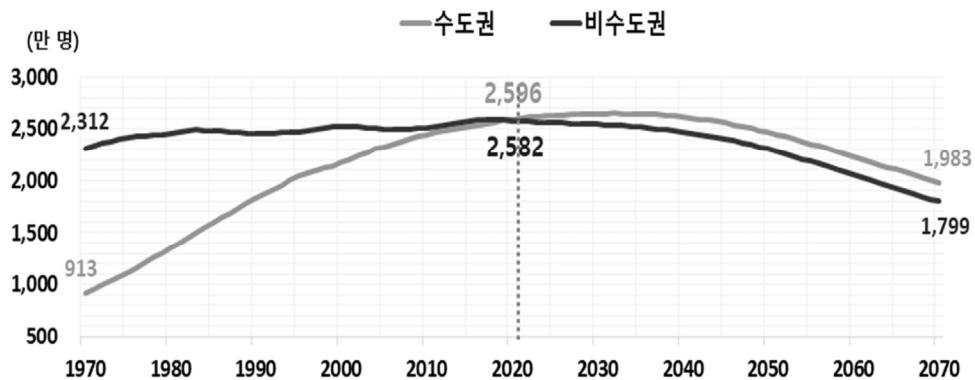
I.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추진과정

인구 집중 심화

■ 인구 : 2020년 수도권 인구 50% 초과

- 2019년 12월 기준 대한민국 전체 인구 약 5100만명 중 약 2592만명이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고 있음
-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70년대 28.7% → 2019년 50%로 증가
-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1~2015년 세종시와 혁신도시 입주로 인해 일시 정체
- 서울특별시 인구는 1992년 이후 감소하지만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의 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함

<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추이 및 전망, 1970~2070 >



출처 : 통계청, 2020.06,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가동과 향후 전망

4

I.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추진과정

경제 불균형 심화

■ 시도별 1인당 GRDP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0	16,383	9,790	9,195	11,875	9,862	10,982	29,515	-	13,374	11,737	13,791	17,362	10,802	15,446	16,485	14,629	10,971
순위	4	16	15	9	14	11	1	-	8	10	7	2	13	5	3	6	12
2010	31,053	19,223	16,379	23,234	18,667	19,950	55,585	-	23,972	21,312	26,455	40,962	21,016	34,768	33,341	28,026	20,366
순위	5	14	16	9	15	13	1	-	8	10	7	2	11	3	4	6	12
2018	43,664	26,464	23,151	30,194	26,654	27,214	63,793	42,527	36,821	30,856	43,016	53,006	27,797	42,131	40,677	32,993	30,721
순위	3	16	17	12	15	14	1	5	8	10	4	2	13	6	7	9	11

■ 시도별 GRDP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0	1,651	365	232	299	136	153	305	-	1,223	177	206	326	208	314	457	444	57
순위	1	5	10	9	15	14	8	-	2	13	12	6	11	7	3	4	16
2010	3,132	668	406	632	278	302	610	-	2,785	317	403	851	377	617	877	901	111
순위	1	6	10	7	15	14	9	-	2	13	11	5	12	8	4	3	16
2018	4,237	899	567	887	398	413	736	111	4,798	469	696	1,155	505	754	1,087	1,107	200
순위	2	6	11	7	15	14	9	17	1	13	10	3	12	8	5	4	16

출처 : 통계청, 1인당GRDP, GRDP

5

I.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추진과정

경제 불균형 심화

■ 지역별 소득 역외 유출 - 순수취 요소소득

단위 : 억원,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0	293,524	49,769	35,579	-994	12,116	17,215	-78,785	161,567	-32,980	-45,044	-98,040	-27,689	-104,601	-91,274	-88,604	-1,159
비율	136	104	119	03	68	86	166	112	141	174	241	102	24	178	17	15
2016	403,807	84,334	70,702	20,582	22,525	34,082	-136,305	219,464	-61,842	-97,698	-249,711	-48,921	-115,236	-161,003	-120,205	-727
비율	122	114	156	29	74	107	191	65	170	184	225	121	170	176	128	05

※조사 당시 세종시는 제외됨

■ 수도권 블랙홀(지역소득이 수도권으로 유출)현상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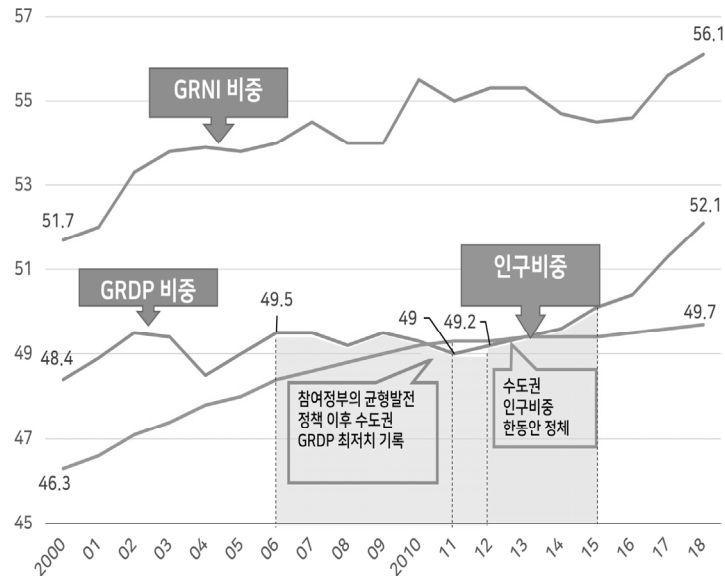
- 요소소득=근로소득 + 기업소득
- 서울, 경기, 인천으로의 요소소득 유입이 타 광역시에 비해 두드러짐
- 광역자치단체 중 광역시의 경우, 요소소득이 유입되며, 도의 경우 요소소득 유출이 나타남
- 소득유출지역과 소득유입지역은 고착화되는 추세를 보임
- 2000년 보다 2016년에 소득유출입 금액이 증가하여 분배소득 격차가 심화됨

출처 : 산업연구원, 2018, 지역소득 역외유출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6

경제 불균형 심화

수도권 인구, GRDP, GRNI 비중 추이(200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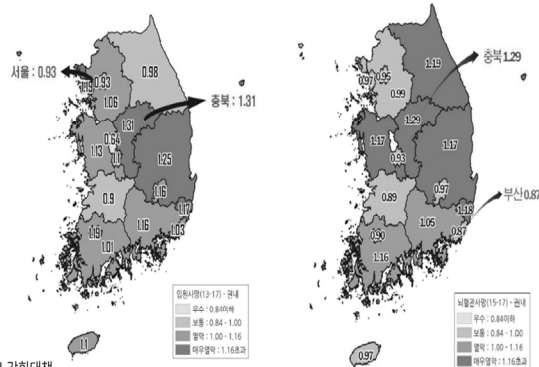
7

의료 격차

- 지역내 의료이용률(전문진료질병군 입원 진료) : 서울 93% VS 경북 23%
- 치료 가능한 사망률(10만명당) 지역격차 : 서울 40.4명 VS 충북 53.6명('17)
- 지난해 기준, 서울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가 3.1명, 강원은 1.8명, 경북은 1.4명
- 의대 졸업 후 해당시도 근무비율 10.1%, 강원 13.8%, 충남 16.6%
-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현황 : 서울 25.9% VS 강원 2.4%

< 입원 사망비 격차 >

< 뇌혈관질환 사망비 격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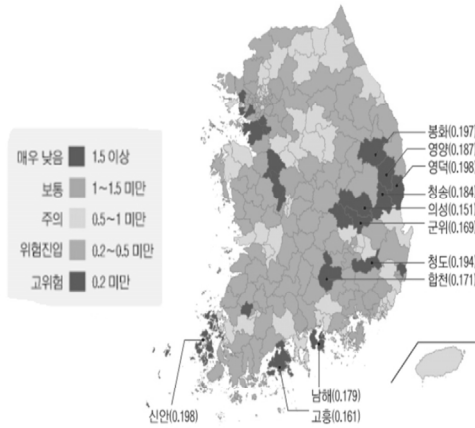
출처 : 보건복지부, 2019.11, 참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

8

I.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추진과정

지방 소멸

전국 지역소멸위험지수 현황



이미지 : 연합뉴스, 2018.08.03, 전국 '소멸위험지수' 현황
자료 한국고용정보연구원, 2018.06, 한국의 지방소멸 2018

전국 '소멸위험 지수' 현황 ※2018년 6월 기준

'소멸위험 지수'
: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

매우 낮음 1.5 이상
보통 1~1.5
주의 0.5~1
위험 진입 0.2~0.5
고위험 0.2 미만

시도별

서울 1.09	강원 0.58
경기 1.18	충북 0.73
인천 1.15	경북 0.55
세종 1.59	대구 0.87
대전 1.18	울산 1.23
충남 0.67	부산 0.76
전북 0.58	경남 0.76
광주 1.13	제주 0.86
전남 0.47	

이미지 : 연합뉴스, 2018.08.03, 전국 '소멸위험지수' 현황
자료 한국고용정보연구원, 2018.06, 한국의 지방소멸 2018

■ 지방소멸위험지수

-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인구 수로 나눈 수치
- 지수가 낮을수록 소멸위험이 높아짐

■ 소멸고위험지역의 특성

- 서울/수도권에서 떨어져 있고, 광역시급 대도시주변지역 제외
- 성별, 연령별 인구구조 불균형
- 사실상 해당 공동체 인구기반은 붕괴하고 사회경제적 기능을 상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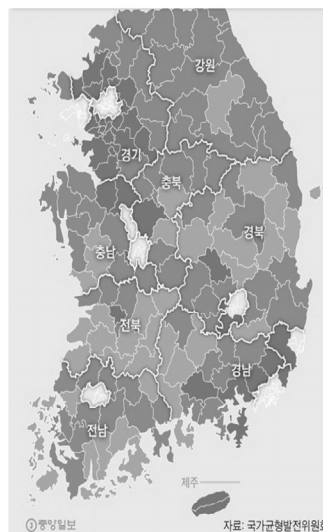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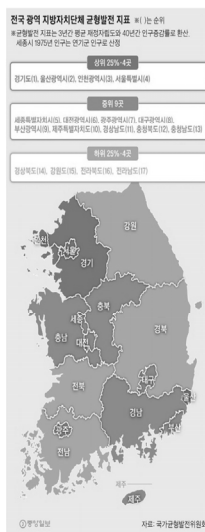
9

I.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추진과정

균형발전지표조사(광역 및 기초, 2019.08,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균형발전지표조사

- 지방자치단체의 1975~2015년 40년간 연평균 인구 증감률과 2015~2017년 3년간 평균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함
- 지역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을 위해 2019년 8월 균형발전지표 개발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균형발전 지표

상위 25% 40곳

경기(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경남(거제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경북 구미시 대구 달성군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전북 전주시 제주(서귀포 제주시) 충남(계룡시 아산시 천안시) 충북 청주시

중위 50% 79곳

강원(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태백시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경기(가평군 동두천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포천시) 경남(거창군 고성군 밀양시 사천시 의령군 창녕군 통영시 함안군 경북(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김천시 문경시 성주군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울진군 칠곡군 포항시) 인천(강화군 옹진군) 전남(곡성군 광양시 나주시 담양군 목포시 무안군 순천시 여수시 영광군 영광군 장성군 해남군 화순군) 전북(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충남(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충북(단양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충주시)

하위 25% 40곳

강원 평창군 경남(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함창군) 경북(군위군 봉화군 상주시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울릉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전남(강진군 고흥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전북(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충남(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충북(괴산군 보은군)

이미지 : 중앙일보, 2019.08.29, 지자체 첫 균형발전 지표...기초단체 상위 10% 경기도 싸늘이

10

행정수도 추진과정

■ 참여정부 신행정수도 추진과정

-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 2002년 9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 충청권 행정수도 공약 발표
- 2004년 1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 2004년 8월 신행정수도 입지확정(충남 연기·공주지역)
-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 2005년 1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
-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정
- 2005년 5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 및 고시
- 2005년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위헌 헌법 소송 각하(합헌 결정)
- 2006년 1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설치
- 2006년 12월 국민공모를 통한 '세종시' 명칭 확정
- 2007년 7월 행정중심복합도시 착공

11

행정수도 추진과정

■ 참여정부 이후 행정복합도시 진행과정과 행정수도의 재추진

- 2009년 11월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 세종시 원안 추진 재검토 발표
- 2009년 12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재검토에 반발하여 당시 이완구 충남도지사 사퇴
- 2010년 1월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 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전환하는 세종시 수정안 발표
- 2010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 제출
- 2010년 6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 부결
- 2010년 12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2012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1읍 9면 1행정동)
- 2012년 12월 정부세종청사 개청
- 2016년 6월 국회법 개정안 발의(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본원 설치)
- 2019년 8월 정부세종청사 5단계 이전완료(중앙행정기관 22개, 소속기관 22개 총 44개 기관 이전)
- 2020년 6월 국회법 개정안 발의(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세종시 행정수도 추진 제안 및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출범

행정수도 정부부처 이전 현황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중앙행정기관 44개(22개 소속기관포함)가 세종시로 이전
 - 행복도시법 제 16조에 의거, 법무부,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여성가족부 5개 부와 소속기관은 행복도시법에 의해 수도권 잔류
- 세종특별자치시 중앙행정기관 이전기관 현황(2020년 8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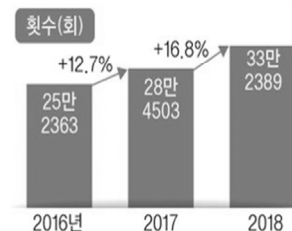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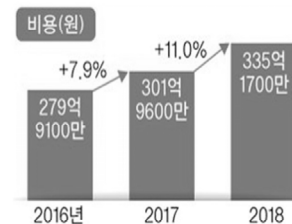
중앙행정기관 (22)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행복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인사혁신처, 소방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 (22)	조세심판원, 복권위원회사무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광업등록사무소,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우정사업본부, 한국정책방송원, 소청심사위원회, 정부청사관리본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13

행정수도 완전 이전의 필요성

- 행정의 비효율 심화
 - 행정 사회적 비효율 비용 2조 8,000억~4조8,800억원(한국행정학회 2016년 9월)
 - 잦은 출장으로 인해 길국장, 길과장이라는 신조어가 생김
 - 2019년 조사(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위, 2019.10.28)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은 지난 3년간(2016~2018년) 관외출장비 917억원에 달했으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임
 - 관외출장횟수는 3년간 87만회, 역시 증가추세(25만→28만→33만)를 보이며, 공무원의 30%가 1주일에 3~4일 출장
 - 비용문제 보다 중요한 점은 행정의 질 추락
- 세종시 정부부처공무원 여론조사(21개 부처 공무원 1066명 대상)('19.03.27)
 - ▲ 세종시의 행정수도기능강화(89.7%),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74.5%)
 - ▲KTX세종역 신설(49.6%)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44.4%)
 -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41.3%)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38.9%)
- 현재 사실상 행정수도의 역할(중앙행정기관 44개, 정책연구기관 15개)

세종 소재 중앙부처 30곳 공무원의 관외 출장 비용·횟수



이미지 : 중앙일보, 2019.10.25. 세종 중앙공무원 출장비만 917억... 하루 91회 났다
자료 :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위

14

행정수도 이전 관련 여론조사 결과

- (세계일보 개헌 여론조사)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시하는 것에 54%가 공감('18.1월)
 - 충청권 77.3% 공감
 - (국민헌법자문특위 여론조사) 헌법에 행정수도 규정을 명시하거나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위임하는데 64.8%가 찬성('18.3월)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얼미터) 이전 찬성 53.9% vs. 반대 34.3% ('20.07.22) ▪ (미디어리서치) 이전 찬성 48%, 반대 44%('20.7.25) ▪ (SBS 입소스) 이전 찬성 48.6% vs. 반대 40.2% ('07.07.25) ▪ (MBC) 이전 찬성 45.6%, 반대 48.3%('20.8.15) |
|--|
- '당위적/도덕적 명제' 에서 정치적 의제로 서서히 전환하는 과정
 - 정치적 쟁점화에 따른 찬/반 격차 축소
 - 충청권 여론은 여·야 구분없이 찬성
 - 야당이 적극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
 - 여전히 강력한 당위성(균형발전은 국가존망의 문제)

15

II. 광역권 균형발전 전략

2개의 국토공간 시나리오: 국토경영전략

II. 광역권 균형발전 전략

수도권 집중 심화 VS 다핵연계화

- 수도권 집중 심화
 - 수도권중심의 일극구조는 비효율적 계층적 공간구조를 끊임없이 재생산
 - MetroNation의 시대에 국토공간경영이념이 부재
- 다핵연계화(네트워크화)
 - 국토를 (초)광역권으로 재편
 - 국토(전체 및 각 권역)의 글로벌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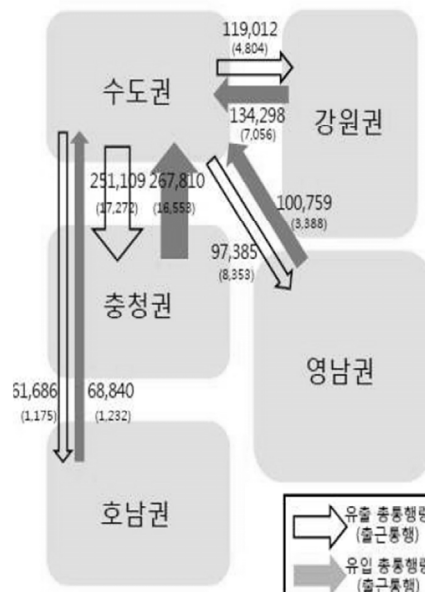
17

행정수도 이전과 광역권 발전 전략의 필요성

II. 광역권 균형발전 전략

- 강점 : 세종·대전·충청권의 지리적 위치
 - 세종충청권은 국토의 중앙부에 위치
 - 경부축과 강호축을 연계하는 위치
 - 수도권과 동남권의 중간적 위치
- 약점 : 충청권과 수도권과의 높은 상호작용 및 의존성
 - 수경강권(수도권+충청권+강원권) 즉, 수도권 비대화의 위험성이 지속: 통행량 분석을 통한 변화추이를 볼 때 일부는 이미 수도권으로 포섭
 - 충청권과 수도권의 높은 통행량 및 상호작용
 - 행정수도 이전시 수도권+충청권 메가도시 (메갈로폴리스)의 가능성 : 타 지방(권역)의 소외 및 국토공간 불균형 심화
- 함의 : 광역권 발전전략과 함께 행정수도 추진 필요

주요 권역간 총통행량 및 출근통행량



이미지 : 황금희 외, 2012, 메가리전 형성에 관한 기초연구와 시사점, 경기연구원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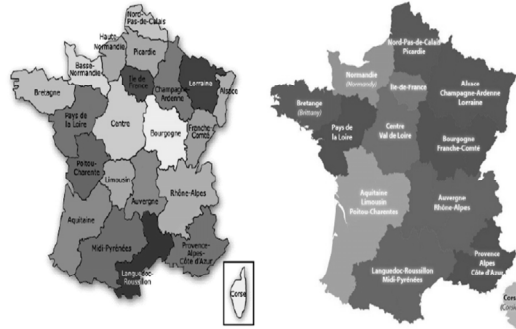
II. 광역권 균형발전 전략

해외사례(1): 광역권을 통한 균형발전 전략
- 프랑스, 지역에서 광역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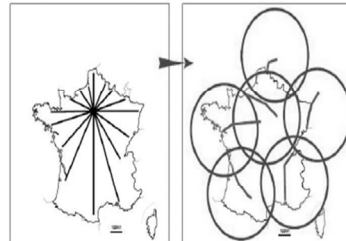
- 프랑스 22개 레지옹을 13개 광역권으로 재편
 - 2차대전 이후 기존의 데파르트망(도) 보다 광역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성을 인식하여 레지옹을 신설
 - 2000년 새로운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협력을 통해 국토 경쟁력 강화를 위해 6개의 '수퍼 레지옹'을 구성
 - 2007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레지옹과 데파르트망의 자발적 행정구역 통합 및 경계 변경을 통한 15개 레지옹으로 축소하는 안 제시
 - 2015년 '새로운 레지옹조직법안(NOTRe법)'을 통해 광역계획 수립권한 강화
 - 2016년 1월 1일 22개에서 13개로 재편
 - 레지옹의 평균인구 300만에서 500만으로 상승
 - 유럽연합 지역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역전략 수립 역량을 갖추도록 함

본토 22개 레지옹(2015년까지 시행)

13개 레지옹(2016년부터 시행)



—6대 초광역권: 단국 프랑스에서 다국 프랑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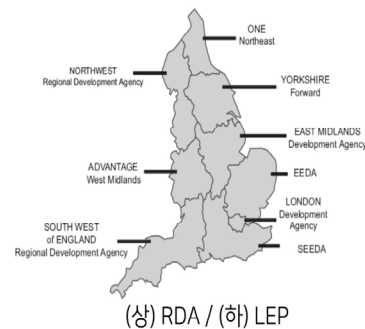


출처: 이철호 외, 2016, 대도시권 발전과 공간 재구조화 최근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지역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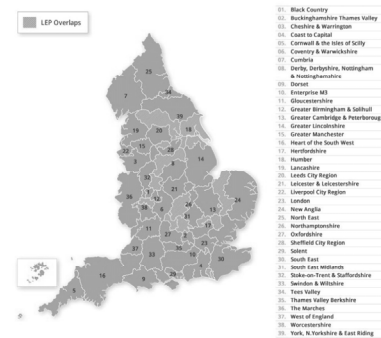
II. 광역권 균형발전 전략

해외사례(2): 분권화·광역화를 통한 균형발전 전략
- 영국, 지역과 광역의 경합 및 순환 -

- 배경: 런던집중, 남북격차(North-South Divide)
- 1974년 노동당정부 광역런던시와 6개 대도시권으로 행정구역개편
- 1980~90년대, 보수당 정부 광역단위 분권화 중단(로컬리즘)
 - 1986년에 광역 런던시(GLA)와 6개 대도시 카운티 폐지
- 2000년대, 광역(Region)에 초점을 둔 신지역주의
 - 노동당 정부 지역정책의 분권화를 추구, 1999년과 2000년에 잉글랜드를 9개 권역 지역개발청(RDA: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을 출범하고 지역의회를 창설
 - 도시권(City-Region)정책: '2000년대 런던 성장을 전체 국토로'
- 2010년 보수당 연정의 로컬리즘(localism)과 RDA 폐지
 - 로컬기업파트너십(LEP: Local Enterprise Partnerships) 39개 지역으로 분화
 - LEP는 보수당의 오래된 반광역주의(Anti-Regionalism) 노선을 반영
- 2014년 이후 도시권협상(City Deals)과 도시연합광역시 출범: 광역 맨체스터시 정부(CA)와 다수



(상) RDA / (하) LEP



이미지: 이철호 외, 2016, 대도시권 발전과 공간 재구조화 최근 잉글랜드와 프랑스의 지역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출처: 정준호, 이일영, 2017, 분권형 발전을 위한 지역 연합 전략 영국 사례의 검토와 한국에의 적용, 동향과전망 1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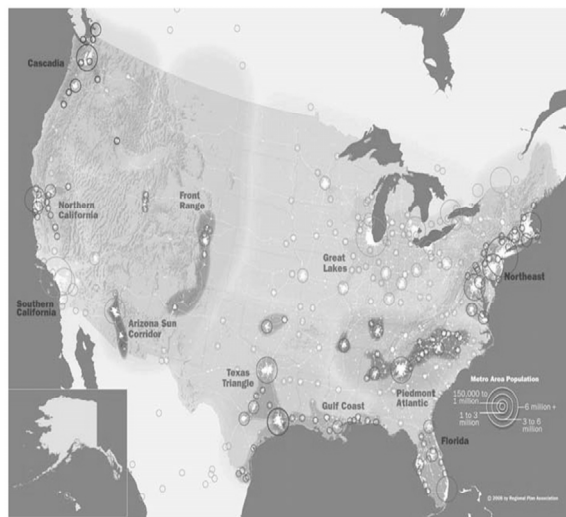
광역 vs 로컬 관점에서 본 영국의 지역정책

	광역정부	로컬리즘	광역 재등장	로컬 재등장	도시권 협상
기간	1970년대	1980년대~1990년대	2000년대	2010년 이후	2015년 이후
논리	공공관리	신로컬리즘 (New Localism)	신지역주의	큰 사회 (Big Society)	분권화
추동력	민주화와 서비스전달	행정기구 조정	경쟁력	경쟁력 / 재정적자 감소	경쟁력
구조	공식적 : GLC 및 6개의대도시카운티	공동기구 : 런던 및 前 대도시 카운티	다양 : 파트너십, 공동기구, GLA	다양 : 파트너십, 공동기구, 기능지역	도시권 협상 (Deal making), 도시연합광역시
행정력	고정	계승	유연(및 고정)	유연(및 고정)	유연(및 고정)

출처 : 정준호, 2011, 영국 보수당 연정 지역정책의 중앙집권화, 『계간 지역경제』, 제7권 제1호
정준호, 이일영, 2017, 분권형 발전을 위한 지역 연합 전략 영국 사례의 검토와 한국에의 적용, 동행과전망 101호

해외 사례(3): 광역대도시권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미국, 메가시티리전 -

- 클린턴정부는 지역사회역량강화에 초점을 두었으나, 오바마정부는 대도시권에 초점
 - '대도시권의 발전을 통한 미국의 국가적 번영'
 - 대도시권은 국가번영의 추진동력: 혁신, 인적자본, 기반 시설 등
- 11대 메가리전을 형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 미국 내 도시들 뿐만 아니라 인근의 캐나다의 벤쿠버, 멕시코 국경지역 등 초국경적 협력 진행중
- 국가, 주정부의 기존 행정 단위를 넘어서 대도시권 단위로 지역발전계획 및 집행 조정(권한이양)



이미지 : 이성우, 2009, 미국광역경제권과 생활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광역권을 통한 균형발전 및 경쟁력 강화 전략

■ 5+2 광역경제권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충청권(충남+충북+대전+세종)
- 호남권(전북+전남+광주)
- 대경권(대구+경북)
- 동남권(부산+울산+경남)
- 강원권 및 제주권

■ 2+1 (초)광역경제권

- 제1광역경제권 : 수도권+강원권+충청권
- 제2광역경제권 : 동남권+대경권+호남권
- 제주권

■ 3+2 (초)광역경제권

- 수도권
- 충청권+호남권
- 대경권+동남권
- 강원권 및 제주권

■ 3+1 (초)광역경제권

- 수도권(서울+인천+경기+강원)
- 대경권(대구+경북)
- 동남권(부산+울산+경남)
- 제주권

III. 어떻게 광역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가: 메가시티리전

메가시티의 지속적 증가

- 메가시티(Mega Cities): 인구 1천만명 이상의 인구 거주, 글로벌 경제의 결절 기능을 수행
 - 선진국 메가시티: 세계도시와 다수 중첩
 - 개도국 메가시티: 인구기준 탑 10 메가시티 중 9개가 아시아에 위치
 - 메가시티의 기준은 계속 변동: 300만 → 800만 → 1000만
- 메가시티 vs. 세계도시(Global Cities)
- 현재 33개의 메가시티, 2030년에 43개 메가시티 추정
- 기존 대도시권(Metropolitan Region)과 구분
 - 메가시티는 다중심 거대도시지역 Polycentric Megacity Region
 - 기존의 대도시권(Metropolitan Region)과 구분: 단일중심, 중심+주변
 - 메가시티는 국가발전축으로 간주되고 있음

25

MCR: 메가시티의 진화와 명암

메가시티리전(MCR: Mega-City Region): “새로운 도시혁명”

- 메가시티리전(MCR: Mega-City Region)은 글로벌트렌드
 - 새로운 시대의 도래, 네트워크사회/네트워크 도시
 - 경제공간은 대도시권중심으로 재편, 대도시권경제의 역량에 따라 국가의 장래 결정
 - 메가시티+지역
 - 하나 혹은 복수의 중심도시+수십개의 중소도시
 - 세계경제/도시네트워크와의 연계
- 개도국/저개발국 메가시티:
 - “Mega-Global Divergence”: 세계도시(Global Cities) 아닌 메가시티
 - LDCs(Less Developed Countries)에서 메가시티가 폭발적으로 증가

26

메가시티 개념의 기원

R.Florida “메가(시티) 리전이 현 시대 중요한 경제 공간으로 출현했다... 오랫동안 대도시와 주변 촌락, 교외 지역으로 구성되었던 도시는 이제 여러 개의 도시지역으로 구성된 메가리전으로 대체되고 있다”
『Who's Your City?(2008)』

- R.Florida에 따르면 ‘서울-부산’은 하나의 메가리전
- M.Castells(1996) : 메가시티(Mega Cities)는 “세번째 밀레니엄의 도시모델” 『네트워크사회의 도래』
 - 세계경제의 지배적 중심이 아닐 수 있지만, 거대한 인구집단을 지구적 체제와 연결
 - 메가시티는 외부적으로 세계적 네트워크 또는 국가와 연결되지만, 국지적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새로운 도시형태
 - 홍콩, 센젠, 광둥, 주장강 삼각주, 마카오 주하이, 대도시 지역을 메가시티로, 일본의 도쿄-요코하마-나고야 회랑이 오사카-고베-교토 회랑과 연결되어 메가시티 출현을 예견
- M.Castells의 메가시티 예찬
 - 메가시티는 진정한 발전동력
 - 메가시티는 문화적, 정치적 혁신의 중심
 - 메가시티는 지구적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연결점
- R.Florida(2008) : 메가시티는 다국적, 초국적 개념

27

메가시티의 특성 (1) 네트워크 도시

- 네덜란드 란스타드(Randstad)
 - 네덜란드의 경제생활권의 중심이며, 주요도시들이 환상형 구조를 이루고 있음
 - 델타메트로폴리스(Deltametropolis)
 - 네트워크형 메가시티의 대표적 사례
 - 각 도시들과 55km 범위 내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음
 - 개별 도시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도시권 전체로서 세계 도시체계 내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도시간의 상호협력력을 통해 지역 수준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
 - 란스타드 내 13개 도시들은 각각의 산업과 기능을 전문화하여 연계하고 있음

도시	주요 산업 및 자산
로테르담	항만, 국제무역, 지역공항, 산업, 기업 본사, 대학도시
암스테르담	관광, 국제무역, 예술, 대학, 레저, 은행, 기업본사, 항만
헤이그	행정 및 정치, 기업본사, 컨설팅, 관광
유포레흐트	도로 및 철도 허브, 대학도시, 무역, 컨설팅, 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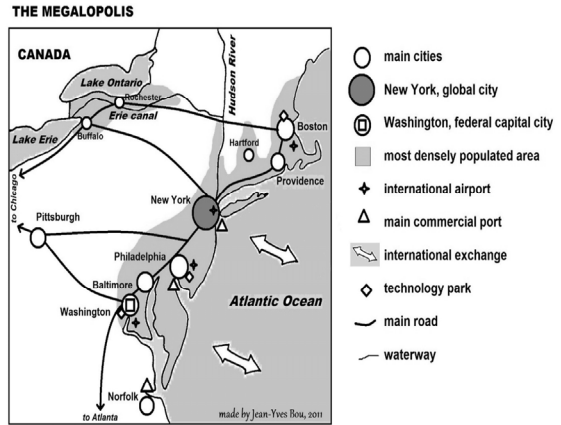
이미지 : Hans Pluckel, 2006, 11RANDSTAD HOLLAND building a competitive and livable region, Presentation for the OECD Working Party on Territorial Policy in Urban Areas) 28

III. 어떻게 광역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가: 메가시티리전

메가시티의 특성 (2) 회랑도시

■ 미국 보스워시 메갈로폴리스

- 현대 메가시티의 원형
- 보스워시 메갈로폴리스(Bos-Wash Megalopolis)는 동부 연안을 따라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워싱턴D.C을 포함하는 500마일 이상 되는 광대한 연담화 도시지역
- 프랑스 지리학자 장 고트망이 1961년 처음 사용
- 미국 국토면적의 2%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6년 기준 미국의 인구의 17%인 약 5,200만명 정도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메갈로폴리스 중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한 지역
- 2016년 약 2.2조 달러이상 GDP 기록
- 보스워시 메갈로폴리스의 GRDP은 OECD선진국인 영국, 프랑스 GDP 보다 크고, 인도와 캐나다 GDP의 두 배나 많은 규모임



이미지 : 한겨레, 2018.11.29, [미국도시이야기] 두 도시 이야기 : 뉴욕 VS 서울(1)

29

III. 어떻게 광역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가: 메가시티리전

세계의 슈퍼스타 도시들(메가시티)

순위	도시	점수	그룹
1	뉴욕	48	1위 그룹
2	런던	40	
3	도쿄	29	
4	홍콩	21	2위 그룹
5	파리	19	
6	싱가포르	17	
7	로스앤젤레스	13	
8	서울	11	3위 그룹
9	빈	10	
10	스톡홀름	9	
10	토론토	9	
12	시카고	8	
13	취리히	6	

순위	도시	점수	그룹
14	시드니	5	3위 그룹
14	헬싱키	5	
16	더블린	4	
16	오사카-고베	4	
18	보스턴	3	
18	오슬로	3	
18	베이징	3	
18	상하이	3	
22	제네바	2	
23	워싱턴	1	
23	샌프란시스코	1	
23	모스크바	1	

※ R.Florida에 의해 분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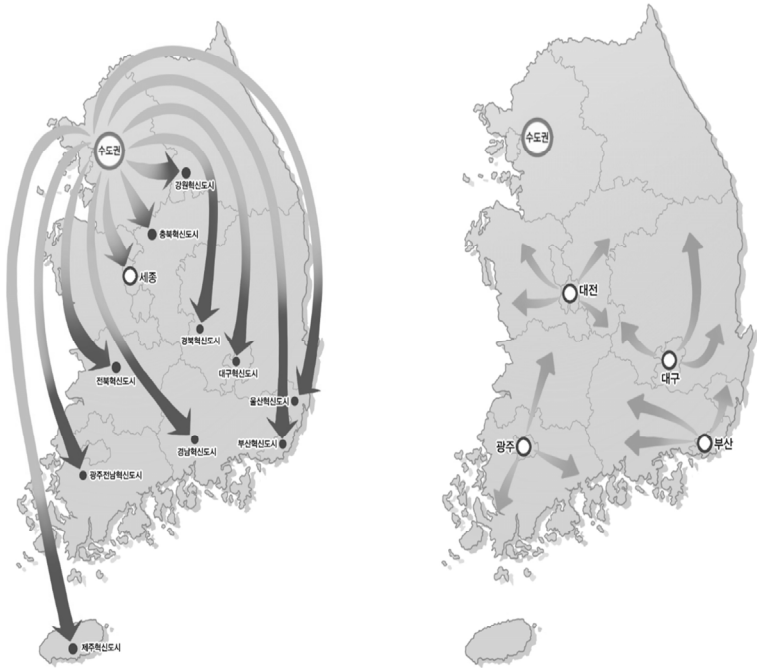
출처 : R.Florida, 마틴 번영 연구소(Martin Prosperity Institute)자료를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에서 재인용

30

어떻게 광역권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가
: 메가시티리전

	거점 성장 전략(대도시권)	네트워크 도시(메가시티리전)
도시간 연계 특성	(수직적) 계층화	(수평적) 네트워크화
관계	지배종속관계	상호의존관계
도시체계	중심부-주변부 도시	네트워크 도시
도시서열 결정요인	중심성	결절성
비용요소	운송비용	정보비용
시장 경쟁체제	완전경쟁체제	불완전경쟁체제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정책 VS 미래 광역거점위주 개발(안)(?)



III. 어떻게 광역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가: 메가시티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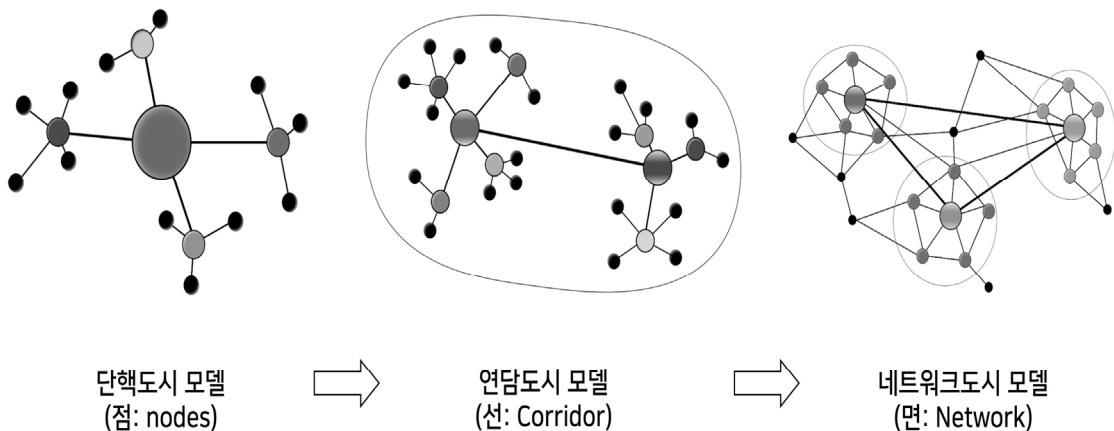
권역내 다핵거점연계발전

- 혁신도시정책의 공과를 평가: 물리적 분산에 초점을 둔, 당시로서는 효과적인 선택
- 광역거점개발방식을 지양: 미래의 균형발전정책으로 적절한가
- 권역내 단일거점성장보다 다핵거점연계성장이 바람직함
 - 부산/대구/대전/광주를 중심으로 단일거점 광역권 발전전략구상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성 부족
 - 단일거점체계는 계층적/수직적 도시체계
 - 서울 중심 수도권성장모델을 복제하는 전략을 지양
 - 단일거점의 중심력 부족: 서울과 같은 국제적 경쟁력 가진 단일거점의 부재
 - 상호의존과 협력체계의 시너지효과를 추구해야
 - 수도권모델은 방사상, 집중형모델의 성장 이후 순환형 공간구조를 부가 → 중앙집중의 구조적 심화 초래
 - 초기단계에서 '순환적 연계'를 가능케 하는 공간구조를 계획해야
- 어떻게 '다핵거점' 권역별 연계발전의 중심축을 형성할 것인가?

33

III. 어떻게 광역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가: 메가시티리전

메가시티의 발전방향 (점-선-면)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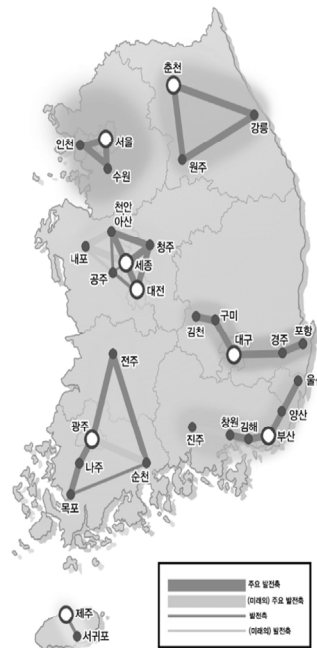
메가시티의 발전방향

- (전문화) 도시들 간의 기능 특화/전문화 -> 상호의존성이 메가시티 체계의 핵심
 - (분산/분화) 발전축상의 여러 지역중심도시에 중요 기능을 분화. 권역의 최대중심도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되 다양한 핵심기능을 백화점식으로 집중시키는 전략을 지양
 - (연계성) 지역중심도시간 연계 교통망 강화/협력체계 구축
 - (순환성) 궁극적으로 순환형 네트워크 메가시티를 지향
-
- 상대적으로 중심성이 허약한 광역권(메가리전)에서 연계를 통해 중심성을 강화
 - 4대 권역중심도시의 네트워크 연계를 강화
 - 궁극적으로 순환형 네트워크도시를 지향/중심-주변 모델 지양
 - 단일 거점(점) → 회랑형 중심축(선) → 순환형 네트워크도시(면)

35

메가시티의 유형 : 권역내 다핵거점 연계발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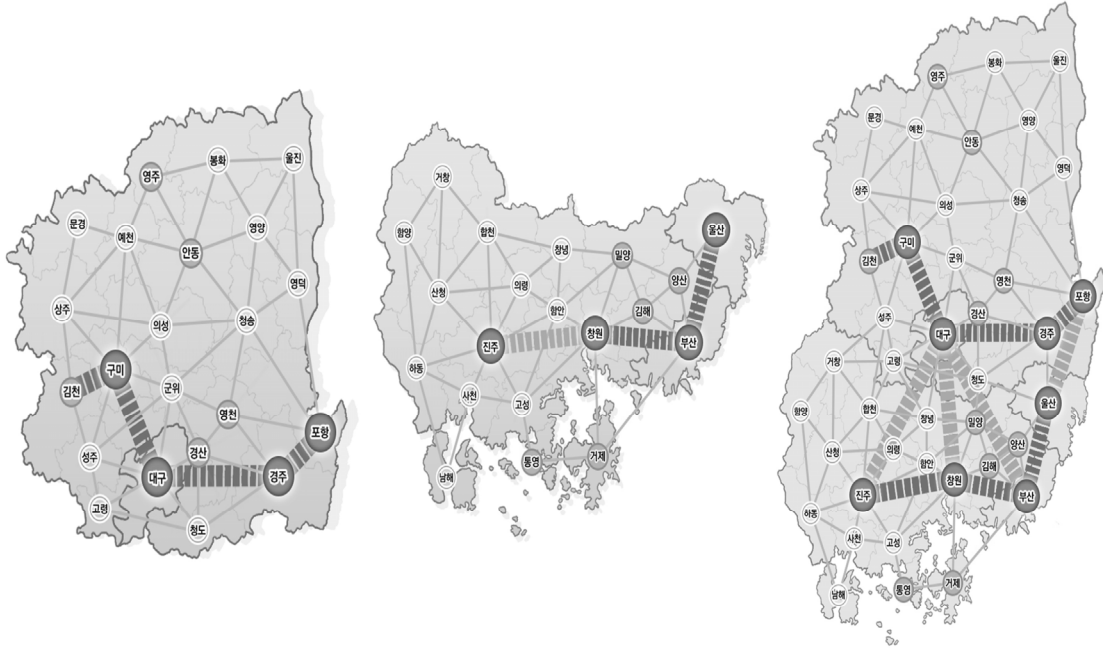
- 회랑형(Corridor) 발전축
 - 부산-울산-창원-진주
 - 대구-포항-구미-김천
- 트라이앵글형 발전축
 - 광주-전주-광양만권(여수·순천·광양)-목포
 - 춘천-원주-강릉
- 다이아몬드형 발전축
 - 대전/세종-천안-아산-청주-내포



36

III. 어떻게 광역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가: 메가시티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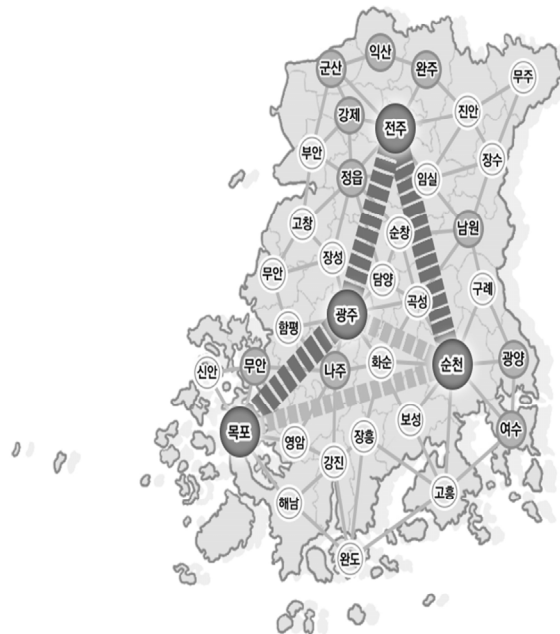
권역별 발전축(안)과 네트워크형 메가시티: 대경권, 동남권, 영남권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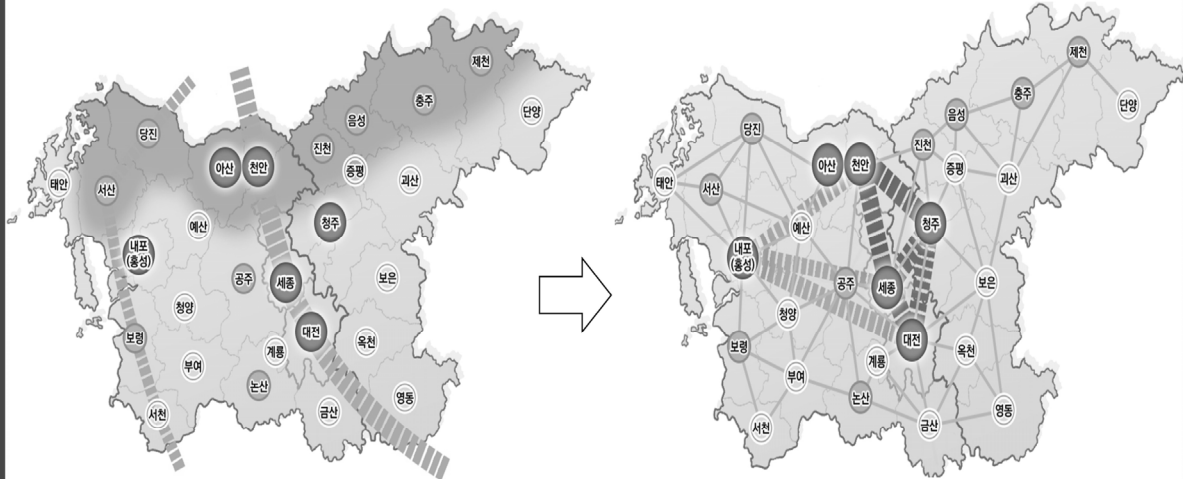
IV. 어떻게 광역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가: 메가시티리전

권역별 발전축(안)과 네트워크형 메가시티: 호남권



38

권역별 발전축(안)과 네트워크형 메가시티: 세종·대전·충청권(新수도권)
- 수도권 외곽에서 국토의 새로운 중심으로 -



39

권역별 발전축(안)과 네트워크형 메가시티: 세종·대전·충청권(新수도권)
- 충청권 공간구조의 재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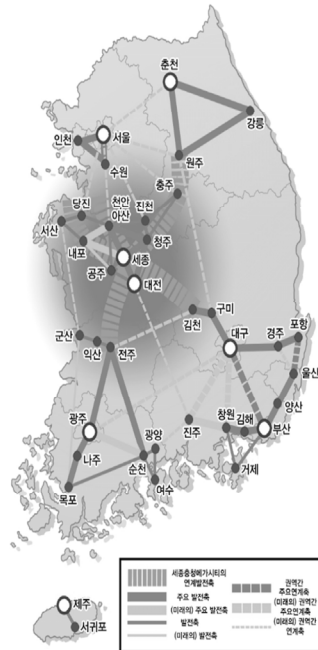
- 수도권 중심 남북축의 강화
 - 경부축(메인축): 천안, 청주, 세종, 대전 ...
 - 서해안축(보조축): 당진, 서산, 보령 ...
- 충청권 공간구조의 불균형
 - 동서 불균형
 - 'T'자형 공간구조 구체화
 - 수도권 인접부의 동서축+ 청주, 세종, 대전, (공주) 등
 - 타지역의 상대적 소외
- 함의: 세종행정수도권은 충청권 공간구조의 재편
 - 네트워크형 메가시티
 - 광역의 중심부

40

III. 어떻게 광역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가: 메가시티리전

권역별 발전축(안)과 네트워크형 메가시티: 세종·대전·충청권(新수도권)
- 균형발전과 순환적 연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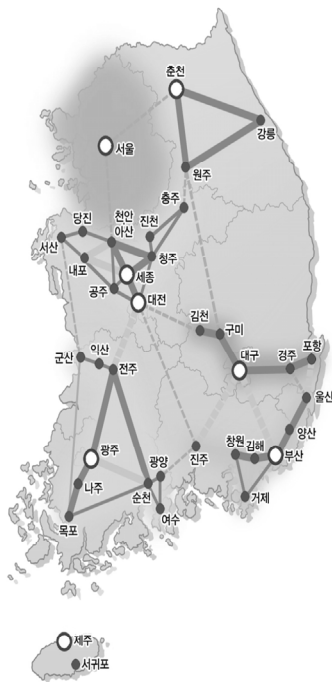
- 충청권 내 균형발전
 - 세종 기준 동-서 균형발전: 내포와의 연계성 강화
- 순환적 연계: 1차 순환
 - 대전·청주, 천안·아산, 내포, 공주를 연결하는 다이아몬드형 발전축
 - 현재의 수도권과 달리 좁은 중심부에 과밀한 도시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네트워크의 형태로, 충청의 광역중심부를 형성
- 순환적 연계: 2차(외곽) 순환
 - 서산-당진-천안-아산-진천-충주(원주)-김천-구미-전주-익산-군산으로 이어지는 정방형에 가까운 외곽의 환상(環狀)교통망
 - 결절에 해당하는 주요 도시들은 세종·충청메가시티의 중심성을 외곽으로 확산하고 연계하는 작은 중심지로 기능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적 위치
 - 영남권, 호남권, 강원권을 연계하는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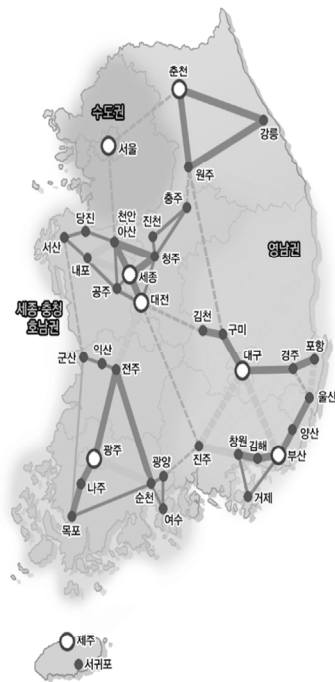
41

III. 어떻게 광역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가: 메가시티리전

5+2 광역권



3+2 (초)광역권



42

5+2 광역권 경제규모

*2018년 기준 전국대비비율(단위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인구	49.77	10.66	9.99	9.91	15.3
GRDP	51.82	12.61	8.8	8.72	14.52
경제활 동인구	50.32	10.96	9.7	9.93	14.81
수출액	41.12	19.99	9.77	8.1	20.63

※ 편의상 강원 및 제주 비교 제외함

3+2 (초) 광역권 경제규모

*2018년 기준 전국대비비율(단위 %)

	영남권	세종·충청·호남권	수도권
인구	25.29	20.66	49.77
GRDP	23.24	21.41	51.82
경제활 동인구	24.74	20.66	50.32
수출액	28.73	29.76	41.12

※ 편의상 강원 및 제주 비교 제외함

사례 : 영남권 메가시티 진행상황 - 동남권에서 영남권 메가시티로 -

- 수도권에 대응하는 권역별 메가시티 플랫폼 필요성 제기('19.12.12)
 - 공간 혁신을 통한 경제공동체 구성 및 교육혁신방안인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필요성 제기
 - 초광역 교통인프라를 통한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 계획
 -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을 통한 인재양성시스템, 기업유치 및 창업 활성화, 좋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기대
 - 광역경제권 형성을 통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
- 초광역 협력을 강화하여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축 계획('20.01.02)
 - 대형항만, 공항, 철도 등 인프라를 통한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계획
 - 기계, 소재·부품, 자동차, 선박 등 동남권 주력 산업과 연계한 수소경제권을 만들어 경제, 산업분야 협력 강화
 - 광역도로망과 철도망 확충, 먹거리 공동체 조성, 환경문제 해결 등 생활권 분야까지 확대 필요
- 영남권 메가시티(그랜드메가시티) 합의 ('20.08.05)
 -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구성
 - 낙동강 통합 물관리
 - 영남권 광역철도망 구축
 -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위한 공동대응

행정수도 이전과 수도권 메가시티의 발전

- **혼잡비용감소와 함께 질적 성장을 추구**
- **글로벌 경제문화허브/거버넌스 주요거점을 지향**
 - UN 산하기관 등 국제기구 유치, 글로벌기업 및 금융기능의 거점화 추진
 - AI 국제거점도시추진 : 국제 AI 표준원, 블록체인협회, 인공지능협회 등 유치
 -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문화발신지 역할 강화(K-POP 등)
- **한국 제1메가시티(MCR)로서 동아시아 중심을 지향**
 - 네트워크형 메가시티를 구축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 홍콩 정치적변화를 계기로 동아시아 금융/국제관계 허브를 추구
- **수도권 1극 공간구조 VS 다극(다중심) 연계 공간구조**

45

요약 및 결론 :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

- **수평적 네트워크형 메가시티전략**
 - 수직적/계층적 거점도시전략을 넘어서 수평적네트워크형 메가시티전략을 수립
 - 과도한 경쟁보다 상호보완, 특성화를 추구
- **메가시티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엔진/발전축**
 - 메가시티는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여러 개의 엔진
 - 메가시티발전을 통한 국가변영 전략
- **권역별메가시티의 국제적 연결망 강화**
 - 권역별로 특화된 교통, 물류, 정보망 연계
- **지방정부 : 광역(Region) 중심 유연한 거버넌스의 구축**
 - 산업 및 지역정책 책임단위로서의 광역 스케일의 중요성 재강조: 광역행정협의체 등 광역 거버넌스 구체화
 - 협의를 통한 권역별 사회/경제/공간 전략계획 자율적 수립 및 주요 사안별 협의
 - 민주주의와 자치단위로서의 기초(Local)와 역할 차별화
- **중앙정부 : 행정수도이전을 계기로 광역메가시티 국가도시전략 및 정책수립필요**
 - 3~7개의 메가시티리전 전략 추구
 - 중앙정부의 지역에 대한 포괄적 지원, 권한이양 및 협상

46

감사합니다



**[제1주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토 론 문**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

김 상 봉 교수(고려대학교)

1. 가칭)국가행정수도권 및 행정수도 건설 및 추진체계 재구축

-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국정목표와 국가적 과제를 앓고 탄생한 행정 중심복합도시 즉 세종특별자치시는 국가기관에 의해 계획·건설
- 서울수도권의 과도한 인구집중과 집적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두보이자 거점역할을 수행해야할 세종특별자치시가 성장해가고 있지만, 서울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여전히 가속화되고 수도권 집중현상은 완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음
- 세종특별자치시가 아직 미완성단계(2030년 완료)에 있지만, 이른바 행정수도로써 역할과 기능을 다한다 할지라도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일 가능성이 큼
-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 및 관리과정에서 도시의 성장과 함께 주변광역권 및 대도시들과의 관계에서 인구와 산업, 교통 등에서 다양한 갈등현상이 발생
-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기축인 세종특별자치시가 국가행정수도로써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도시개발방향 및 전략을 새롭게 구축, 정립이 필요함
- 국가단위에서 행정수도건설 및 추진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 위원회 등을 전격검토, 설립하고, 지역단위에서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주변광역대도시 단위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 모형에 의거, 가칭)국가행정수도권 광역거버넌스 행정체계(광역지방정부단위 의결기구 포함)의 구축을 통해 중앙정부와 국가 행정수도권 광역단위에서 연계한 계획사업추진체계구축이 필요함. 미국워싱턴 광역정부협의회(MWCOG), 연방수도계획위원회(NCPC) 등 주요사례

2. 정부부처, 당정간의 긴밀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정치행정수도

- 세종시에 위치하는 중앙행정기관들은 대부분 정책기획부서로 국회 및 정당과의 빈번한 접촉이 필요하다. 공식적인 국회와의 접촉(상임위원회 출석, 국정감사, 국정조사, 각종자료제공)은 물론 비공식적인 의원실과의 접촉, 정책협의 및 조정, 실무자 접촉 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는 입법기능을 가진 국회와 집행기구인 행정기관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통로가 된다.
- 입법부와 행정부의 분리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세종시에 43개 중앙행정기관이 입지하였고,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은 현실적인 과제. 또한 국회운영 시스템은 국정감사기관 선정의 유연성 확보 및 운용방식의 개편, 테마 국정감사 및 예비 조사제의 활성화, 국회와 행정부간의 정보흐름을 유연화하고 동시에 집중가능하다.
- 세종시로 이전한 행정기관과 청와대, 정당과의 유기적 의사소통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는 국정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당정협의회는 국정의 주요현안과 관련된 장관과 집권여당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국가정책화 및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당정협의회는 정부여당에게 있어서 국가권력의 중심축에 있으며 이들의 결정이 국가정책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장이다.
- 세종시의 정부중앙부처와 청와대 간의 업무 조정중 경제업무분야는 국무총리에게 위임하여 당정회의를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세종시에 국무총리실과 경제부처 등이 이전함에 따라 업무의 조정과 집행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부처와 정부 여당간의 정기·비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다. 정부세종청사와 국회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국회기능이전 즉 세종의사당에 협의공간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3. 국정운영체계 조정에 의한 실질적 행정수도

- 우리나라 국정운영체계에 있어 행정권의 수반은 대통령이며,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고 헌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헌법 제87조).
- 국무회의는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과 대외정책을 비롯하여 헌법 제89조1~17호에서 열거하고 있으며, 규정하고 있는 심의사항은 반드시 심의하여야만 대통령이 집행할 수 있는 헌법상의 심의기관이다. 문제는 국무총리와 중앙부처 등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데 각종회의와 정기적, 비정기적인 면담 등에 일정한 시간과 비용소요에 의해 행정운영의 효율성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작용.
- 대통령과 국무총리간의 분권과 새로운 역할분담을 통하여 국정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국정의 안정화에 기여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국무총리실이 수행하고 있는 국무조정권한을 확대시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이는 헌법을 바꾸지 않고 정부조직법의 개정을 통해서 가능함.
- 현재 국정조정에 관한 권한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국무총리실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물리적 공간 이격에 따른 비효율성문제를 해소하고, 대부분의 행정업무를 세종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가능. 이러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부총리제를 실시하는 것도 필요. 이는 정부조직법상의 권한배분만 하게 되면 실현가능한 법률규정의 사항이다.
-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서울출장을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어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 세종시 정부부처이전에 따른 정부의 거래비용 절감, 시간·공간적 제약의 극복, 행정수요 변화에의 신속한 대응 등 행정운영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
-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은 서울과 세종시로 분리됨으로 인해 관계 장관회의의 정책방향과 추진일정 설정, 부처간 이견조정 등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에게 힘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 이는 정부부처간의 갈등이슈가 특정 부처의 견해에 따라 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기존의 각종

장관급 정부위원회들은 관계 장관회의 산하 분과회의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폐지하거나 필요시 임시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4. 지방분권강화 및 지방분권추진의 실질적 특례지위 확보

- 「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 관한 특별법」(2010.12.27)(2014.1.7 전부개정)(이하 세종시특별법)을 참고로 관련 논의를 전개해 가고자 한다. 세종시특별법 제1조(목적)는“이법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려는 것이 정부기관이전 등의 단순한 분산정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종시를 통하여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어 자치권을 가지고 자율과 책임 하에 자기사무를 처리하고 통제받는 지방분권체제를 통해 지역특색에 맞는 발전을 이루어내어 지방이 살아나는 진정한 균형발전의 기틀을 제공하고자한 것에 있다.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이전은 분산정책을 기초로 하여 지방분권이라는 효과를 제고하게 되고 결국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부처 이전에는 분권정책에 관한 전향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세종시의 자기결정권, 자치권이 강화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되기 위한 노력과 정책을 이끌어내야 한다. 세종시에 고도의 자치권 부여와 함께 개헌에 따른 헌법적 보장을 통해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국가(중앙정부)와 세종시(지방정부)가 연계성을 가지고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여 실질적 지방분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자치헌법이 수립되어야 한다. 세종시는 광역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와 특별자치시의 목적에 부응하는 특례적 성격을 가진 자치권을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상생을 위한 국회와 청와대 세종시 이전

김진국 대기자 (중앙일보)

○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우리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삽니다. 그냥 인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경제력이나 문화 인프라 등의 집중은 더 심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앞으로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중헌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주셔서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진 교수님 지적대로 지방 도시가 점점 소멸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집중에 따른 부작용으로 질식 상태입니다. 주택 문제가 전 국민의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우리 구들 문화는 고조선 때부터 내려온 훌륭한 유산입니다. 하지만 아랫목만 따뜻해져야 많은 사람이 쉴 수 없습니다. 요즘은 건축 기술이 좋아져서 아랫목, 윗목이 없습니다. 방바닥만이 아니라 공기도 훈훈합니다. 좋은 기술 놔두고, 왜 아랫목에서 이불을 잡아당기며 살아야 합니까?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가 움직여야 합니다. 서울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행정부는 거의 다 세종시로 내려왔습니다. 청와대와 5개 부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게 핵심입니다. 청와대가 서울에 있으니 장관들이고, 국회고, 기업이고, 모두 서울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국회가 서울에 있으니 공무원들이 수시로 서울을 들락거려야 합니다. 결국 청와대와 국회가 세종시로 와야 행정수도가 완성됩니다.

이 문제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절반 이상 이전된 상태에서 그냥 두면 국가적 낭비가 너무 큼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가능한 정치적 쟁점이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 개헌부터 해야 하나?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 때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니 헌법을 고쳐 위헌 시비를 없애자는 것입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개헌을 하면 깨끗이 해결된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개헌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행정수도는 뜨거운 정치 쟁점입니다. 거기에 개헌을 연계하면 견잡을 수 없어집니다. 그나마 추진하던 행정복합도시 추진력도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행정수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위헌 시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무리하고, 위험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정치적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많습니다.

○ 국회법 개정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입법도 진전이 없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하신 박수현 전 의원님이 19대 국회 때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21대 국회에서는 다시 세종시 출신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든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세종의사당이 어떤 형태로건 이전이 시작되면 결국 전체가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시작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의원이나 보좌진, 국회 공무원들은 현상 유지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명분이 세종의사당에 있어 적극적인 반대를 못할 뿐입니다.

2018년 중앙일보가 20대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의원의 62%가 세종의사당 설치를 찬성했습니다. 자유한국당(현재 미래통합당)도 찬성(47%)이 반대(45%)보다 많았습니다. 이 문제는 거칠게 밀어붙일수록 정치쟁점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합리적 논의보다 정치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시처럼 돼 극한 대결이 되기 십상입니다.

이미 2017년 한국행정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도 있었고, 지난해에는 국토연구원
에서 이전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도 있었습니다. 설계 예산도 20억 원 확보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시간을 생각하면 사실 설계 예산이 훨씬 더
확보됐어야 합니다. 총공사비가 30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설계비(통상 총공사비의 4~5%)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해찬 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이라는 막강한 추진력을 갖추고도 이 정도입니다. 우선 당장 가능한
국회법부터 고치고, 세종의사당에 일부 상임위라도 먼저 옮기기를 기대합니다.

○ 세종시 이전 행정부처 유관 상위부터 이전

지난해 10월 저는 중앙일보에 한 면 기획기사로 '[김진국의 퍼스펙티브]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보낼 수는 없나'를 실었습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모두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그래야 합니다.

세종시 공무원의 출장지 중 60% 정도가 국회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원지
코리아컨설팅) 공무원 이동의 첫째 요인이 국회라면, 두 번째가 청와대입니다.
더구나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입니다. 대통령이 수시로 장관들과 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장관들이 서울에 상주하다 보니 공무원들이
자기 장관 만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장관이 세종시에 있는 날은 결재 받으려고
줄을 섭니다. 대통령이 움직이면 다 해결됩니다.

하지만 일에는 수순이 있습니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은 위헌 시비를 피하면서
행정낭비를 줄이는 최선의 방안으로 10개 상임위와 사무처 일부가 내려가는
방안(B1)이 가장 효율성을 높인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에 남아있는
행정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외통위, 국방위, 정보위)와 기타 상임위(운영위,
법사위, 과방위, 여가위)만 남기고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입니다.

우선 국회법을 처리하고, 이 방안까지라도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주기를 기다립니다.
그 정도만 돼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복합도시 추진이 행정수도의
합리성을 강화했듯이 이 단계만 무리 없이 추진하면 행정수도 완성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배후 부지는 충분히 확보해놓아야 합니다.

○ 행정수도는 상생 발전을 위한 출발

행정수도는 서울의 기득권을 빼앗아오는 게 아닙니다. 몇 번 세종시 관련 토론회에서 말씀 드렸지만 저는 세종시에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땅 한 뼨 가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서울에 집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수도가 뺏고 빼앗는 게임이 되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진 교수님이 제안하신 권역별 개발 개념은 훌륭한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서울을 보면서 독식한다고 하지만 충청권에서는 세종시가 블랙홀이 될까 걱정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세종시로만 모으는 게 아니라 세종시로 인해 주변 권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세종시의 교통이 행정수도로는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는 것도 이런 우려 탓이 아닌가 합니다. 지나친 걱정입니다. 소통이 잘 되게 바꾸어야 합니다. 국회과 청와대만 옮긴다고 끝이 아닙니다. 행정 공무원들도 각계 인사와 소통해야 합니다. 서울에 있을 때만큼은 아니라도 공무원들끼리만 모여서 국민들과 담을 쌓고 지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 인사들이 인천으로 들어와 서울만 들르고 그냥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종시의 접근성을 더 높여야 합니다.

이런 작업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모든 부문이 자제하고, 공생할 현명한 지혜를 짜내야 합니다.

세종시 수도화의 과제와 해결방안

이 민 원 前 위원장(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 현황

1.1 행정수도 완성이 지지부진하다.

- 중앙부처의 60%가 세종시에 있지만 40%의 서울 중앙부처와 청와대, 국회 등이 합작으로 연출하는 서울중심 통치구조는 여전함
- 중앙집중주의와 수도권 기득권주의가 득세

1.2 행정수도 문제의 지지부진은 국민 피로감을 가져온다.

- 이 문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이슈다.
- 이슈가 장기화되면 국민은 피로감을 느낀다.

1.3 세종시 수도화에 대한 지역의 관심도 미약하다.

- 세종시의 행정수도화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상을 위협할 수 있다.
- 세종시 외 타 지역의 언론 역시 세종시 수도화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그러한 인식을 가진 세종시 외의 자치단체(장)들은 세종시의 행정수도화를 반기지 않는다.
- 세종시 외 타 지역의 주민들 역시 세종시 수도화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1.4 세종시 수도화의 초석이 될 지방분권형 개헌이 좌초되었다.

- 지방분권형 개헌안은 대통령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좌초
- 대통령제와 내각제에 대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한 채 추진했다.
- 지방분권 개헌안은 완전한 지방분권 정신을 담고 있지 않아 지방민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받지 못했다.

2. 생각해 볼 점

2.1 세종시 및 비수도권이 행정수도의 주도권을 확립하여 중앙 정치권을 선도할 수 있는가?

2.2 헌법 개정 성공할 방안은 무엇인가?

2.3 세종시 행정수도를 완성하려면 반드시 헌법을 개정해야만 하는가?

2.4 행정수도 이슈를 단기에 끝낼 방안은 무엇인가?

3.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3대 과제

3.1 3대 과제

- 국민적 지지 획득
 - 단기에 해결
 - 충청권 연합
 - 충청권이외 지역 동의

○ 행정수도 추진 주도권을 확립

- 세종시 입장에서 중앙정치권의 이해관계를 일원화시킴
- 세종시 힘을 증가시킬 법률 정비로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재판 재청구 등 헌법재판소를 활용하여 행정수도 관철

○ 헌법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 중앙정부 관심 제고
-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헌
- 개헌의 국회 발의 성공

3.2 3각모순

○ 모순1

- 세종시 및 비수도권의 주도권 확립과 국민지지 획득 동시 추구
- 결과: 세종시의 독자성을 강조하며 타 지역의 지지를 획득하여 개헌하는 일은 불가능

○ 모순2

- 개헌과 국민지지 획득 노력을 동시에 추구
- 결과: 타지역의 지지획득으로 수도이전개헌을 추구하면 중앙정치권에 기댈 수 밖에 없음. 중앙정치권 의존도 상승

○ 모순3

- 세종시 및 비수도권의 주도권 확립과 헌법개정 동시 추구
- 결과: 세종시 독자적으로 헌법개정을 추구할 때 국민지지 획득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불가능

4. 대책

4.1 비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현재의 직권재심

○ 근거

- 헌정질서를 회복해야 함
 - 관습헌법을 이용한 위헌판결은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만든다.
 - 우리나라의 국민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관습헌법으로 이루어져있다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 우리나라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체계가 성문법으로 구성되어있음을 교육받고 자랐다.
 - 그간 그 존재 자체를 국민이 인지하지 못한 관습헌법을 갑작스럽게 들고나와 위헌판결을 시도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다.
 - 현재는 스스로 초래한 헌정질서 문란을 바로잡아야 한다.
- 오판을 수정해야 함
 - 잘못된 관습법 적용을 수정
 -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제정하는 곳이 아니다.
 - 따라서 관습헌법이 헌법이라는 판결을 할 권능이 없다.
 - 행정수도 여부의 판결을 수도여부 판결로 오인하여 적용한 잘못을 수정
- 행정수도는 수도가 아니다
 - 행정수도 위헌 결정은 행정수도를 수도로 인식한 결과다.
 - 행정기관을 이전하여 서울의 과밀압력을 약하게 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를 국가를 대표하는 수도이전으로 오해했음
 - 판단근거가 잘못되었으니 재심해야 함
- 관습이 변화했음
 - 법률의 재개정, 정부정책의 흐름은 관습헌법을 변경시켜 새로운 관습헌법을 낳는다.
 - 중앙부처의 일정비율 이상(예: 60%)이 위치한 곳이 행정수도라는 관습을 인정할 수 있다.
 - 대통령 집무실, 국회분원 설치, 중앙부처 전체 이전 등의 추진으로 이제 국민이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간주하는 관습이 형성되었다.
 - 관습이 바뀌어 다른 사건이 되었으니 재심하라

○ 가능성

- 법리

- 행정수도를 수도판결로 오인한 판결이니 재심 가능(재심)
 - 행정수도는 수도가 아니다.
 - 행정수도를 수도로 오인하고 판결함
 - 성립하지 않은 판결에 대해 선고무효를 내릴 수 있음
- 동일한 사건이 아니면 다시 판결 가능(사실상 초심)
 - 달라진 관습을 배경으로 한 다른
 - 관습을 달리한 새로운 사건에 대해 새로운 판결 가능

- 현재의 존재감 확인 기회

- 모든 조직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행동을 한다.
- 현재에게는 자신의 존재감 부각이 곧 자신의 이익이다.
- 과거 관습헌법에 의한 행정수도 위헌 판결도 현재의 존재감, 즉 자신의 이익을 한껏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나타난 결과다.
-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에 의존하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무력화시켜버렸고 그 결과 현재의 존재감은 정점에 도달했다.
- 현재는 행정수도에 대한 전향적 판결을 함으로써 다시한번 그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 사례

-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사건 재심
 - 1974년 관련자 180여 명이 불온세력의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시키고 공산정권 수립을 추진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
 -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2010년 30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활동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1975년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날조사건
 - 2007년 1월 23일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가 피고인 8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 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 2007년 8월 21일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해서 서울지방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시국사건상 최대의 배상액수 637억여 원(원금 245억여 원+이자 392억여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
-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
 - 2017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권위주의 정부 시절 과거사 피해자 48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
 - 긴급조치 위반 사건 관련 217명, 1972년 계엄령 위반 사건 120명,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111명, 진실화해위원회 재심 권고 사건 30명,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건 9명 등 모두 487명
 -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위헌·무효가 된 사건
 - 특별법을 제정해 재심 사유가 규정돼있는 사건
 - 진실화해위원회 사건 중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사건
- 감사원
 - 감사원법 제39조(직권 재심의) 감사원은 판정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계산서 및 증거서류 등의 오류·누락 등으로 그 판정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 제40조(재심의의 효력) ① 청구에 따라 재심의한 사건에 대하여는 또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감사원이 직권으로 재심의한 것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4.2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대책

○ 1단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적 지지 획득

- 현황

- 수도권 반대 우려
- 충청권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지 미약
- 행정수도 관철 전선에서 세종시의 처지가 외롭다

- 생각해 볼 점

- 행정수도 문제 해결이 지연되면서 국민적 피로감 우려
- 충청권의 결속이 없이 비수도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힘들다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의 노력이 타 지역의 반발 초래 우려 있다

- 3대과제

- 3대과제
 - 단기에 해결
 - 충청권 단결
 - 비충청권 지역 설득
- 3각모순
 - 모순1
 - 단기해결 전략과 충청권 단결을 동시에 시도
 - 결과: 충청권이 단결하여 단시간에 처리하려 하면 비충청권 설득 불가능
 - 모순2
 - 단기해결전략과 비충청권 설득을 동시에 추구
 - 결과: 단기에 비충청권을 설득을 하려면 충청권에 섭섭할만한 양보가 필요해서 충청권 단결 불가능. 충청권 단결도 없이 비충청권 설득은 불가능
 - 모순3
 - 충청권 단결과 비충청권 설득을 동시에 추구
 - 결과: 충청권과 비충청권을 동시에 설득해내려고 하면 단기해결은 불가능
- 대책: 강력한 대안으로 타 지역 동참 유도
 - 공공기관 추가이전 주도
 - 전국의 혁신공간화
 - 권역별 메가시티화: 비충청권에 충청권의 세종시에 걸맞는 '핵'을 육성

○ 2단계: 세종시 및 비수도권의 행정수도 추진 주도권 확립

- 현황

- 행정수도 문제는 중앙정치권과 헌법재판소의 전유물이다.
- 여야에 따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 수도권 비수도권에 따라 정치권의 입장이 다르다.
- 충청권의 단결수준이 강고하지 못하다.

- 생각해 볼 점

- 행정수도 관철 권한이 중앙정치권과 헌법재판소에 있는 한 행정수도화 성공이 어렵다.
- 여야와 기반지역에 따라 정치권의 입장이 다르면 정치권 설득이 어렵다.

- 충청권의 미지근한 단결로 세종시 및 세종시민의 노력이 중앙정치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낮음

- 3대과제

- 3대과제

- 세종시 입장에서 중앙정치권의 이해관계를 일원화시킴
- 세종시 힘을 증가시킬 법률 정비로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재판 재청구 등 헌법재판소를 활용하여 행정수도 관철

- 3각모순

- 모순1

- 정치권일원화와 법률정비 동시 추구
- 결과: 정치권이 법률정비를 중심으로 일원화된 행동에 나서고 있을 때 헌법 재판소 재판에 일치된 입장을 가지기는 불가능

- 모순2

- 중앙정치권 이해관계 일원화와 헌법재판소 활용 동시 추구
- 결과: 이 두 가지 노력을 함께 하여 성공하려면 세종시의 양보가 필요함. 법률정비 까지 요구하기는 불가능함. 정치권의 여건이 형성되어있지 않음

- 모순3

- 법률정비와 헌법재판소 활용 동시 추구
- 결과: 헌법재판소에 행정수도에 대한 재심판적 성격의 재판을 시작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관찰할 법률정비에 나서면 정치권은 필연적으로 분열. 이해관계 일원화는 불가능

- 대책

- 목표수준의 하향 조정: 중앙정치권 입장 인정
 - 야당에서도 행정수도를 찬성하는 쪽에 서게 할 방법은 무엇인가
 - 수도권에서도 찬성할 행정수도 완성방안은 무엇인가?

- 1개 목표 포기

- 헌법재판소에 실질적 재심청구 포기
- 중앙정치권을 활용하여 법률정비에 매진

- 우선순위 정하기

- 1단계: 세종시 입장에서 중앙정치권 이해관계 일원화
- 2단계: 세종시 힘을 증가시킬 법률 정비로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3단계: 재판 재청구 등 헌법재판소를 활용하여 행정수도 관철

○ 3단계: 헌법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 현황

- 대통령 발의 개헌 불발
- 야당의 정치력 현저히 약화
- 정부의 주 관심이 다른 곳에 있음
- 지방분권 개헌의 실패로 지역 여론 악화

- 생각해 볼 점

- 대통령 발의개헌이 실패했으므로 다시 대통령 발의는 힘들다.
- 대통령발의가 힘들면 청와대 등 정부의 개헌 추진 동력이 약화된다.
- 중앙정치권의 합의 어려움
- 악화된 지역여론의 방치는 국정 동력 상실 초래

- 3대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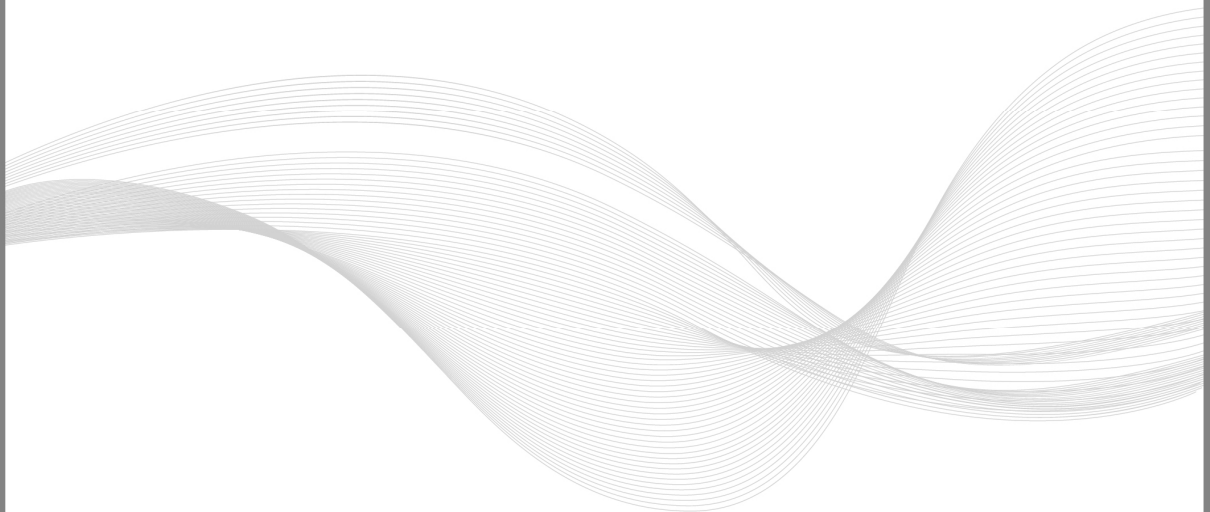
- 3대과제
 - 개헌의 국회 발의 성공
 - 중앙정부 주도 개헌
 -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내용 추구
- 3각모순
 - 모순1
 - 국회발의와 중앙정부 주도를 동시에 추구
 - 결과: 국회와 중앙정부가 동시에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에 합의 불가능
 - 모순2
 - 국회발의와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 개헌 동시 추구
 - 결과: 정치권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개헌에 합의했다면 중앙정부 주도는 불가능
 - 모순3
 - 중앙정부 주도과 강력한 지방분권제 개헌 동시 추구
 - 결과: 중앙정부 주도과 지방분권을 동시에 추구하면 중앙정부의 내부와 수도권정치인의 반발로 중앙정치권의 지지를 받기는 불가능

- 대책
 - 1개 목표 포기
 - 대통령 발의 개헌이 실패했으므로 중앙정부 주도 개헌을 포기
 - 국회발의 개헌을 위해 매진함
 - 우선순위정하기
 - 개헌의 국회 발의 성공
 - 중앙정부 주도 개헌
 -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내용 추구

주제발표 ②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비전

초 의 수 교수 (신라대학교)



대전환시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 Resilience와 Reset이 필요하다 –

2020. 10. 5(월)

초의수(신라대 교수)

“이 폭풍은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선택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인류는 지금 글로벌 위기를 맞고 있다. 어쩌면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위기 일 지도 모른다. 지금부터 정부와 개인들의 내리는 선택에 따라 앞으로의 세계가 결정될 수 있다. 보건의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경제와 정치 그리고 문화를 바꿀 것이다. 우리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하지만 이러한 행동의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

Yuval Noah Harari,

“the world after coronavirus”, *The Financial Times*, March 20 2020

2

〈 목 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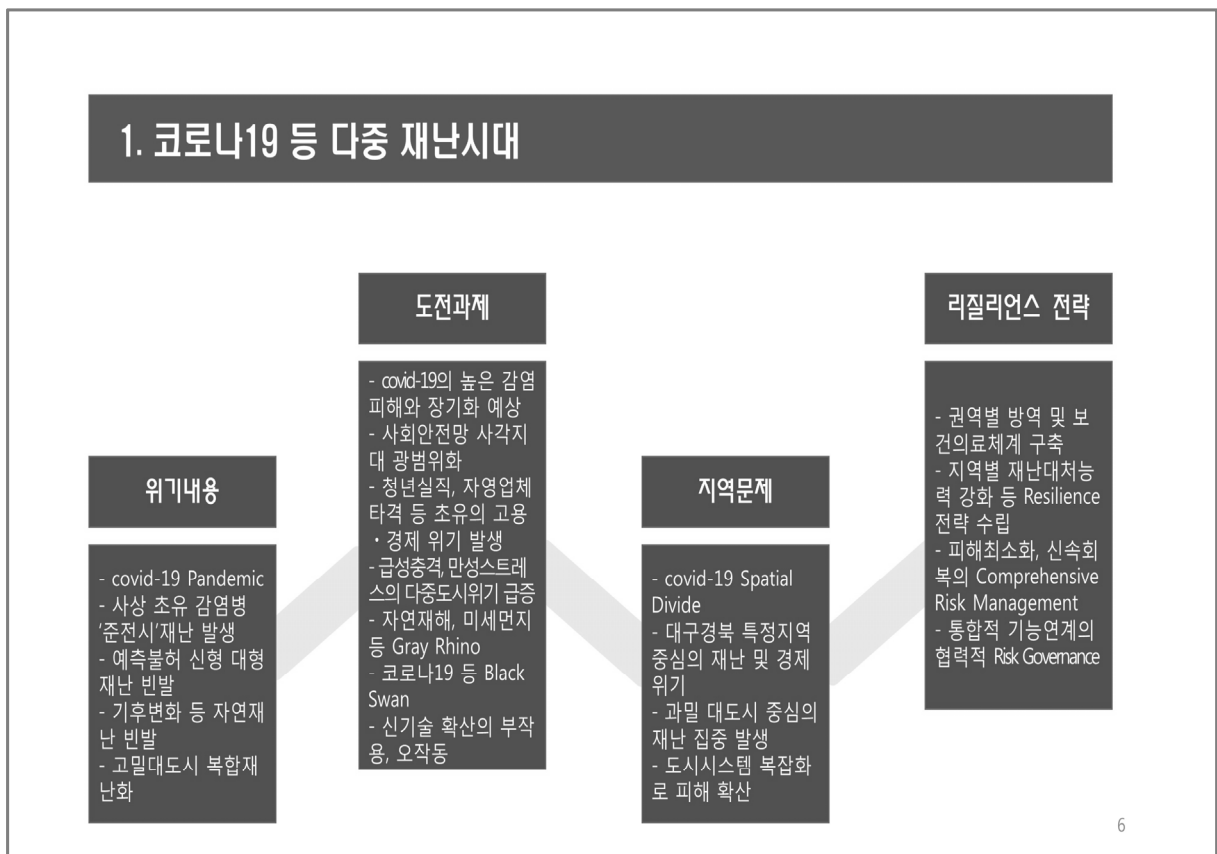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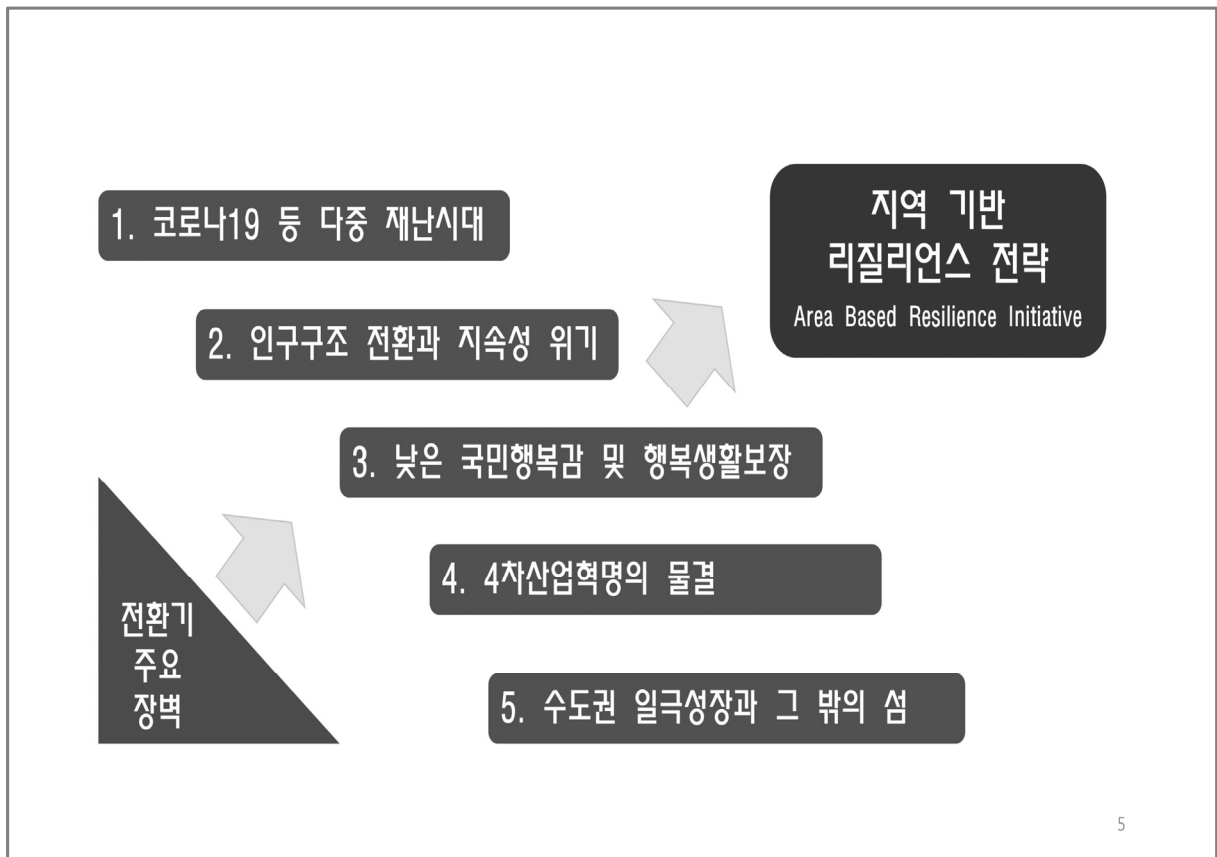
- I. 문제제기 - 대전환시대 지역기반 리질리언스 전략 필요
- II. 우리나라 지역구조 변화
- III. 코로나19시대 사회와 지역텍스트 읽기
- IV. 한국형 뉴딜과 국가균형발전의 과제
- V. 대전환시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Reset 전략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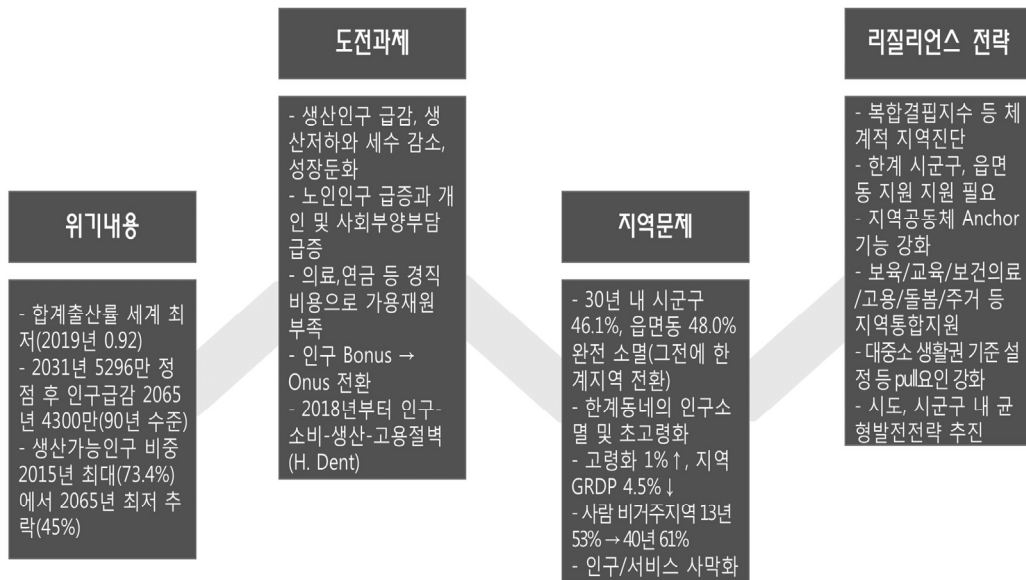
I. 문 제 제 기

- 대전환시대 지역기반 리질리언스 전략 필요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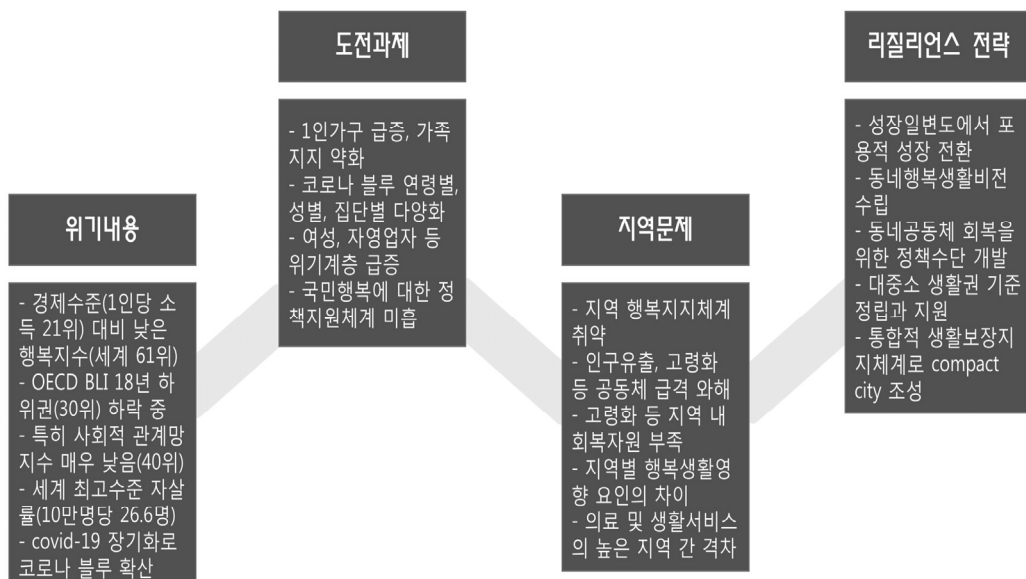


2. 인구구조 전환과 지속성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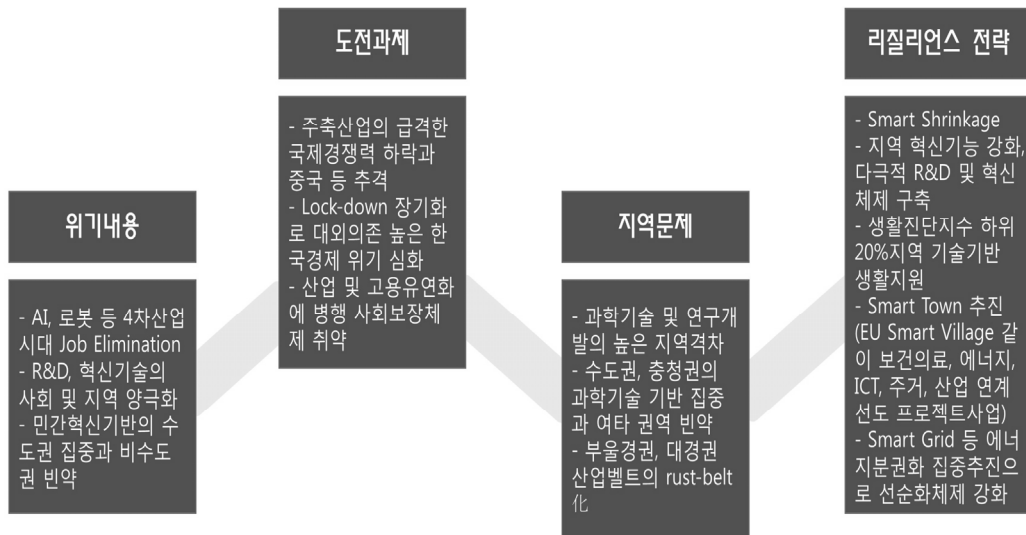
7

3. 낮은 국민행복감 및 행복생활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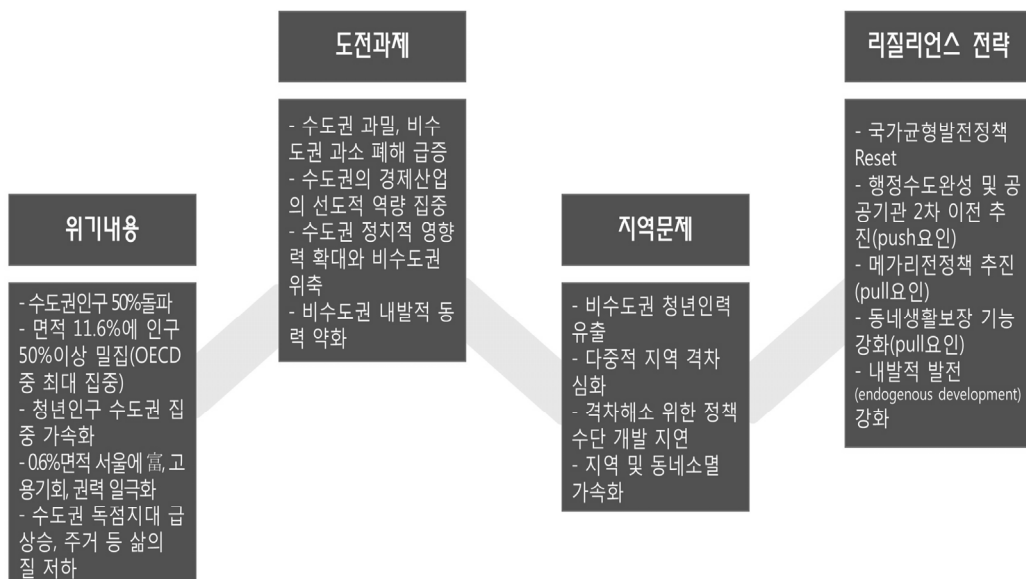
8

4. 4차산업혁명의 물결



9

5. 수도권 일극과 그 밖의 섬



10

II. 우리나라 지역구조 변화

1. 전환기 한국사회 과제

2. 지역구조 변화

3. 최근 공간정책 이슈

11

1. 전환기 한국사회 과제 1-1. 한국의 강점

- 산업화와 민주주의 동시 달성
- 높은 경제성장 : 식민지국가 중 유일하게 세계 30-50클럽 진입(GDP 1.6조, 11위)
- 과학기술과 혁신역량 높음(IT 강국)
- 촛불시민혁명의 높은 수준의 민주화 달성
- 기생충, BTS, K-POP 등 글로벌 소프트 파워
- 유연하고 근면하며 열정적인 민족적 저력

12

1. 전환기 한국사회 과제 1-2. 한국의 과제 : 20-50이 중요하다!

- 세계 최저 출산률과 급속한 인구 ONUS
- 급속한 고령화(20년부터 9년간 베이비부머 노인인구 진입)와 사회적 활력 감소
- 세계 최고의 자살률(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 등 낮은 행복감
- 소득격차 심화 및 사회적 양극화 확대
- 독점지대 추구형 사회경제체제 및 재벌체제로 사회적 활력 감소
- 높은 자영업 비중, 비정규직 비중, Precariat 등 다수 고용불안층 및 사각지대 노동자 재생산
- 사회적 희소가치의 수도권 집중으로 비수도권 쇠락(지역과 동네소멸시대)
- 과잉성장국가체제, 중앙집권체제로 자발성, 내발성보다는 의존성 만연
- Homo Oilicus : 세계 상위권의 화석원료 의존, OECD 최고의 대기오염 공기질
- 높은 대외의존도 국가로 Covid19에 따른 경제 Lock-down 장기화시 경제침체 우려

13

지역의 사회경제적 역량(地域力)과 지표들

- 역량(Competence)은 환경 속에서 주체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지역과 광역자치체는 스스로 역할을 수행하고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 · 혁신, 인구 · 노동, 소득 · 사회보장의 지역역량(地域力) 필요
- 참여정부 정책 시작한 2005년 전후와 현재(2018년)까지의 사회경제적 역량 비교
- 사회경제적 역량은 (1) 경제·혁신역량(5개 지표), (2) 인구·노동역량(8개 지표), (3) 소득·사회보장역량(6개 지표)의 3대 역량으로 구분하고, 총 19개 지표를 중심으로 시·도간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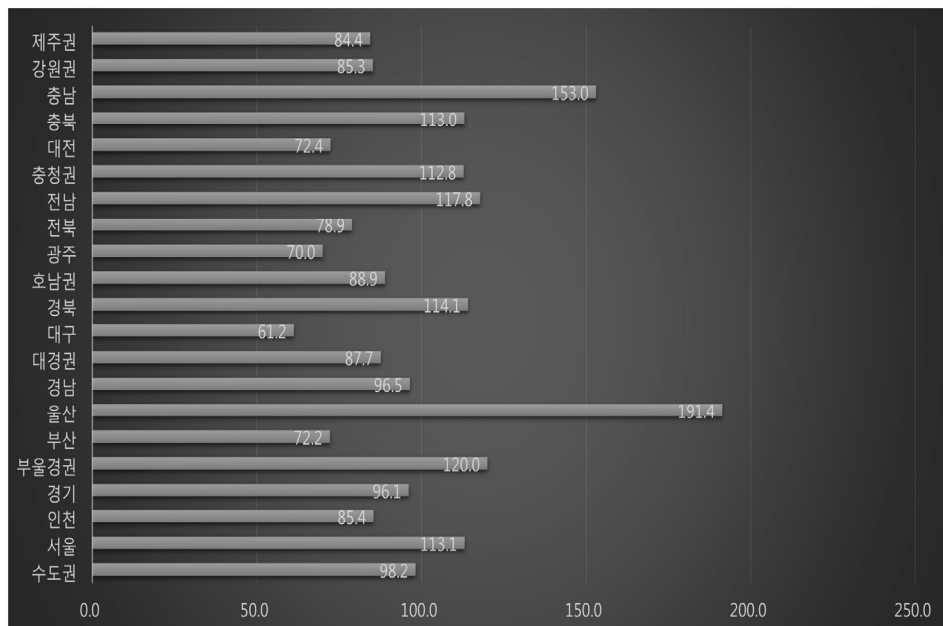
14

2. 지역구조 변화 2-1 경제 혁신역량 - 시도별 1인당 GRDP, GRDP성장률, 재정자립도

시·도	1인당GRDP(천원)				GRDP성장률(%)				재정자립도(%)			
	2005		2017년		1995-2005년		2006-2015년		2005년		2018년	
	1인GRDP	순위	1인GRDP	순위	성장률	순위	성장률	등위	자립도	순위	자립도	순위
서울	21,961	5	38,062	5	3.60	8	2.41	12	96.1	1	84.3	1
부산	14,097	13	24,293	14	3.20	12	2.20	15	73.4	5	58.7	5
대구	12,262	16	20,605	16	2.93	14	2.40	13	73.9	4	54.2	7
인천	17,108	9	28,757	9	3.49	10	3.22	5	70.0	6	67.0	3
광주	13,309	15	23,565	15	3.94	7	2.70	8	60.6	8	49.0	9
대전	13,907	14	24,361	13	4.03	6	2.63	10	75.0	3	54.4	6
울산	40,493	1	64,410	1	5.37	4	1.96	16	69.9	7	66.0	4
경기	17,485	8	32,347	8	6.82	3	4.71	4	76.2	2	69.9	2
강원	15,821	10	28,703	10	2.31	15	2.85	6	27.5	14	28.7	14
충북	18,573	7	38,034	6	4.10	5	4.80	2	31.7	12	37.4	12
충남	26,746	2	51,491	2	6.62	1	5.25	1	32.7	11	54.1	8
전북	14,626	12	26,569	12	3.10	13	2.31	14	25.1	15	27.9	15
전남	23,187	4	39,658	3	3.32	11	2.52	11	19.9	16	26.4	16
경북	23,316	3	38,406	4	6.94	2	2.75	7	29.6	13	33.3	13
경남	20,386	6	32,479	7	0.86	16	2.64	9	37.5	10	44.7	10
제주	15,226	11	28,420	11	3.55	9	4.74	3	39.3	9	42.5	11
평균	19281		33760		4.13		3.13		52.40		49.90	
EQ	3.30		3.13		10.03		2.68		4.83		3.19	
STDEV	7046.67		11361.87		1.93		1.08		24.12		16.87	
C.V.	0.37		0.34		0.47		0.35		0.46		0.34	

15

전국 평균 기준 1인당 GRDP 비중(%)



16

2. 지역구조 변화 2-1 경제·혁신역량

- 시도별 1인당 연구개발비, 10만명당 지식재산 등록 건수

시·도	1인당 연구개발비(천원)				10만명당 지식재산 등록 건수(건)			
	2011년		2017년		2005년		2018년	
	개발비	순위	개발비	순위	건수	순위	건수	순위
서울	3,484	2	3,755	4	718.9	1	888.2	1
부산	1,317	11	2,247	10	158.2	10	251.3	11
대구	1,473	9	2,466	7	216.3	5	308.5	6
인천	1,280	12	1,452	15	264.5	4	316.5	5
광주	2,276	3	3,053	6	165.0	9	259.0	10
대전	27,076	1	37,032	1	368.3	3	614.4	2
울산	1,219	15	2,434	8	80.3	14	201.6	15
경기	1,838	7	2,045	11	398.3	2	476.7	3
강원	1,228	14	1,794	14	80.6	13	240.5	12
충북	2,044	5	3,416	5	198.4	6	274.4	8
충남	1,796	8	2,028	12	175.2	8	365.5	4
전북	1,354	10	4,121	2	102.2	12	224.2	13
전남	996	16	1,443	16	73.7	15	173.3	16
경북	1,935	6	2,397	9	184.0	7	263.8	9
경남	2,173	4	3,796	3	123.5	11	208.3	14
제주	1,246	13	1,890	13	68.0	16	304.1	7
평균	3,296		4,710		211.0		335.7	
EQ	27.23		25.52		10.58		5.12	
STDEV	6370.75		8659.79		167.46		184.35	
C.V.	1.93		1.84		0.79		0.55	17

2. 지역구조 변화 2-2 인구·노동역량 - 시도별 인구증가율, 합계출산율

시·도	인구증가율				합계출산율			
	2000-2005년		2006-2018년		2005년		2018년	
	증가율	순위	증가율	순위	출산율	순위	출산율	순위
서울	-0.04	11	-0.19	14	0.932	15	0.761	16
부산	-0.77	14	-0.37	16	0.887	16	0.899	15
대구	0.06	9	-0.11	12	1.001	14	0.987	12
인천	0.70	4	1.07	3	1.075	13	1.006	10
광주	0.58	6	0.40	8	1.105	12	0.972	13
대전	1.12	2	0.24	9	1.107	11	0.952	14
울산	1.07	3	0.55	7	1.186	7	1.131	6
경기	3.21	1	1.69	1	1.183	9	1.002	11
강원	-0.42	12	0.20	10	1.188	6	1.067	8
충북	0.05	10	0.67	5	1.195	4	1.172	4
충남	0.49	8	0.79	4	1.267	3	1.376	1
전북	-1.01	15	-0.11	13	1.184	8	1.044	9
전남	-1.45	16	-0.24	15	1.290	2	1.240	2
경북	-0.65	13	0.06	11	1.173	10	1.167	5
경남	0.50	7	0.61	6	1.189	5	1.122	7
제주	0.62	5	1.65	2	1.310	1	1.220	3
평균	0.25		0.43		1.142		1.070	
EQ	-2.21		-4.61		1.477		1.808	
STDEV	1.09		0.63		0.120		0.150	
C.V.	4.30		1.46		0.105		0.140	18

2. 지역구조 변화 2-2. 인구·노동역량 - 시도별 고용률, 상용고비율, 청년고용률

시·도	고용률				상용고 비율				청년고용률			
	2005년		2018년		2005년		2018년		2005년		2018년	
	고용률	순위	고용률	순위	상용비	순위	상용비	순위	고용률	순위	고용률	순위
서울	60.5	6	59.6	10	46.8	14	66.0	11	49.9	2	46.1	2
부산	55.9	15	55.7	16	44.2	16	68.4	8	41.2	10	40.4	8
대구	58.3	10	58.2	15	49.2	12	65.8	12	42.6	8	36.3	15
인천	58.9	9	62.9	3	49.2	13	65.0	13	45.2	5	47.9	1
광주	56.0	14	59.4	11	53.5	7	68.4	9	37.9	15	39.4	10
대전	55.8	16	58.7	13	52.3	9	70.3	6	40.5	14	38.1	12
울산	59.0	8	59.0	12	65.5	1	71.0	4	43.3	7	40.4	9
경기	60.5	7	62.0	6	56.6	4	71.0	5	47.5	3	45.3	5
강원	57.6	12	60.7	9	54.2	6	66.3	10	40.7	12	42.4	6
충북	58.3	11	63.3	2	53.0	8	72.2	3	41.4	9	45.5	4
충남	62.7	4	62.7	4	57.7	3	76.8	1	44.7	6	40.9	7
전북	57.5	13	58.3	14	51.9	10	63.8	14	35.8	16	31.7	16
전남	64.2	2	62.4	5	51.1	11	61.9	15	41.2	11	36.6	14
경북	63.6	3	61.6	7	56.5	5	69.5	7	45.3	4	37.3	13
경남	61.0	5	61.4	8	59.7	2	72.6	2	40.6	13	38.7	11
제주	68.9	1	68.4	1	44.4	15	61.8	16	51.3	1	45.9	3
평균	59.9		60.9		52.9		68.2		43.1		40.8	
EQ	1.23		1.23		1.48		1.24		1.43		1.51	
STDEV	3.55		2.91		5.62		4.12		4.12		4.44	
C.V.	0.06		0.05		0.11		0.06		0.10		0.11	

19

2. 지역구조 변화 2-2. 인구·노동역량 - 시도별 경제활동참가율, 대졸이상 경제활동참가율, 전문관리직 취업자비

시·도	경제활동참가율				대졸이상 경제활동참가율				전문관리직 취업자비			
	2005년		2018년		2013년		2018년		2008년		2018년	
	참가율	순위	참가율	순위	참가율	순위	참가율	순위	취업비	순위	취업비	순위
서울	63.6	5	62.6	9	53.6	1	55.7	1	28.5	1	29.1	1
부산	58.4	15	58.1	16	39.9	8	46.1	7	19.8	6	22.2	6
대구	60.9	10	60.9	14	45.5	4	50.0	4	19.0	7	21.7	7
인천	61.7	8	65.7	2	37.4	9	40.7	11	19.9	5	18.7	8
광주	58.6	13	61.7	12	50.6	2	52.3	3	26.0	3	23.9	5
대전	58.4	16	61.3	13	49.8	3	54.2	2	27.5	2	26.4	2
울산	61.0	9	61.8	11	40.6	6	42.5	9	15.6	9	16.5	10
경기	62.9	6	64.4	4	45.5	5	48.4	6	23.3	4	25.0	3
강원	58.6	14	62.5	10	34.2	13	36.5	15	16.3	8	13.8	14
충북	59.7	11	64.9	3	34.4	12	38.2	13	13.1	14	15.2	12
충남	64.4	4	64.4	5	33.4	15	48.4	5	13.8	12	24.3	4
전북	58.9	12	59.9	15	36.3	11	40.4	12	13.6	13	16.0	11
전남	65.7	2	64.2	6	29.6	16	32.7	16	12.3	15	14.1	13
경북	65.2	3	64.2	7	34.1	14	36.7	14	12.0	16	11.9	16
경남	62.6	7	63.3	8	36.6	10	41.0	10	14.9	10	17.1	9
제주	70.6	1	69.8	1	40.4	7	46.1	8	14.2	11	13.1	15
평균	62.0		63.1		40.1		44.4		18.1		19.3	
EQ	1.21		1.20		1.81		1.71		2.38		2.45	
STDEV	3.40		2.69		7.01		6.82		5.55		5.36	
C.V.	0.05		0.04		0.17		0.15		0.31		0.28	

20

2. 지역구조 변화 2-3. 소득·사회보장역량

- 시도별 1인당 개인소득, 기초생활수급자비, 표준화사망비

시·도	1인당 개인소득(천원)				기초생활수급자비(%)				표준화사망비(%)			
	2005년		2017년		2005년		2017년		2005년		2017년	
	소득	순위	소득	순위	수급자비	순위*	수급자비	순위*	사망비	순위*	사망비	순위*
서울	13,453	2	21,429	1	1.9	2	3.0	4	435.7	1	283.3	1
부산	10,581	6	18,332	5	3.5	7	4.6	14	548.1	12	350.8	14
대구	10,482	8	17,568	7	3.6	9	4.5	12	518.5	7	332.7	7
인천	10,021	13	17,550	8	2.5	4	3.7	8	515.4	6	339.4	9
광주	10,499	7	17,343	10	4.2	13	5.0	15	495.6	5	338.0	8
대전	10,697	5	18,454	4	3.0	5	3.8	9	477.4	3	316.2	3
울산	13,555	1	19,912	2	1.8	1	2.0	1	549.2	13	355.3	16
경기	11,181	3	18,580	3	1.9	3	2.3	2	487.3	4	306.8	2
강원	9,681	15	16,583	14	4.1	12	4.3	11	549.4	14	347.9	10
충북	10,286	11	17,030	11	3.9	9	3.7	7	550.4	15	352.6	15
충남	10,171	12	17,613	6	4.1	11	2.3	3	533.5	9	331.3	6
전북	9,840	14	16,848	13	6.3	15	5.5	16	530.7	8	330.0	5
전남	9,495	16	15,938	16	6.8	16	4.5	13	546.2	10	348.3	11
경북	10,332	10	16,504	15	4.7	14	4.0	10	549	12	348.5	12
경남	10,425	9	16,864	12	3.4	6	3.3	5	566	16	349.7	13
제주	10,746	4	17,464	9	4.0	10	3.5	6	472.6	2	326.1	4
평균	10,715		17,751		3.7		3.8		520.3		334.80	
EQ	1.4		1.3		3.82		2.78		1.3		1.25	
STDEV	1166.6		1375.6		1.42		1.01		36.72		19.47	
C.V.	0.11		0.08		0.38		0.27		0.07		0.06	

* 순위는 역순

21

2. 지역구조 변화 2-3. 소득·사회보장역량

- 시도별 천명당 의사수, 임금근로자 중 건강보험가입률과 고용보험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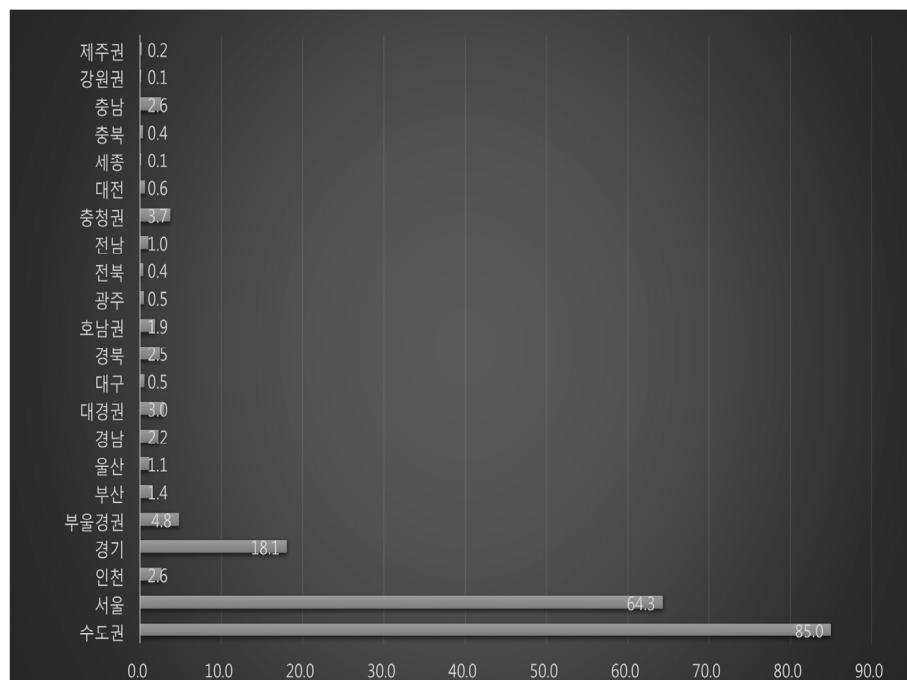
시·도	천명당 의사수(명)				건강보험가입률(%)				고용보험가입률(%)			
	2007년		2018년		2014년		2017년		2014년		2017년	
	의사수	순위	의사수	순위	가입률	순위	가입률	순위	가입률	순위	가입률	순위
서울	2.92	1	4.24	1	71.2	8	74.8	7	67.7	10	71.6	9
부산	2.30	5	3.27	5	67.8	14	71.0	13	63.8	14	66.5	13
대구	2.44	4	3.31	4	64.0	15	69.8	15	59.7	15	66.4	14
인천	1.69	13	2.40	10	68.4	12	71.7	12	66.6	11	69.9	10
광주	2.64	2	3.58	2	71.8	7	72.7	11	68.5	6	69.3	11
대전	2.45	3	3.49	3	70.6	11	75.9	6	68.1	9	73.5	6
울산	1.70	11	2.28	14	78.2	2	77.0	3	77.2	1	75.2	3
경기	1.69	14	2.30	13	74.0	5	76.9	4	71.1	5	74.1	4
강원	2.00	7	2.47	7	71.0	9	73.4	10	66.1	12	69.3	12
충북	1.73	10	2.31	12	70.7	10	74.8	8	68.5	7	71.8	8
충남	1.78	8	1.90	16	77.3	3	80.9	1	73.2	3	76.9	1
전북	2.16	6	2.97	6	72.0	6	74.5	9	68.2	8	72.0	7
전남	1.74	9	2.46	8	68.0	13	68.3	16	64.3	13	65.4	16
경북	1.56	16	2.06	15	74.4	4	76.3	5	71.7	4	73.7	5
경남	1.66	15	2.35	11	79.3	1	77.8	2	77.0	2	75.7	2
제주	1.70	12	2.45	9	61.4	16	69.9	14	58.0	16	66.2	15
평균	2.0		2.7		71.3		74.1		68.1		71.1	
EQ	1.87		2.23		1.29		1.18		1.33		1.18	
STDEV	0.42		0.66		4.82		3.40		5.31		3.67	
C.V.	0.21		0.24		0.07		0.05		0.08		0.05	

22

※ 2006~2018년 광역권별 1,000대기업 기업수 및 매출액 비중 변화(%)

	2006년		2010년		2018년	
	기업수(개)	매출액(백만원)	기업수(개)	매출액(백만원)	기업수(개)	매출액(백만원)
전국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70.9	83.2	71.0	82.5	75.3	86.3
서울	53.7	65.8	52.7	64.3	54.3	64.0
인천	3.1	3.0	3.1	2.2	3.4	2.6
경기	14.1	14.4	15.2	15.9	17.6	19.7
부울경권	12.0	7.1	11.3	7.3	9.0	4.8
부산	4.2	1.5	4.3	1.5	3.4	1.4
울산	2.5	2.7	2.4	2.8	2.4	1.1
경남	5.3	2.9	4.6	3.0	3.2	2.2
대경권	5.8	4.1	6.0	4.6	4.3	3.0
대구	1.7	0.6	1.7	0.5	1.8	0.5
경북	4.1	3.6	4.3	4.1	2.5	2.5
호남권	4.4	1.9	4.1	1.7	4.4	1.9
광주	1.8	0.7	1.0	0.4	1.3	0.5
전북	1.2	0.4	1.2	0.4	1.2	0.4
전남	1.4	0.8	1.9	0.9	1.9	1.0
충청권	6.2	3.4	7.1	3.8	6.0	3.7
대전	1.3	0.6	1.4	0.6	1.3	0.6
세종	0.0	0.0	0.0	0.0	0.5	0.1
충북	1.6	0.4	2.0	0.4	1.3	0.4
충남	3.3	2.4	3.7	2.7	2.9	2.6
강원권	0.6	0.2	0.5	0.1	0.5	0.1
제주권	0.1	0.0	0.0	0.0	0.5	0.2

※ 2018년 광역권별 1,000대기업 매출액 비중(%)



2. 지역구조 변화 2-4 시·도별 종합

- 경제혁신역량 상위지역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대전·충남의 충청권이며, 하위권은 부산, 강원, 전남북 지역으로 나타남
- 인구노동역량 상위지역은 서울·경기의 수도권, 충남·북, 제주이며, 하위지역은 대구, 대전, 전남북지역으로 나타남
- 소득·사회보장역량 상위지역은 서울·경기의 수도권, 대전·충남의 충청권, 경남이며, 하위지역은 부산, 대구, 전남지역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서울·경기의 수도권, 대전·충남의 충청권, 경남은 지역역량의 상위지역이며, 부산, 대구, 강원, 전남북지역은 하위지역으로 나타남

25

2. 지역구조 변화 2-4 시·도별 종합

시·도별 사회경제적 역량 종합

역량	지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제 · 혁신역량	1인당 GDP	상	하	하	중	하	하	상	중	중	중	상	하	상	상	중	중
	GDP 성장률	하	하	하	상	중	중	하	상	중	상	하	중	중	하	하	상
	재정자립도	상	상	중	상	중	중	상	상	하	하	중	하	하	하	중	하
	1인당 R&D비	상	중	중	하	중	상	중	중	하	상	하	상	하	중	상	하
	지식재산권	상	하	중	상	중	상	하	상	하	하	상	하	하	중	하	중
	종합	상	하	중	상	중	상	중	상	하	중	상	하	하	중	중	중
인구 노동역량	인구증가율	하	하	하	상	중	중	중	상	중	상	하	하	중	중	상	상
	합계출산률	하	하	하	상	중	하	중	중	중	상	상	중	상	상	중	상
	고용률	중	하	하	상	중	하	하	중	중	상	상	하	상	중	중	상
	상용고용률	중	중	하	하	중	중	상	상	중	상	상	하	하	중	상	하
	청년고용률	상	중	하	상	중	하	중	상	중	상	중	하	하	하	중	상
	경제활동참가율	중	하	하	상	하	하	중	상	중	상	상	하	중	중	중	상
소득 · 사회보장역량	대졸이상 참가비	상	중	상	중	상	상	중	상	하	하	상	하	하	하	중	중
	전문관리자비	상	중	중	중	상	상	중	상	하	하	상	중	하	하	중	하
	종합	상	중	하	상	중	하	중	상	중	상	하	하	중	중	상	상
	1인당 개인소득	상	상	중	중	중	상	상	상	하	중	중	하	하	하	하	중
	수급자비	상	하	하	중	하	중	상	상	중	중	상	하	하	하	상	상
	표준화 사망비	상	하	중	중	중	상	하	상	중	하	중	상	중	하	하	상
전체	천명당 의사수	상	상	상	중	상	상	하	하	중	하	하	중	중	하	중	중
	간호사인원	중	하	하	하	중	중	상	상	중	중	상	중	하	상	상	하
	고용보험 가입률	중	하	하	중	중	중	상	상	하	중	상	중	하	상	상	하
	종합	상	하	하	중	중	상	상	상	중	중	상	중	하	상	상	중
	종합	상	하	하	중	중	상	상	하	중	상	하	하	중	상	상	중

주1 : 최근 기준년도 기준으로 상은 1-5위, 중은 6-11위, 하는 12-16위

주2 : ↑은 기간 중 순위 상승, -는 기간 중 순위 유지, ↓은 기간 중 순위 하락

주3 : 수급자비와 표준화 사망비는 역순

26

3. 최근 지역구조 주요 이슈

- 1) 수도권 인구 50% 돌파
- 2) 수도권 부동산 문제
- 3) 행정수도 이전
- 4) 2차 공공기관 이전
- 5) 광역권 통합 시도 - 부울경, 대구-경북, 대전-세종, 광주-전남
- 6) Mega (City) Region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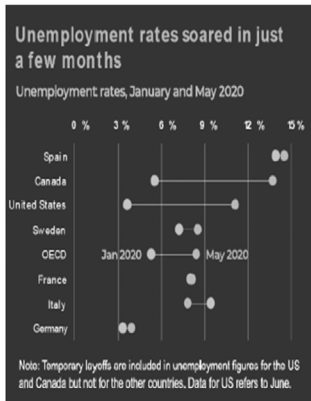
27

III. 코로나19시대 사회와 지역텍스트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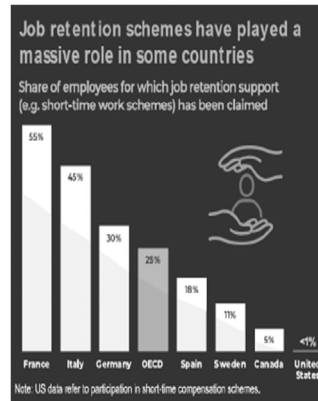
1.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2. 코로나19와 재난취약계층
3. 코로나19시대 Spatial Divide
4. 재난과 지역 리질리언스

28

1.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1-1. OECD국가 노동영향(1)



- 2020년 1월 대비 코로나19가 진행된 3월까지 실업률 3% -> 9%로 3배 상승



- 코로나19 동안 다수국가에서 고용유지사업이 다수 노동자들의 일자리 지속에 큰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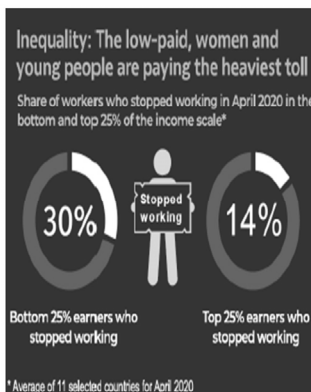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때보다 코로나19 3개월간 총 노동시간이 곤두박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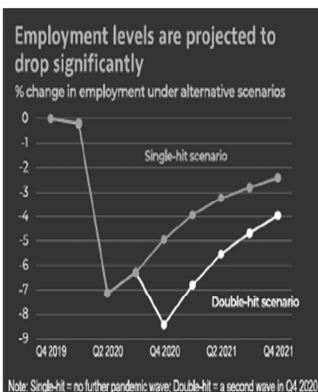
자료 : OECD, 2020, OECD Employment Outlook - worker security and the covid-19 crisis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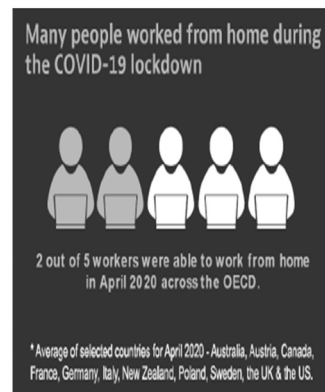
1.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1-1. OECD국가 노동영향(2)



- 임금상위25%는 14% 실직, 임금하위 25%는 30% 실직
- 저임금, 여성, 청년 실직으로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자



- 2차 대유행이 진행된다면 1차 대유행때보다 훨씬 고용감소 폭 크고 회복 속도도 늦게 진행될 것임



- 코로나19 직장폐쇄로 전체 노동자 2/5이상 집에서 근무

자료 : OECD, 2020, OECD Employment Outlook - worker security and the covid-19 crisis

30

1.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1-2. 국내 사회경제적 영향(1)

구 분	Before Corona	With & After Corona	국내 대응 및 전망
보건의료	간헐적 감염병 공공의료·방역 낮은 관심 치료중심	감염병 Global Pandemic 공공의료·방역체계 관심 증대 예방중심	K방역, 백신/치료제 공공보건의료체계 재편 예방돌봄의 디지털화
국가행정	작은 정부	큰 정부	재난 및 위기관리 정부 중요
돌봄, 복지	장애인 등 시설보호 복지기관 서비스 제공 범주형 복지	지역사회보호 강조 대면서비스 제한 재난긴급지원금 현금지원 확대	개방운영 off/on/AI 서비스융합화 기본소득 및 급여 재편 논의
경제산업	대면산업 밀집사업 확대 유인사업 지속 디지털산업 통상발전 AI, Big Data산업 통상 관심 Global Sourcing	비대면산업 증가 밀집사업 사양화 생산/서비스현장 무인자동화 확대 디지털산업 폭발적 발전 AI, Big Data산업 관심 폭증 Local Sourcing	비대면산업 확대 온라인/디지털사업 확산 무인화/자동화 영역 확대 디지털 뉴딜 IT, 장주기 산업 확대 Reshoring 등 GVC 재편

31

1.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1-2. 국내 사회경제적 영향(2)

구 분	Before Corona	With & After Corona	국내 대응 및 전망
국제교역	자유무역 글로벌 경제협력 강조	보호무역 자국 이익중심	무역체제 재편 제한적 협력 확대
근무방식	회사근무	재택/원격 근무	재택/원격/AI근무 제도 개선
노동	낮은 고용보호망 비정규직 낮은 처우	고용보장사각지대 재조명 비정규직 생존 위기	전국민 고용보장 확대 관심 특고, 플랫폼 노동자 대책
교육	대면교육 중심 교실중심 격차	원격교육 전면화 디지털 접근성 격차	디지털교육 확대 포용적 디지털교육환경 조성
사회·가치	대면관계 중심 사회 관계 피로도 증가 사회예측성 가능 불평등 진행 혐오, 배척, 배제 진행	비대면관계 확대 Corona Blue, Isolation 불확실성 증대 불평등 심화 혐오, 배척, 배제 심화	언택트사회관계, 랜선문화 확대 상담과 힐링체제 확대 필요 정확한 정보전달체계 중요 격차해소 제도화 압박 이타, 연대, 공동체성 통한 회복

32

2. 코로나19와 재난 취약계층 – Robert Reich의 covid19와 미국의 4계급

- 코로나19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빛을 비추지 않는다!

(2020. 4. 26. The Guardian, "Covid-19 pandemic shines a light on a new kind of class divide and its inequalities")

- ① The Remotes : 전문/경영/기술직(35%). 장시간 근무, 전자문서 스캔, 이전과 동일임금
- ② The Essentials : 간호사/보육사/배달관련종사자/약사/경찰관/소방관/군인(30%). 사회필수인. 취약성과 동시에 위험수당 수혜.
- ③ The Unpaid : 급여를 못 받은 계층(25%). 휴직 및 유급휴가 소진자. 미국 성인 43% 이에 해당되는 가족 있음. 생계 압박 받음. 사용자 제공 사회보험 배제.
- ④ The Forgotten : 수감자/노숙자/요양시설보호자/이주노동자. 고립. 감염 등 위협 노출

33

2. 코로나19와 재난 취약계층 – John C. Mutter의 재난불평등 (The Disaster Profiteers, 2015)

- '아이티 지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뉴올리언스 허리케인 카트리나', '미얀마 사이클론' 등을 1차적으로 자연과학의 관점, 2차적으로 사회과학의 관점으로 비교분석, 자연재해의 자연현상이 어떻게 사회 문제가 되는지 파악
- 재난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 재난 피해의 규모는 불평등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 재난 피해의 크기는 재난의 크기와 무관하며 사회 구조와 격차, 기존에 있던 부조리, 불평등이 그 크기를 결정
- 재난의 3단계 : 사건 이전 → 사건 자체 → 사건 이후
- 재난이 끝난 후 빈곤층 희생을 통해 엘리트들을 배 불리게 됨
- 자본에서 불평등 감소 유일시기는 재앙 발생시기이고 이후 자본이 돌아오면서 다시 불평등 극심해짐(Thomas Piketti, 21C 자본)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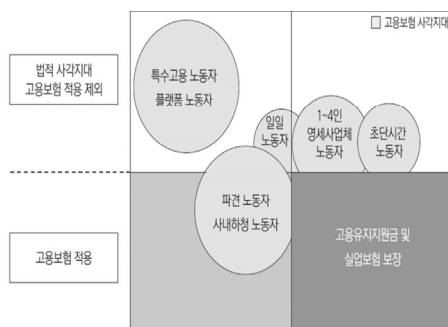
2. 코로나19와 재난 취약계층 – 우리사회 코로나19 취약계층

- 전 국민이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불안에 노출, 생활 불편 경험
- 돌봄 필요 계층 : 노인, 장애인, 영유아, 아동 등. 특히 '잊혀진' 시설보호대상자
- 돌봄 제공 계층 : 의료인, 간병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생활보호사, 교사 등
- 감염 리스크 직업군 : 의사 등 > 승무원/버스기사/교사/약사 등 > 식당종사자/택배기사 등 > 언택트직업(The New York Times 2020. 3. 15)
- 컨택트직업 : 택배기사 및 관련 업체, 방문판매 종사자, 종교기관
- 교육 : 2020년 1학기 전체 초중고 및 대학 전체 학생 원격 및 불편한 대면수업 진행
- 대구/경북 : 신천지로 인한 감염 대 확산
- 산업 : 도소매음식숙박업, 관광, 문화, 운송, 항공 등
- 직종 : 고용취약계층

35

2. 코로나19와 재난 취약계층 – 코로나19 사회보호 사각지대 [정홍준, 2020]

고용형태별 고용보험의 법적, 실질적 사각지대



고용대책에 취약한 노동자 규모 (단위: 만 명)

고용 사각지대 노동자 ¹⁾	총 규모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 규모 ²⁾
① 초단시간 노동자	93.2	91.1
② 일일(단기) 노동자	74.8	70.5
③ 1-4인 규모의 영세 사업체 노동자	378.3	226.6
④ 파견·용역 노동자	165.5	-
⑤ 특수고용 노동자	220.9	199.9
⑥ 합계	932.7	588.1
⑦ 중복을 제외한 실제 고용 취약계층 ³⁾	727.5	458.7

주 : 1) 20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고용형태 경시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자료 등을 활용함.
2) 초단시간, 일일 노동, 5인 미만 영세업체, 파견·용역 특수노동의 중복비율은 22%를 적용함.
3) 고용보험 미가입 비율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함.

고용취약계층은 누구인가?

- 초단시간(93.2만, 3.4%), 일일단기(74.8만, 2.8%), 소규모 영세사업체(378.3만, 13.9%), 특수고용(220.9만, 8.1%), 파견·용역노동자 728만명(165.5만, 6.1%), 전체 취업자 2,715.4만명(2019.12. 현재) 중 총 728만명(26.8%)
- 이중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459만명(16.9%)
- 이들은 경제위기 하 무급휴직과 권고사직 등으로 실직되면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 노출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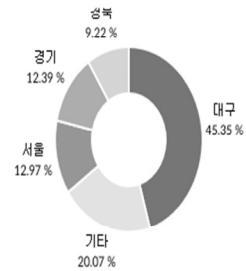
- 사각지대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대책 수립 필요
- 1인자영업자 분류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필요
- 호출·파견·용역 등 간접고용노동자 대책과 원청의 공동책임 제도화
- 대기업 및 공공부문 노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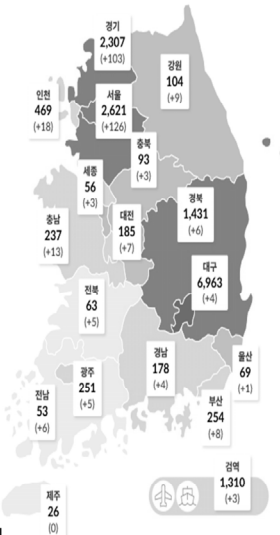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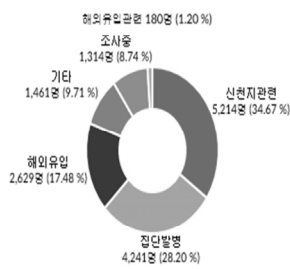
3. 코로나19와 Spatial Divide 3-1. 대구경북 코로나19

() 숫자는 전일대비 증감수치

□ 확진환자 지역별 비율 (8.1600시 기준)



□ 감염경로별 확진자 비율 (8.15.00시 기준)

자료: <http://ncov.mohw.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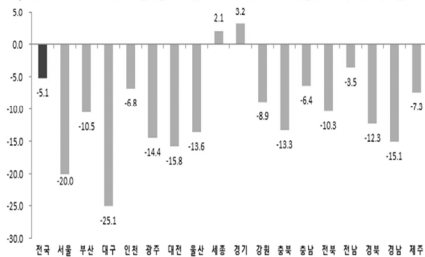
- 신천지사태로 2월 이후 대구경북을 순식간에 재난위기로 빠뜨림
- 재난citizenship으로 4.15 총선도 무 확진자로 안전하게 치른 나라
- 反윤리, 反상식 행동은 수도권권을 다시 재난위기 가능지역 전환시킴
- 인구 과반의 수도권 감염 확대는 전국적 확산으로 국가위기로 직결됨
- 공공성, 윤리성에 반하는 정치행위가 코로나19 안전에 최대 도전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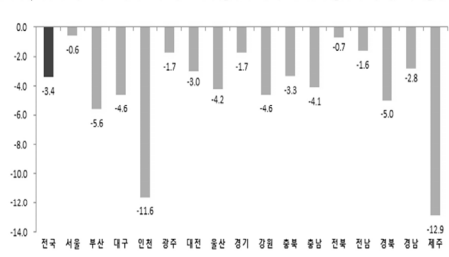
3. 코로나19와 Spatial Divide 3-2. 지역경제동향

자료: 통계청, 2020. 8. 19 2020년 2/4분기 지역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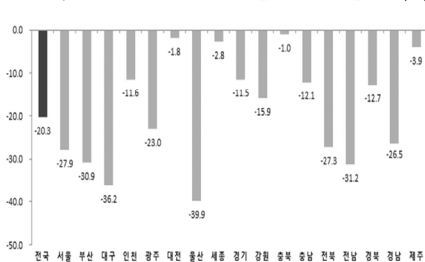
2020년 2/4분기 시도별 광공업생산지수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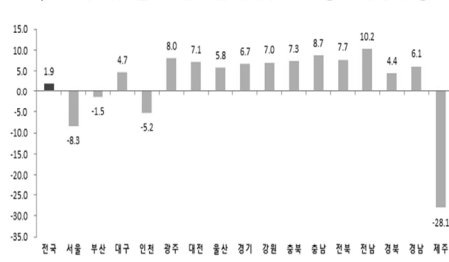
2020년 2/4분기 시도별 서비스업생산지수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



2020년 2/4분기 시도별 수출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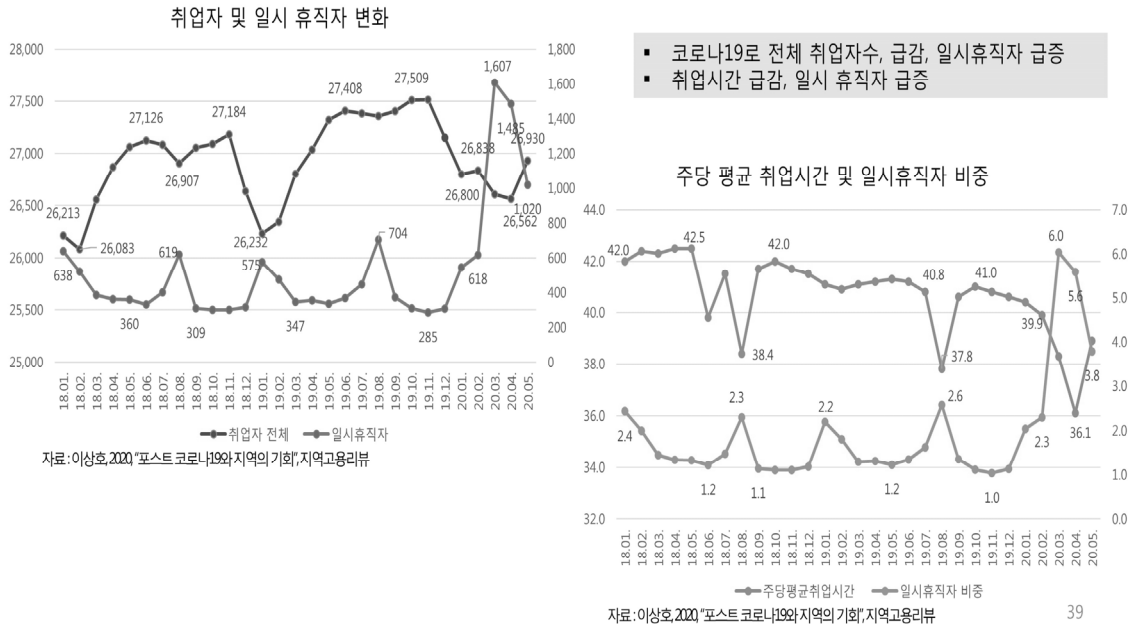
2020년 2/4분기 시도별 소매판매액지수 전년동분기대비 증감률(%)



- 생산, 수출 등 주요경제지표 경기 상대적 양호 속 대구, 울산, 부산, 경남, 서울, 제주 등의 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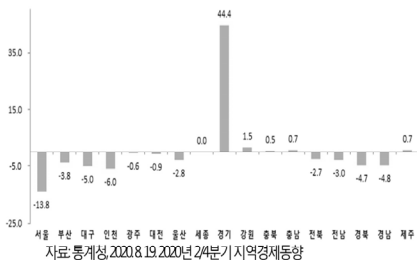
38

3. 코로나19와 Spatial Divide 3-3. 인구 및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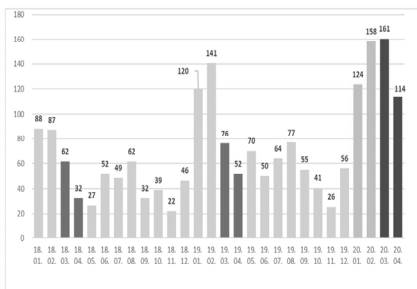


3. 코로나19와 Spatial Divide 3-3. 인구 및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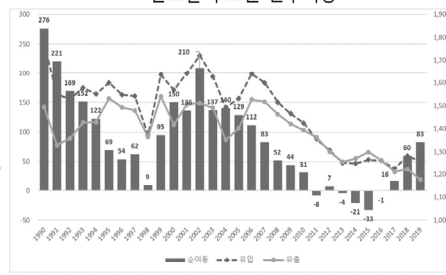
2020년 2/4분기 시도별 인구 순이동(천 명)



월별 수도권 인구유출입 추이 : '18. 1월 ~ '20. 4월



연도별 수도권 인구이동



- 공공기관, 세종시 이전 시기 수도권 순유출 증가. 이후 순유입 증가
- 코로나19시기 수도권 인구 집중 증가
-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경기 집중

2020년 3~4월 수도권 순유입 전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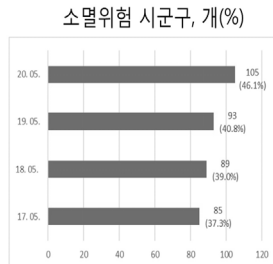
전출지	전입지		
	수도권 전체	서울	경기
전체	27,446	-10,521	42,309
서울	22,413	0	22,670
부산	2,856	1,477	1,249
대구	2,731	1,302	1,371
인천	4,767	257	4,510
광주	1,725	833	788
대전	1,940	912	1,026
울산	1,102	519	537
세종	357	162	233
경기	-27,180	-22,670	0
강원	1,498	396	1,240
충북	1,750	743	1,085
충남	2,752	740	2,081
전북	2,111	955	1,055
전남	1,902	812	985
경북	3,463	1,513	1,878
경남	2,983	1,440	1,358
제주	276	88	243

자료: 이상호, 2020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지역고용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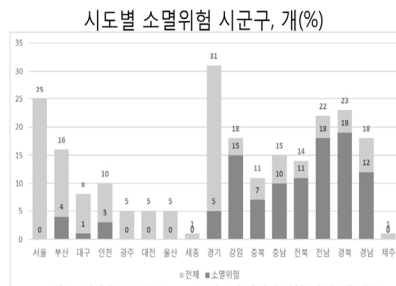
3. 코로나19와 Spatial Divide 3-3. 인구 및 고용

자료: 통계청, 2020. 8. 19. 2020년 2/4분기 지역경제동향

이상호, 2020,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지역고용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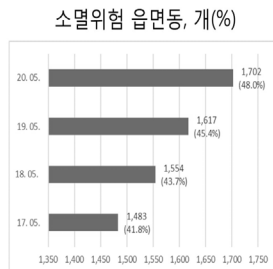


자료: 이상호, 2020,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지역고용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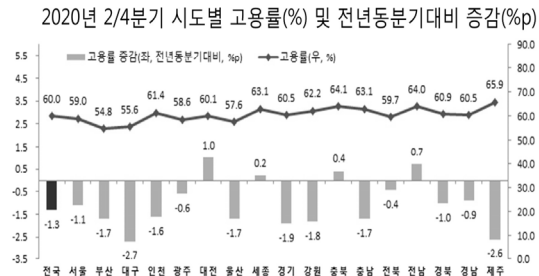


자료: 이상호, 2020,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지역고용리뷰

- 코로나19 이후 시군구 및 읍면동의 소멸 위험도 급증
- 대전, 세종, 전남 제외 전반적인 고용률 하락, 특히 대구, 제주, 부산, 인천의 타격이 큼
- 제주는 연택시대 관광 등의 영향
- 대구는 최악의 감염피해지역으로 고용률 역시 가장 큰 폭으로 감소
- 재난의 지역적 차별화 경향 반영



자료: 이상호, 2020,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지역고용리뷰



자료: 통계청, 2020.8.19. 2020년 2/4분기 지역경제동향

41

4. 재난과 지역 리질리언스 4-1. 재난의 의미

- Disaster : 공동체나 사회가 자원을 이용하는 능력을 초과하는 광범위한 인적, 물질적, 경제적 또는 환경적 손실을 야기하는 단기간 또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심각한 붕괴 (Ababa, 2002)
- 유형 : 자연 재난과 인위적 재난
- 현대적 재난의 특성(송영창, 2012)
 - ① 위험요인의 불확실성, ② 원인과 발생 양상의 복잡성, ③ 원인과 결과의 상호작용성
- 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가 필요함
-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단계별 접근

42

4. 재난과 지역 리질리언스 4-2. 리질리언스

● Resilience : 회복력, 회복탄력성

● 사용 영역

- ① 물리학 : 늘어나거나 변형된 후 형태를 회복할 수 있는 재료의 물리적 특성(탄성)
- ② 심리학 : 우울증, 질병, 불행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정신능력(특히 발달심리학)
- ③ 시스템학 : 시스템이 어려움에서 복구할 수 있는 능력(적응, 유연성)
- ④ 기타 : 생태학, 경제 및 비즈니스, 산업 및 조직 안전, 네트워크 회복망, 도시 및 커뮤니티, 재난연구 등으로 관심 확대

● 개념적 요소 : 소요 뒤 equilibrium, 소요의 흡수 및 구조/기능/정체성 유지 속성,
소요의 복구와 혁신 역량

43

4. 재난과 지역 리질리언스 4-2. 리질리언스

NRC(National Research Council)의 Community Resilience

community environment	하위 요인
물리적/건조적	기존 설계된 인프라나 구조물
자연	자연자원, 생태환경 요인, 폭풍, 홍수 등
거버넌스/리더십	거버넌스, 리더십, 권력과 권한
사회적/웰빙적	사회적 관계, 소통, 공식 및 비공식 제도, 주민역량 등
인적	기술, 지식, 노동, 건강 등
재정적/경제적	재원의 다양성과 수준, 투자 및 부, 금융시스템 등

National Research Council, 2017, Measures of Community Resilience for Local Decision Makers

GUIDING PRINCIPLES

TALENT DRIVES SUC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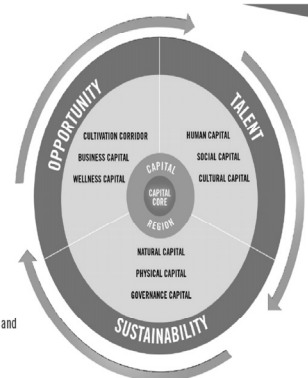
- Career-focused education and training pipelines
- Leadership, diversity and civility
- "Quality of place" that retains and attracts top talent

CAPTURE HIGH-VALUE OPPORTUN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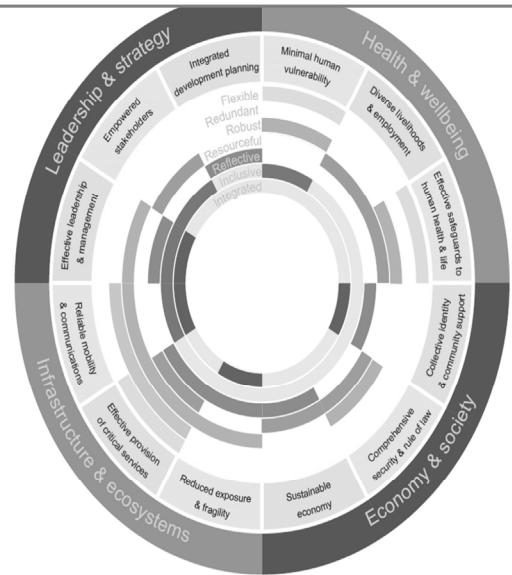
- Target sectors developed through holistic strategies
- Wellness as an economic model with social benefit
- I-35 Corridor development

GROWTH MUST BE SUSTAINABLE

- Regional collaboration, consolidation and smart planning to maximize fiscal and human resources
- Competitive infrastructure and natural resources protected and enhanced for future generations
- Multi-modal connectivity
- Central Iowa is only as strong as its core



4. 재난과 지역 리질리언스 4-2. 리질리언스



The Rockefeller Foundation ARUP 회복력의 구조 (범주, 목표)

범주	초점	목표
건강과 웰빙	사람	인간 취약성 경감, 다양한 생계 및 고용, 건강과 생활의 효과적 보호
경제와 사회	조직	지속가능 경제, 포괄적 보장과 법 통제, 집합적 정체성과 공동체 지원
인프라와 생태체계	장소	신뢰할만한 이동수단과 커뮤니케이션, 핵심서비스의 효과적 제공, 노출과 취약성 경감
리더십과 전략	지식	효과적인 리더십과 관리, 이해관계자 임파워먼트, 통합적 발전계획

The Rockefeller Foundation ARUP(2015)

45

4. 재난과 지역 리질리언스 4-3. 리질리언스와 사회자본

- **Resilient Cities** (ICLEI, 2015)
 - 도시가 어떠한 충격이나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핵심적인 기능과 구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충격과 스트레스를 흡수하고 회복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속적인 변화에 대해 적응하고 변형 할 수 있는 도시
 - 회복력 증진은 위험요인(hazard risk)을 평가·규명하고 노출과 취약성을 감소시키며, 저항성, 적응력, 위기 대응력을 증가시키는 활동

46

4. 재난과 지역 리질리언스 4-3. 리질리언스와 사회자본

● 충격과 스트레스

- ① 충격(Shock) : 지진, 홍수, 가뭄, 화재 등과 같이 도시 시스템에 부담을 주는 급성적 사건
- ② 스트레스(Stress) : 변화가 진적으로 진행되며 도시 공동체와 시스템의 대응 능력 저해 자극

● 주요 스트레스

- ① 사회적 스트레스: 실업, 도시 빈곤, 이민/난민, 직업 교육/평생 교육의 부재
- ② 문화적 스트레스: 폭력, 마약, 범죄 등 장소에 대한 문화적 낙인
- ③ 사회-기술적 스트레스: 디지털 소외, 특히 지식산업, 서비스경제의 신 직업 대비 양질 교육 부재
- ④ 생태적 스트레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도시 인프라에 대한 홍수, 침수, 범람 피해
- ⑤ 사회-생태적 스트레스: 오염으로 인한 건강 이슈, 도시 생태계의 빈곤화 및 도시 녹지예의 한정된 접근

● Urban Resilience 증진 위한 자본

- ① 인적 자본 : People Resilience, Social Resilience → 공동체 연대감 중요
- ② 기술적 자본 : 에너지, 주거, 식량, 도시인프라 등 도시민 기본 삶 영위에 핵심적인 서비스 제공
- ③ 자연생태적 자본 : 숲, 녹지, 강, 하천 등 도시 생태계 강화, 도시 생태경관
- ④ 제도적 자본 : 기관, 파트너십, 법령과 규칙 등 good governance

47

4. 재난과 지역 리질리언스 4-3. 리질리언스와 사회자본

● 스트레스/재난 회복 대표 도시사례

- 인도 수라트 : 수년간 홍수, 사회적 불안, 폐렴흑사병 등에 대해 기반시설 확충, 공공위생 인식개선, 노동자들의 복지향상, 질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남아공 케이프 타운 : Apartheid 등으로 공간분리, 이동 단절 경험. 주민참여를 통한 통합적 도시모델 운영. 교통공사 발족을 통해 주민 간 결합 및 통합 증진.

● covid19시대 시민자본 회복전략 (OECD, 2020c, Coronavirus : Cities Policy Response)

- covid19시대 도시정책에서 시민자본, 자원봉사, 공동체 연대가 큰 역할 수행
- ① 코로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소통 강화, ② 직장 내 실천 및 출퇴근 패턴 조정, ③ 사회적 거리두기 및 격리 실천, ④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선별 지원, ⑤ 상수도, 쓰레기 수거 등 공공서비스의 공급, ⑥ 경제와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

● 재난의 모든 단계에서 시민자본 중요

- 재난관리의 각 단계에 따라 자원봉사는 중요한 역할 : 예방, 대비, 대응, 복구
- 그동안은 대응과 복구 위주였으나 예방과 대비의 자원봉사도 중요
- 각 단계별 결과는 모든 단계 간 Feedback 연계 구조
- 따라서 재난과 위험관리 전반의 연결 속에 자원봉사 진행되어야 함
- Resilience Model은 Comprehensive Emergency Management 대응에 유의미함

48

Ⅳ. 한국형 뉴딜과 국가균형발전의 과제

1. 한국형 뉴딜의 의미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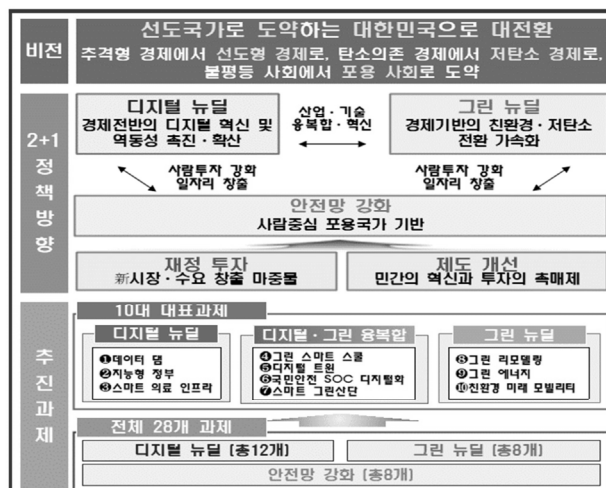
2. 한국형 뉴딜과 국가균형발전 과제

49

1. 한국형 뉴딜의 의미와 과제

한국판 뉴딜의 구조

자료 : 정부관계부처합동(2020. 7. 14)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 변화상

D·N·A(Data·Network·AI) 기반을 바탕으로 혁신과 역동성이 확산되는 디지털 중심지로서,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주도하는 '똑똑한 나라' 탄소중립(Net-zero)을 향한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통해, 사람·환경·성장이 조화를 이루며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오린선도 국가' 튼튼한 고용·사회 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가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켜주고 실패와 좌절에서 다시 일어서 주는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

50

1. 한국형 뉴딜의 의미와 과제

한국형 뉴딜의 의미

■ 재난 후 성장 비전 수립 ■ 언택산업 확대에 따른 디지털 등 핵심대응전략 수립 ■ 기후변화 위기 대응 그린뉴딜의 전략 수립 ■ 디지털·그린의 융복합 사업 제시 ■ 재난대응 사회안전망 확충

한국형 뉴딜의 과제

■ 휴먼뉴딜 중심보다는 산업재건 중심. 루즈벨트 뉴딜 '사람 중심'은?
■ 감염병 질환 재난 충격 및 스트레스 특성 반영 미흡
■ 다양한 Black Swan 대응의 인프라 구축 등 리질리언스 전략 필요
■ decent job의 실질적 창출효과 미흡
■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분석, 진단을 통한 대응전략 마련 미흡
■ 취업위기의 청년층, 중장년 세대 맞춤형 전략 마련 필요
■ 산업 및 경제의 생태환경 제시 미흡
■ 각 사업 추진의 구체적 과정과 방법 제시 미흡
■ 이전 정부의 그린 및 디지털 뉴딜정책과의 차별화?
■ 그린뉴딜에 그린가치(탄소저감 목표 등, 기후변화 대응 등)?
■ 당면 문제해결 연계전략 미흡
■ 뉴딜에 지역문제 해결 의지?
■ 현재 디지털 및 그린뉴딜 관련 사업의 수도권 블랙홀 가능성
■ 지역뉴딜의 구체성 부족

51

2. 한국형 뉴딜과 국가균형발전 과제

People Based (Human Centered) Initiative and Area Based Initiative로서 한국형 전환기 뉴딜

Corona19 극복

■ 위기 활용해 목은 취약함 극복 전기 마련

핵심과제
연계
공간적 과제
(국가균형발전)

■ 수도권 일극 집중에서 다극 Global Mega Region 체제 전환
■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동네 소멸 대응전략 마련 시급
■ 재벌중심의 독점지대추구형 서울집중 사회경제체제 약화
■ 강남집값 연동 투기이익 만연에서 삶의 질 중심의 주거환경 구축
■ 디지털담보다는 Mega Region Dam 및 Regional Brain Dam이 필요함
■ With & Post COVID-19시대 취약지역 생활보장 지원 뉴딜 필요
■ 대도시 및 중소도시 쇠락화 대응 Compact City
■ 농어촌지역 디지털·그린·웰빙 융합 뉴딜사업 추진

핵심과제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학적·사회경제적 문제
■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활력 감소 ■ 소득격차와 양극화 심화
■ 4차산업시대 AI 등 노동 소멸 ■ 플랫폼노동 등 Precariat 확대
■ 청년 고용 위기

52

V. 대전환시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Reset전략

1.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환기 과제

2. 자치역량전략

3. 혁신성장전략

4. 포용실천전략

53

1.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환기 과제

비전과 전략

비전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
목표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3대 전략 / 9대 핵심 과제	1. [사람]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①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②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③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2. [공간]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①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②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③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3. [산업]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① 혁신도시 시즌2 ② 지역산업 3대 혁신 ③ 지역 유희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실행력 제고 방안	【법령】 헌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조직】 균형발전 상생회의 신설, 지역혁신체계 구축 【예산】 ①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 ② 계획계약(포괄지원협약)제도 본격 추진 ③ 균형발전총괄지표 개발 및 지역차등지원

전략별 주요 과제

1. [사람]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①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 지방대학의 자율적 교육역량 강화, 지역맞춤형 우수 지역인재 양성, 지역소재 학교지원 및 지역인재 취업지원 ②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문화도시 지정 육성, 관광전략 거점도시 육성, 웰니스(건강·치유)관광클러스터 육성, 관광장업 지원 ③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확대 및 모델 확산, 지역교통체계 개편
2. [공간]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①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 '농촌 생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 '불편없는 농촌 '365 생활권' 구축, 맞춤형 귀농·귀촌 정착 지원, 재생에너지 보급 등 ②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 지역 맞춤형 뉴딜사업 활성화(스마트 슬루션 적용), 공공상생상가 지원, 중소도시 연계협력 강화를 통한 강소도시권 육성 ③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 정주여건 개선, 지자체 연계협력으로 상생·협력 벨트 지정, 마을기업공동체일자리사업 육성·확대
3. [산업]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① 혁신도시 시즌2 : 지역인재 채용의무화, 스마트 혁신도시 선도모델 조성, 지자체-대학-이전기관 협력클러스터 조성, 구도심 재생과 연계, 국가혁신클러스터와 연계 ② 지역산업 3대 혁신 : [산업 중견기업지역스타기업 육성 사회적 경제 육성 (거점) 국가 혁신클러스터, 산단, 새만금, 세종시, [기반] 인력·투자·Globalization(세계화+지방화) 지원 ③ 지역 유희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 국유재산 총조사, 대부료 인하 등을 통해 국·공유 유희자산을 창업공간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 입산물 클러스터 등

1.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환기 과제 1-1. 전환기 비전과 지향

- 주민행복 · 지역행복 · 미래행복의 생활보장
- 독점 · 집권 · 집중에서 포용 · 참여 · 네트워크의 혁신적, 민주적 공간운영 전략 전환
- People Based Initiative를 통한 공간전략
- Area Based Initiative를 통한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
- 역량과 자치기반의 지역전략 운영
- 혁신과 지속가능의 발전전략 운영

55

1.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환기 과제 1-2. 전환기 과제

재난대응

- 코로나19 등 재난 극복의 resilience기반 균형발전 추진 : 지속가능 지역전략
- Black Swan 등 재난대응 지역인프라 개선

국정 핵심공간 전략 Reset

- 수도권 인구 과반시대 반성과 Spatial Divide 적극 대응
- 행정수도이전으로 분권분산분업의 3분형 실질적 민주주의 추진
- 2차공공기관 이전으로 자립적 지역기반 구축

지역행복 생활권보장

- 동네소멸, 지방소멸에 대한 공격적 대응
- 대중소 생활권 체제 운영
- 지대추구형에서 혁신과 생활중심의 사회경제체제 전환 – 사회공동자본(宇沢弘文)

Global Mega Region 구축

- Global Mega Region 구축
- 일극형에서 다극네트워크형 R&D 및 Brain Hub 구축
- 청년층 수도권 유입대응 교육 · 고용 · 인적자원개발 지역 Brain Dam 구축
- 청년 · 중장년 · 은퇴계층 대상 맞춤형 지역일자리 전략

분권적 추진

- 지역참여의 분권적 국정운영
- 지역주도와 책임의 분권적 재정운영
- 과학적 지역진단과 실질적 전략 수립

56

2. 자치역량전략 [1]

(가칭)지역균형분권부 설치 운영

-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업무 전담부처 신설 및 기존 부처 조정

지역장관제 운영

- 국무회의 내 3명의 지역장관 추가 운영 (cf. 영국 지역장관제)
- 지역영향이 있는 사무 및 지역사무 관련 의견 개진
- 중앙부처 일방의 집권적·지시적 관행에 대한 견제와 지역 공동의 이익 반영
- 중앙-지방과 협의를 통해 민주적·효율적·효과적 업무 수행
- 연방제적 수준의 분권적 거버넌스 운영 (연방제란 중앙/지방의 권력 공유의 국가체제)

지역발전투자협약제 전면화

- 현재 3% 미만 비중에서 70% 이상 대부분 사업 전환
- 광역, 기초 등 대부분 지역사업의 자율, 자체기획, 책임 기반 운영
- 중앙부처 타당성 심의, 중앙-지방 간 상호조정과정 통해 협약제로 확정

57

2. 자치역량전략 [2]

실행중심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운영

- 자문위원회 중심에서 실행, 실무 성격 갖는 위원회 전환
- 균형발전업무 총괄 조정, 행정 및 컨설팅 지원, 정책개발 기능 강화
- 프랑스 지역연대청(ANCT, Agence Nationale de la Cohesion des Territoires) 기능 참조

성과중심의 포괄적 광역권 재정 운영

- 기존 지역자율 및 지역지원 계정 외 지역협력의 계정 신설(부울경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등)
- 시도 및 광역패키지 예산으로 포괄적 운영
- 개별보조 방식이 아닌 포괄지원 방식으로 전환(Single Pot Budget)
- 시도패키지, 광역패키지로 하여 Bottom-Up 예산작성, 배분 방식
-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 비중 차등화 후 비수도권 인구비례 및 결핍정도 등 감안하여 시도별, 광역권별 예산 차등의 Sealing제 실시
- 중앙정부부처의 포괄적 Design과 시도 및 광역권의 책임성 기반의 기획 통합한 전략계획 수립
- 계획 내용에 대한 성과 및 타당성 분석 실시와 중앙-지방 간 협의 후 협약으로 확정

58

3. 혁신성장전략 [1]

Global Mega Region 운영

- 7대 광역권(혁신광역권, Mega Region or Metropolitan Region) 운영
 - 설정 : 수도권, 부울경권, 대경권, 호남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 3대 초광역권(Super Mega Region)
 - 수도권·강원권(수도권+강원권), 영남권(부울경권+대경권), 호남·충청·제주권(호남권+충청권+제주권)

체계성, 실행성 높은 광역권계획(전략) 운영

- 국가균형발전계획 내 광역발전계획 추가
- 시도간 연계협력과 광역적 발전전략 포함
- 광역거버넌스 및 시민참여 등 절차과정 강화
- 사회경제적 격차해소(균형발전), 사회적가치, 성평등, 지속가능성, Viability 등의 영향평가 과정 포함
- 산업경제프로젝트 중심에서 주거, 연구개발, 보건복지, 인적자원개발 포함의 포괄적 종합계획 추진
- 중장기 비전, 4년중기, 1년 실행계획 통합화
- 중앙-지방정부 간 책임성, 성과중심 강화

59

3. 혁신성장전략 [2] Mega Region의 조건

구분	내용
1. 인구	- 인구 500~1,000만
2. 지리·지역 경계	- 역사/문화/전통 등 공동체적 인식 기반의 지리적 경계와 내적 통합
3. 첨단산업경제	- 경제권역, 지역 간 경제 연계, 첨단기술산업(선도·지역전략산업), 고차전문서비스산업, 우수한 산업생태계
4. 인적자본/혁신역량	- Talent(고급인력), 첨단기술기능인력, 고등교육기관, 연구개발 및 혁신활동, 과학기술기반(or 플랫폼), 산학연 연계
5. 기능연계 공간체계	- 기능연계의 도시·지역체계, 도시권, 권역중심도시 및 대중소도시권 육성, 도시 간 네트워크
6. 교통(정보)체계	- 교통망, 철도, 고속도로, 도시 간 연결 교통체계, 정보 커뮤니케이션
7. 글로벌 기반	- gateway 기능, 공항, 항만, 무역지원 플랫폼
8. 삶의 질 기반	- 대·중·소 생활권역별 서비스, 보건의료 및 돌봄체계, 주거, 공원/문화시설 등 생활여건 조성
9. 거버넌스·도시문화	- 광역권 행정체계, 각종 기능 협의체계, 참여거버넌스, 민주주의, 관용적 도시문화
10. 법제	- 법률과 행정의 근거와 기반

Mega Region 연구자

Gottman, Kenichi Omae, Bailey
& Turok, A. Scott, GaWC, R.
Florida, Batten 등

국가별 Mega Region 사례

OECD의 TL2 통계,
EU의 NUTS1 및 광역 중심 정책,
미 Metropolitan Regions,
영국 CA, 독일 Metropolitan Area,
프랑스 Region,
일본 광역적 경제생활권 및
Super Mega Region 등

60

3. 혁신성장전략 [3] Mega Region의 조건

다극 거점 Brain Hub 운영

- 혁신 중심의 사회에서 R&D기능 매우 중요
- 현재의 집중형 연구개발기능을 광역권별 분산, 네트워크형으로 재편

취약·쇠퇴지역 Smart Town 추진

- ICT기반 통합 커뮤니티 운영과 재난대응력 향상
- 교통, 신재생에너지, 제로에너지건축, 전기·수소차 충전
- Compact City & Community와 연계
- 한국형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디지털그린융합뉴딜

61

4. 포용실천전략 [1]

사회보장에서 지역 행복생활보장으로

- 1) 살던 곳에서 기초적 생활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권한 중요
 - 자족형 근린생활권 보장 필요. 녹지 및 공원, 산책, 운동 등
 - 태어난 곳에서 양육과 교육을 받고 일하며 가족 이루고 노후 즐기며 사는 기본생활 보장 국가
 - 대중소 생활권 보장(공공의료, 보건, 교육, 고용, 교통, 돌봄, 주거, 치안 등)
 - 생활권 간 격차 해소 완화와 공공 개입 강화
 - 생활보장의 주요 욕구와 결핍에 대한 증거기반, 자료기반의 정책 운영과 활용
- 2) 사회공공재에 대한 인식 확대
 - 사회공통자본은 모든 사람의 풍요로운 경제생활 영위, 문화 전개, 인간적으로 매력사회 유지위한 사회적 장치(宇沢弘文)
 - 사회공통자본 중시의 사회체제 개편
 - 사회공통자본 = 제도자산(관리) + 사회기반(활동) + 자연환경(자연)
 - 자연환경, 토지, 주택, 보건의료, 돌봄 및 사회복지 등은 사회공통자본으로 관리해야 함
 - 사적 독점적 공간의 과잉 확장에서 공적 공동체 공간의 확대로 전환
 - 삶의 질 중심의 공간조성

62

4. 포용실천전략 [2]

사회보장에서 지역 행복생활보장으로

3) 사회보장에서 생활보장으로

- 생활이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기위해 행하는 다양한 활동임. 생활은 가족을 중심으로 영위되는 가정생활, 일(직업 및 노동)과 관련된 생활, 그리고 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관계로 이루어지는 사회생활이 있음.
-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은 빈곤, 질병, 실업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세와 사회보험의 방식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의미
- 현대사회에서 개인과 가족 중심으로 생활상의 다양한 위기에 대처할 수 없으므로 생활의 보장이 필요함. 생활보장체계란 생활불능, 생활장애, 생활위기, 생활불안에 대하여 생활을 보장하는 대책 총체
-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은 제도적 영역을 강조한다면 생활보장은 생활자인 개인과 공동체의 실천 및 참여를 중시하고, 그 권리를 존중하며, 생활자와 제도의 상호협력성을 강조함
- 생활보장은 생활자의 권리에 대한 보장이며 소득, 고용, 건강, 교육, 돌봄, 주거, 거주환경, 안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4)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체제 운영

-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등
- 돌봄, 교육, 보건의료, 주거, 상담 등

4. 포용실천전략 [3]

행복동네 비전 수립과 동네생활보장 체제 강화

비전과 목표

- 비전: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주민공동체 실현
- 목표: 주민주도로 사람중심의 가치와 협력을 통해 동네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며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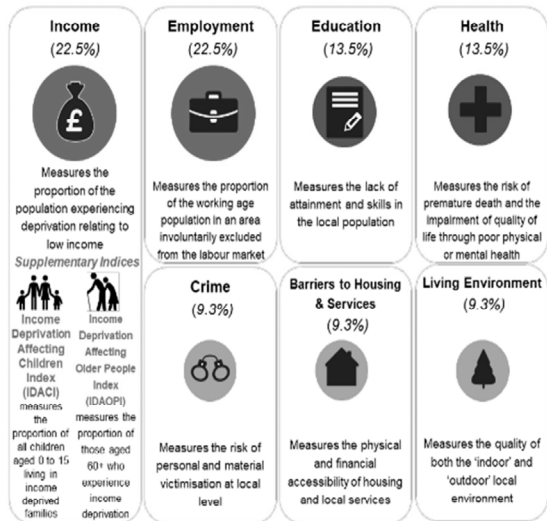


- 영국의 경우 지역관련정책을 총괄하는 부수상실(ODPM, 2004)에서는 살고 싶은 도시와 동일한 의미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제시
- 부산시민복지기준(2016. 1.)에서 행복동네 비전 수립과 동네행복생활 비전 제시

4. 포용실천전략 [4]

동네생활진단지수 통한 체계적 지역지원

There are 7 domains of deprivation, which combine to create the Index of Multiple Deprivation (IMD2019)



- 소득, 고용, 교육, 주거, 건강 및 장애, 사회안전, 생활여건 등 총 7대영역별 생활보장육구 지표 개발
- 영국은 총 7대영역 37개지표를 통해 2000년부터 보고서 발간
- 개발된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공개하여 동네생활보장을 정책적으로 개선하는데 활용
- 동네생활진단지수 동네진단 및 사정지표 활용
- 동네 - 시·군·구 - 광역시·도의 복합적 결핍 (Multiple Deprivation) 실태 진단 활용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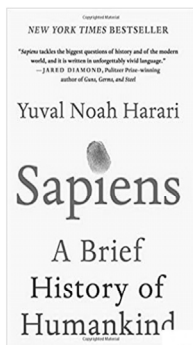
4. 포용실천전략 [5]

대·중·소 행복 생활권 운영

권역	주체	주요 영역
대생활권	광역시·도	경제/산업, 노동시장/인적자원개발/고용지원,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교통/통근망, ICT, 고등교육, 보건의료, 주거, 광역적 문화·복지·공원인프라
중생활권	시·군·구	경제/산업, 고용지원, 교통/통근, ICT, 초중등교육, 보건의료, 보육, 커뮤니티케어, 주거 및 주거환경, 도서관 등 지역문화인프라, 기초생활권 문화·복지·공원인프라
소생활권	읍·면·동	사회적경제, 마을기업/경제, ICT, 보육, 커뮤니티케어, 주거 및 주거환경, 도서관 등 지역문화인프라, 기초생활권 문화·복지·공원인프라

- National Minimum Standards + Local Optimum Standards
- 국가 + 지방정부 + 주민공동체 + 자신의 중층적 권리 및 참여 시스템
- 내가 만드는 동네복지국가

66



"직접 보거나 만지거나 냄새 맡지 못한 것에 대해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는 사피엔스 뿐이다.

~~

이런 '가상의 실재'는
거짓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고 이런 믿음이 지속되는 한
현실세계에서 힘을 발휘한다."

Yuval Noah Harari(2015),
Sapiens
– *A Brief History of Human Kind*

67

감사합니다!

68



**[제2주제]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비전
토 론 문**



대전환 시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박 재 율 상임공동대표 (지방분권전국회의)

1. 국가균형발전 추진 기조

1) 분권 · 분산 · 분업 연계 추진

- 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 특성화 발전, 초)광역권 경제 · 산업 · 사회 · 문화 · 정치 · 행정 체계 구축 등 총괄적 접근

2)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지역분권) 연계 추진

- 중앙정부 주도의 기계적, 분할적 자원 배분 방식의 균형발전 논리 탈피
 -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지 못하는 현상유지적, 정태적 균형발전 타파
 - 되풀이 되는 공모사업 방식, 반복적인 일회적 선거정치의 수단으로 왜곡 등
- 지역주도, 중앙정부 협치를 기반으로 하는 역동적 균형발전 체계 지향
 - 지방분권(지역분권)지향 균형발전, 균형발전 지향 지방분권(지역분권)

2. 국가균형발전의 주요 과제

1)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정치 · 행정 기능 분산

- 약 20년 전, 참여정부 시기 국회 동의를 통해 추진했던 신행정수도 건설의 조속한 재추진
 - 세종특별자치시의 취지와 목적, 비전에 부합
 - 이미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추진,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없는 국가적 과제)

- 2022년 3월 대선과 동시 개헌 국민투표 실시
- * 지방분권개헌과 연계 실시 등
- * (행정)수도에 대한 규정은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는 취지의 내용 명문화

2)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신규 공공기관 비수도권 설치

- ☐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지속 발전, 확충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최대한 이전
 - 행정수도 이전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한 묶음으로 추진, 상호 국민적 실천동력 확대·강화
- ☐ 신규 공공기관 비수도권 설치 원칙 규정, 개별 기관 설립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3) 수도권 쏠림의 구조적 요인 해소를 위한 교육·연예문화 등의 지역 공간구조 개편

- ☐ 학령인구 감소와 연계, 서울대학의 대학원 중심 개편,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의 비수도권 이전 지원 등
 - 대학서열화와 맞물려 있는 서울 중심 교육사다리 공간구조 해체
 - 각 지역, 권역별 경제·사회문화적 특성·발전지향과 연계한 지방 국립대학의 특성화 개편
- ☐ 공영방송 KBS의 이전 등

4) 광역경제권, 광역연합, 차등(특성화)분권 등을 통한 자율적, 자립적 균형발전 추진

- ☐ 동남권 메가 리전, 해양자치권, 문화수도, 광주·전남, 대구·경북 광역행정 통합 추진 등
- 일본의 간사이 광역연합, 프랑스의 광역지방정부 확대, 통합(22개→13개) 등 사례

5) 지방분권 개헌 등 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 제도혁신

- 입법 · 재정 · 주민참여 및 행정수도 이전 등 주요 과제 제도화
- 지방자치법 개정 등 균형발전과 직 · 간접 연계되는 법률 제도화
 - 지방자치법 22조 자치입법권 제약 조항 개정 등

6)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 현재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 행정집행기구인 가칭)‘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회’ 설치
 - 부총리급의 범정부적 기구 위상과 역할
- 청와대에 가칭 ‘분권균형수석실’ 설치
 - 정부와 청와대의 강력한 연계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핵심적 · 우선적 · 지속적 · 포괄적 의제와 정책으로 실행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 실효성 확보 및 행정수도 완성

반 영 운 교수 (충북대학교)

1. 국가 균형 발전의 필요성

- 성장극 이론 (Growth Pole Theory)에 근거하여 산업개발 시기에 집중된 대도시 위주의 산업개발로 인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됨.
- 성장극에 의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미약하였고, 오히려 수도권으로 인구의 반 이상이 이동하면서 산업, 교육, 주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
-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균형발전이 심각하게 요구됨.
- 그러나 그 동안 추진해온 공공기관 지방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수도권 규제 강화 등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 미미.
-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을 이루어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도권 규제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원래의 정책 비전에 맞게 경제수도와 행정수도의 분리를 통한 행정수도 완성 필요.

2. 수도권 규제 실효성 확보

- 최근 수도권 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전제로 했던 '수도권 규제'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경쟁력 강화'로 정책 기준 전환됨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도 법은 수도권으로의 산업·인구 집중 억제와 재배치 목적을 두고 있으나, 실제 2, 3차 수도권정비계획에는 수도권 역할 강화 및 수도권 경쟁력 강화가 계획 방향에 들어 있음
- 최근에는 3기 신도시 건설과 그린벨트 해제, 용인 SK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 등 수도권 규제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수도권규제 차원에서 이러한 대규모 개발 사업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함

- 낙후지역 지역발전, 수도권 내 지역격차를 명분으로 수도권 제외, 권역조정, 일부지역 규제완화 등 다양한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한 수도권 규제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낙후지역을 지원 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요구됨.

3. 행정수도 완성 방안

1)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균형발전국민포럼 및 균형발전협의체의 역할강화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정보 공유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재의 균형발전국민포럼의 활동 및 역할의 실효성 강화
-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부, 지자체, 국회 등에 대한 균형발전국민포럼의 역할 강화
- 정부, 여·야, 지자체, 연구기관 등의 균형발전 정책 평가 및 제안
- 이를 통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대 국민 인식 강화
-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역할 필요
-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연구 및 단체 역할 지원

2)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제도, 행재정 개선

- 헌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근거 확보
- 지역혁신체계 개편
- 지역발전특별 회계 개편
- 포괄지원협약 제도 본격 추진

3)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한국판 뉴딜 사업 우선 반영

- 다양한 이유로 현재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 ☞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을 위한 각종 인프라 개선
- 한국판 뉴딜 사업의 지방 우선 배정
 - ☞ 지역의 특색에 맞는 뉴딜 사업의 발굴 및 중앙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
-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 방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및 이를 위한 각종 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
 - ☞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고용 정책 추진
 - ☞ 지역 인재 중 지역 의무 취직 조건 '특별 장학금' 추진
 - ☞ 지역 인재의 지역 취직 시 주거 지원 및 기타 인센티브 강화
 - ☞ 지역 인재 채용 기업의 지원 강화

2020. 10. 05.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토론회

이 두 영 1) 공동대표 (균형발전지방분권총북본부)

1.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

- 1) 세종시는 당초 노무현 대통령의 구상대로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 국가중추관리기능 모두 이전
- 2) 수도권초집중화와 지방소멸화를 반전시킬 수준의 획기적인 국가균형발전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하고 행정수도 완성이 핵심정책 중 하나이어야
- 3) 지방분권과 동시에 병행·추진해야 하고 주권자가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민(주민)주권을 대폭 확대·강화해야
 - 근본적으로 국민주권·지방분권개헌을 반드시 완성해야
- 4) 국가균형발전의 최우선 정책과제는 수도권문제이며 수도권초집중화를 반전시킬 수준의 수도권집중억제 및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 5)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은 이미 오래전에 선진국들이 앞 다투어 채택한 국가발전전략으로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하며 코로나19국난극복을 위한 전략으로 채택해 강력히 추진해야

2.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소개 및 활동

- 1) 소개 : 2002년 대선시기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 국민운동’을 기원으로 충청권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상설연대기구로서, 그동안 수도권규제완화반대와 국가균형발전촉구, 신행정수도건설·국가균형발

1)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균형발전지방분권총북본부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위 운영위원장, 균형발전국민포럼 상임대표

전·지방분권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 세종시 원안사수 및 정상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선공약이행 촉구 및 충청권 조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유치, 지방분권개헌운동, 수도권초집중화 대응, 제21대 총선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국민주권 10대 의제 선정 및 주요정당과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정책공약 채택 요구,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청권 유치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음

2) 최근 주요활동

- 2019.09.03. 대전·충남·세종을 구성으로 재 출범
- 2019.11.06.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 촉구 기자회견
- 2019.12.11.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국회 통과 환영 입장 발표
- 2020.01.15.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
- 2020.02.12. 충북 추가 합류
- 2020.02.13. 자유한국당 대구·경북지역의 국회의원들의 국토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무산 움직임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2020.03.06.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환영 입장 발표
- 2020.03.12. 제21대 총선 10대 의제 선정발표 및 주요정당과 후보자에게 총선 정책공약 채택 요구
- 2020.04.03. 제21대 총선의제 정책공약 채택 요구 결과 발표
- 2020.04.16. 제21대 총선 결과에 대한 논평
- 2020.04.26. 호남정치권의 방사광가속기 입지선정 평가지표 변경요구 등에 대한 입장 발표
- 2020.05.08.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입지 충북 청주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 2020.05.20.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실무협의회
- 2020.05.26. 제21대 국회 개원에 즈음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 2020.05.27.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확대·강화를 위한 입법·개헌 추진 촉구 및 면담 신청 공문 발송(국회의장, 주요정당 당대표 및 원내대표, 대통령, 청와대, 국무총리, 기재부, 국토교통부, 산자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등)
- 2020.06.11.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간담회

- 2020.06.24.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간담회
- 2020.06.24.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간담회
- 2020.07.02.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 간담회
- 2020.07.07. 수도권 규제정책은 왜 실패하는가 토론회(국회)
- 2020.07.14.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토론회(국회)
- 2020.07.16. 정부여당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공식화에 따른 입장 발표
- 2020.07.20. 김태년 원내대표 행정수도 이전 연설 환영 성명 발표
- 2020.07.20. 박명석 국회의장 개헌추진 입장표명 환영 성명 발표
- 2020.07.21. 문재인 정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조속 시행 촉구 성명 발표
- 2020.07.22.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미래통합당 입장 촉구 성명 발표
- 2020.07.27. 행정수도 완성 및 개헌,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충청권
민관정 공동추진단 결성 제안 기자회견
- 2020.08.05. 가칭)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출범 관련 회의
- 2020.08.12. 가칭)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출범 관련 회의
- 2020.08.19. 가칭)행정수도 완성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출범 관련 회의
- 2020.08.28. 국회 국가균형발전 특위 구성 촉구 성명 발표
- 2020.09.01.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회
- 2020.09.02. 제21대 정기국회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 법제화 선도 촉구
성명 발표
- 2020.09.04. 김종인 위원장의 행정수도 불가능 언급에 대한 성명 발표
- 2020.09.07. 이낙연 대표의 제21대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한 논평
- 2020.09.15. 전국 지방의회의 행정수도완성 지지선언에 대한 국회의
화답촉구 성명 발표
- 2020.09.18. 충남,대전 혁신도시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촉구 성명
- 2020.09.21.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 충청권 공대위 운영위원회
- 2020.09.28.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출범식 참가

3)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국민주권을 위한 10대 의제 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 10대 의제 국가정책화 및 실현
- 충청권공대위 주도, 민·관·정 공조체계 구축
- 전국 의제의 큰 흐름 속에 지역의제 관철
-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 균형발전국민포럼, 지방분권전국회의 등
- 지방자치4단체 등 뜻을 같이하는 제 세력과 연대
- 정부여당의 의지와 책임·역할론 요구, 소통과 공조, 비판과 압박 병행
- 국회 및 여야 정치권과의 소통과 공조, 비판과 압박 병행
- 충청도민을 비롯한 국민 참여 방식 운동 전개

나. 추진전략

- 제21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지속적인 요구와 압박
-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등 정부여당의 요로에 총선공약 실천 요구
- 10대 의제 해당 중앙부처의 장관과 담당부서장 면담
- 대통령 자문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면담
- 성명서, 기자회견, 정책토론회, 결의대회 등 지속 개최
- 온라인 홍보 및 국민 참여 운동 전개
- 각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역량 적극 활용하여 전국 의제화 및 전국 차원의 대응체계 구축

예) <충남> 하반기 전국포럼 개최

<세종> 하반기 정책토론회 개최

<충북> 지방분권개헌 방안과 추진전략 연구사업 등

3. 제21대 총선 10대 의제 및 설명서

제21대 총선 10대 의제 목록

- 1) 국민주권·지방분권 헌법 개정 차기 대선 전 완료
- 2) 수도권 초집중화를 반전시킬 수준의 획기적 국가균형발전 추진
- 3)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대전·충남혁신도시 추가지정, 충북혁신도시로 추가 공공기관 이전
- 4)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상생발전
- 5) KTX오송역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구축과 강호선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오송·원주 연결선 건설
- 6) KBS충남방송총국 설립과 지역언론 지원육성 종합대책 마련
- 7) 충청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충북 의대정원 증원과 대전의료원 건립
- 8) 중부권 방사광 가속기 구축
- 9)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지자체의 재량권 확대와 지역민의 환경권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10) 서해선 서울 직결 추진과 충청권 2단계 광역철도망 조기구축

제21대 총선 10대 의제 설명서

1. 국민주권·지방분권 헌법개정 차기 대선 전 완료

1) 현황과 문제점, 필요성

- 우리나라의 과도한 중앙집권체제는 집권세력들의 견고한 카르텔로 이어져 부정부패와 경경유착에 그치지 않고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사건으로 이어져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함
- 또한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수도권일극체제를 낳아 아파트값 폭등을 비롯한 각종 병폐는 물론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상황에 이르고 있음
- 촛불시민혁명과 식물국회로 전락한 제20대 국회의 성적표는 이미 한계에 이른 대의민주주의를 직접민주제 도입을 통한 국민주권확립으로 개혁해야한다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우리의 지방자치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이 없는 무늬만 지방자치에 머물고 있음
-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선출직 공직자와 권력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직접 민주제 도입을 통한 국민주권을 확립하고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해 지방에 권력을 과감하게 이양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단행하는 한편, 수도권초집중화를 해소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개정을 반드시 추진해 국가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함
- 국민주권·지방분권 개헌은 역대 국회의장들이 적극 추진해 왔고 지방분권운동 진영을 비롯한 지방자치4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와 노력으로 국민의 90%이상이 공감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로,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대선후보들이 지방분권개헌국민협약서에 서명하고 제20대 국회에 특위까지 가동하였으나 여야 간에 합의조차 이루지 못한데다 문재인대통령 발의 개헌 안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사장시켜 버렸음

- 따라서 정당과 제21대 국회는 대다수 국민의 바람이자 시대적 과제인 국민 주권·지방분권개헌을 적극 추진해야할 것임

2) 추진방안

- 제21대 총선에서 국민주권·지방분권 개헌추진을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차기 대선 전까지 헌법개정을 완료
- 개헌안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제안한 것을 기본으로 하되, 헌법개정국민 발안제·입법국민발안제·국민소환제·국민투표제 등의 직접민주제의 실효적 도입, 지방분권국가 선언, 주민자치권·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등의 보장, 보충성의 원칙 실현, 지역대표형 상원 창설을 통한 양원제 도입, 지역 간 재정 조정제도 도입, 청와대·국회·대법원 등 최고 권력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한 행정수도 명문화, 풀뿌리 지역정당 허용 등 포함

※ 붙임의 국민주권·지방분권 헌법개정안 주요내용 참조

2. 수도권 초집중화를 반전시킬 수 있는 수준의 획기적 국가균형 발전 추진

1) 현황과 문제점, 필요성

- 2019년 말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50%를 초과하고 비수도권의 기초지자체 중 39%가 소멸위기에 빠지는 사상 초유의 국가비상사태에 직면함
- 이것은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국가중추관리기능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낮은 수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지역과 비수도권의 역량을 국가 및 글로벌체제의 혁신자산으로 육성하여 혁신적 신성장전략을 강력히 추진해야함

- 따라서 수도권정책을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시켜 수도권 초집중화를 억제·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특단의 획기적 대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함

2) 추진방안

- 중앙부처 내에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강력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체계 개편
 - 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추진의지가 매우 미약함. 기획재정부, 국토부, 행정안전부의 분산적 정책 뿐 아니라 부처 내 칸막이식 행정으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진전이 미약함.
 - 중앙정부 단위의 분절적 정책추진을 지양하고 상호 연계·조정을 촉진할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이 필요함. 프랑스의 국토균형청(CGET, commissariat général à l'égalité des territoires)이나 영국의 Ministry of Housing,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와 같은 정책통합의 부처신설을 통한 강력한 추진
 - 대통령 자문위원회 성격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해 기획·예산·집행·법률 재정권을 보유한 행정위원회로 기능을 개편하여 지역산업 위기 대응 및 지역산업재생, 광역경제권, 균형발전 등 多부처 사업을 위원회 중심으로 추진함
 - 청와대에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의 지역정책을 총괄하는 지역정책 수석을 신설
- 국토종합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 연계 강화와 지방영향평가제 도입
- 지역참여의 국정운영
 - 지역장관제(오랫동안 영국의 운영) 운영으로 지역의 국정참여 기반 마련. 3대 Super Mega Region 대표하여 시도지사들의 순번제 참여. 지역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정에 참여하여 국가정책과 지역정책 간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연방제에 준하는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추진
- 지방소멸, 동네소멸에 대처하는 정책 운영
 - 동네공동체에 대한 국가비전과 보건의료복지 등 생활서비스 및 인구 사막화 대응의 National Minimum Standard 수립 운영. 소멸위기 지방 및 동네에 대한 지원정책 운영

○ 비수도권대학 육성 등 고급인적자원 혁신역량 강화

- 서울대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대학을 비수도권으로 이전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지원·육성
- 지방대육성정책 없이 지방대만 몰락시키는 이명박·박근혜식 대학혁신 지원사업의 즉각 중지
- 참여정부 때 시행했던 지방대혁신역량사업(NURI) 등 인적자원개발중심의 국가균형발전사업 추진.

○ 수도권 입지 대기업본사와 시중은행본점 등의 비수도권 이전 촉진

- 대기업 본사 및 민간기업의 비수도권 이전 촉진을 통한 성장기반 강화

○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속 추진

- 실질적 진전이 없는 공공기관 2단계 이전의 조속한 추진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광역권 구축

- 수도권 일극성장은 비수도권 소멸과 국가경제의 공멸을 초래함. 혁신광역권활성화로 지역주도의 혁신의 신 성장기반을 구축해야함. 비수도권 지역에 미래 유망의 혁신적 산업 및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함.
- 수도권 대응의 다극 광역권 정책 추진. 광역권이 구축해야 할 주력·선도의 산업 및 프로젝트, 연구개발기능, 고차서비스, 글로벌 기능, 철도 및 교통망, 공항 및 항만, 보건의료, 인적자원개발의 전략 개발·추진

3.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대전·충남혁신도시 추가지정, 충북 혁신도시로 추가 공공기관 이전

1) 현황과 문제점, 필요성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추가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210개, 공기업은 279개로 총489개 인데, 1단계 이전 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추가이전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음
- 문재인정 부 출범 후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은 총선이후에나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 전국10곳에 건설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정책에서 충청권은 세종시가 건설되는 인접지역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충남은 2005년도 세종시 건설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종시 까지 충남도에서 분리 승격됨. 세종시 출범으로 혜택이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세종시를 건설하면서 연기군 전체와 공주시 일부 437.6km²를 내주었고, 이로 인해 13만7천명의 인구유출, 지역 총생산도 25조 2천억원 감소하는 등의 역차별과 피해가 매우 심각함
- 대전 역시 세종시와 인접하고 정부3청사에 이미 공공기관이 이전해 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충북혁신도시의 경우 광역도 단위 혁신도시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로 공공기관이 이전한데다 이전 기관 중 앵커기관이 없어 혁신도시로서의 규모와 경쟁력을 갖추기에 역부족임
- 다행히 2020년 3월 6일 국회에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충남과 대전에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게 됨

2) 추진방안

-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속추진
- 충남과 대전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
- 충북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으로 규모 확대

4.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상생발전

(1) 행정수도 완성 개헌

1) 현황과 문제점, 필요성

- 행정중심복합도시 반쪽 위상과 기능으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에는 태생적 한계
- 세종시 본래의 취지대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이 시급하고,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헌법적 기반 필요

2) 추진방안

- 제21대 총선을 기점으로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2)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1) 현황과 문제점, 필요성

- 정부부처의 2/3 이상이 세종으로 이전했으나,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 구조적으로 제기
- 국회와 정부의 업무연계의 강화, 국정 품질의 향상, 행정의 비효율성 해소필요

2) 추진방안

- 2020년 세종의사당 건립계획 확정, 국회법 개정안 통과 주력

(3)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1) 현황과 문제점, 필요성

- 청와대와 국회 등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국정 운영의 비효율 초래, 강력하고 상징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의제로 대두
- 정부부처의 대부분이 이전한 세종시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여 국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필요

2) 추진방안

- 국가균형발전 의지표명 차원에서 행정안전부가 입주할 계획인 정부세종 신청사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추진

(4) 여성가족부 등 미 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 이전

1) 현황과 문제점, 필요성

-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이전 제외된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 포함 19개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자문위원회 등이 수도권 잔류 중

- 중앙행정기관의 상당수가 서울에 잔류하여 세종시 소개 기관과의 업무협업 및 연계 부족으로 국정운영 비효율 초래

2) 추진방안

-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 및 이전계획 고시 등을 위해 정부부처 및 국회 등에 협력 추진

(5)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립

1) 현황과 문제점, 필요성

- 전국 최고의 인구 급증에 비해, 사법 지원체계는 대전지방법원 관할 세종시 법원(시군법원, 등기소)으로 운영
- 사법수요 급증과 소송 처리기간 지연 해소 등 세종지방법원 설립 필요,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제2 행정법원 설립 필요

2) 추진방안

- 법원설치법 개정 등을 위해 대법원(법원행정처)과 정부부처, 국회와의 협력 추진

(6)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이행

1) 현황과 문제점, 필요성

- 2019년 초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관으로 국토연구원과 충청권 4개 시도연구원이 참여하는 형태로 행복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집 중이며 2020년 하반기에 마무리 될 예정임
- 그동안 세종시 건설은 기본계획인 신도시건설에 집중해 왔고 주변지역의 기능분담과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도시계획은 거의 방치되어 왔음
- 이러한 가운데 세종시의 인구가 30만을 넘어선 시점에서 증가한 인구의 유입 경로를 분석해보면 충청권 주변지역으로부터 61.5%나 유입된 반면에 수도권

인구의 유입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고, 세종시가 자족기능 확충과 수도권과의 접근성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주변지역의 우려와 갈등이 높아지고 있음

2) 추진방안

- 당초의 세종시 건설의 목적과 계획을 최대한 살려나가되 주변지역의 기능 분담을 통한 상생발전이 조속히 실현되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확보방안을 마련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야함
- 충청권 4개 시도의 민·관·정이 참여하는 충청권 상생발전 거버넌스 기구를 창립해 상설적으로 운영하여 초 광역 자치기구로 발전시켜 나감

5. KTX오송역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구축과 강호선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오송·원주 연결선 건설

1) 현황과 문제점, 필요성

- KTX오송역은 고속철도 경부선과 호남선이 국토의 중심에서 만나는 국내 유일한 환승역이자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세종시의 관문역으로서, 2010년 개통 이후 세종시 건설과 호남고속철도 개통 등에 힘입어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해 2019년 말로 연간이용객 860만 명을 넘어섰고 매년 큰 폭의 증가가 전망됨
- 그러나 KTX오송역은 복합환승센터가 개발·구축되지 않아 단순히 타고 내리는 일반역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화상태에 이른 주차장은 물론이고 정부 세종청사와 청주도심 등과의 연계교통망이 원활하지 않아 인근 주민들과 이용객들로부터 커다란 불만을 사고 있고, 이로 인해 세종시가 KTX세종역 신설을 추진하는 등으로 충청권 이웃들 간의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음
- 또한 세종시 건설의 과제중 하나인 세종시와 강원권 간의 고속교통망이 유일하게 구축되지 않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예비 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나 오송·원주의 연결선이 반영되지 않아 강호축 연결 고속철도망 완성을 가로막고 있음

- 현재 광역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은 광역 시·도지사가 지정해 추진할 수 있고 KTX동대구역 등의 국내 사례가 있으나 KTX오송역의 경우 그 위상과 기능이 광역차원을 넘어서 국가차원에서 접근·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추진방안

- 정부가 KTX오송역을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하여 개발·구축
- 강호선 고속철도망 구축의 완성을 위해 오송·원주 연결선 건설

<참고> 복합환승센터는 열차·항공기·선박·지하철·버스·택시·승용차 등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과 상업·업무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승시설과 환승지원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한 장소에 모여 있는 시설로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그동안 교통시설 개발은 개별 시설별 타당성 위주로 추진되어 전체 교통네트워크 차원의 연계성·통합성·효율성이 저하되고, 최근 고속철도역 등 교통망의 지역개발 파급효과가 지대함에 따라 주요 교통거점을 대상으로 각종 교통수단이 연계·소통되고 문화·상업·업무시설 등을 고밀도로 건설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제도를 도입하였고,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지정하여 관리한다.

- ①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을 위한 권역 간 대용량 환승교통의 효율적인 처리와 상업·문화·주거·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복합환승센터
- ② 광역복합환승센터 : 주로 권역 내의 환승교통 처리와 상업·문화·주거·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복합환승센터
- ③ 일반복합환승센터 :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제외한 것으로서 지역 내의 환승교통 처리를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복합환승센터

6. KBS충남방송총국 설립과 지역언론 지원육성 종합대책 마련

1) 현황과 문제점, 필요성

- 1989년 대전광역시와 행정 분리 이후 23년 만에 정상적 자치 구조와 여건을 위해 내포신도시로 도청을 이전하였으나 자족성 등 크게 미흡
- 특히 220만 충남도민의 방송, 언론 환경 크게 미흡, 지역형평성 저해

- 비수도권 14개 광역 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하고 충남만 KBS방송국 미설치 <부산충국1, 대구충국1, 광주충국1, 대전충국1, 울산국1, 강원3(춘천충국1, 강릉, 원주국), 충북2(청주충국, 충주국), 전북1(전주충국), 전남2(목포국, 순천국), 경북(안동국, 포항국), 경남2(창원충국, 진주국)> 총 18국
- 충남은 대전충국에서 담당하나 대전·세종 중심의 보도로 보도 비율에서도 30%대에 그치고 있음
- 220만 충남도민의 알권리 및 지역뉴스 생산·보도 언론환경을 통해 사실에 기반 한 실시간 정보유통, 감시비판 기능의 운용으로 지역사회의 선순환 자치구조 정착이 가능할 것임. 더불어 농어촌 지역과 대규모 산업시설 등의 특성상 재난방송의 실시간 전파 등을 위해 KBS충남방송총국의 설립요구는 시급성과 당위성을 지님
- 지정학적 특성상, 지상파방송 의존도가 타 시도 대비 시청률 높음(충남사회지표조사 결과 정보획득 매체에서 '방송'이 61.6%로 나타남)
- KBS충남방송총국의 설립요구는 공영방송으로서 본연의 기능적 측면에서 '경제적 효율성'의 논리보다 앞서는 당위성을 지님
-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초집중되는 수도권일극체제의 원인중 하나가 바로 언론기능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집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언론은 갈수록 존폐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임. 이를 개선해보고자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제정해 지역신문을 지원해오고 있으나 지원규모가 작고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 있으나 지원기금이 조성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정책이 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 언론 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해 지고 있는 실정임. 또한 포털의 영향력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지만 지역 언론에 대해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육성 종합대책이 절실함

2) 추진방안

- 현재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 중심권에 KBS충남방송총국 설립
 - KBS는 이미 내포신도시에 방송국 설치 부지를 확보하고 있음
 - 위치 : 홍성군 홍성읍 신경리 892번지 /면적 : 20,925㎡(6,329평)
 - 용도 : 공공 및 일반 업무시설

- 공영방송에서 내부 재정여건이나 경제적 효율성 측면보다 우선하여 형평성, 기회균등, 정보권 및 언론권 등의 보장이 우선시되어야함

○ 국가차원의 지역 언론 지원육성 종합대책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공영방송 본사 이사회 및 시청자위원회, 포털 운영위원회 등의 각종 언론 관련 의사결정 기구에 비수도권 지역 인사들의 30~50% 참여 보장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고 지원 범위와 규모 확대
-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원기금 마련과 지속적인 지원 확대
- 전국 대상 언론의 지역뉴스 보도 비율 확대
- 지역방송 자체 편성권 확대와 지역방송 제작물의 전국 유통 경로 확대
- 지역 언론 종사자들에 대한 노동조건 개선 등

7. 충청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충북지역 의대정원 증원과 대전의료원 건립

1) 현황과 문제점, 필요성

- 한국의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3명으로 OECD 최하위, 국민 1인당 의사 진료횟수는 16.6회로 OECD 평균대비 2.3배
- 한국의 의대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 2017 인구 10만명 당 의대 졸업자 수 : OECD 평균 12.6명, 한국 7.6명
- 그중에서도 충북은 의료기관 및 의사 수 등 전국 최하위권
 - 충북 치료가능 사망자 수 전국 50.4명 보다 많은 58.5명으로 전국 1위
 - 입원 환자수 연평균 증가율 전국 4.7% 보다 많은 7.3%로 전국 1위
 - 의료기관 수 전국 66,333개소 중 1,751개소로 전국 13위
 - 의사 수 전국 100,241명 중 2,417명으로 전국 14위
 - 의과대학 정원 전국 3,058명 중 89명으로 12위
- 의료문제 해결의 최우선 과제인 의료인력 충원 위해 의대정원 증원 필요
 - 2017 보건복지부 보건 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결과 2020년 현재 1,837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갈수록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 그동안 충북도에서 중앙부처(복지부, 교육부) 및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2021학년도 의대정원 동결 방침을 교육부에 통보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대전의 경우 광주, 울산과 함께 공공의료원이 없어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안전망이 부족해 지역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2) 추진방안

- 의사인력 공급 위한 의대 총정원 증원 : 기존 3,058명 → 향후 3,758명(700명 증)
 - 10년 양성 후 의료현장에 배출될 수 있는 의사 특성 고려, 의대 총정원 최소700명* 이상 증원 필요
 - * 2030년 부족 의사 수(7,646명)의 10%정도(700명)를 2022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 배정 시 증원
- 충북지역 의대 정원 증원 : 기존 89명 → 향후 200명(111명*(89명+22명) 증)
 - * 89명 : 현재 의대정원 기준, 충북과 인구가 비슷한 강원(154만, 267명)과 전북(183만, 235명) 평균의 75% 수준 22명 : 증원되는 정원700명을 인구대비 시도별 배정 시 충북에 배정되는 최소인원
- 대전의료원 조속히 건립추진

8. 중부권 방사광 가속기 구축

1) 현황과 문제점, 필요성

- 방사광가속기는 소재부품의 원천기술개발과 고도화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
- 포항에 2기가 설치, 운영 중이나 연구수요 증가로 이용포화 상태이고 장비 노후화(25년경과)로 일본, 미국 등 해외 가속기 이용자 증가
 - 매년 이용자 증가로 수요의 30%~40% 연구포기 또는 해외연구
- 가속기 활용도가 높은 바이오, 반도체 등 관련기업이 경기·충청권 집중
 - 충북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2시간 내 접근 가능하여 이용수요·활용 확대 기대
 - ※ 충북도 내 바이오기업 260개사, 반도체기업 90개사, 화학기업 657개사 (통계청 KOSIS)

- 중부권 방사광 가속기 구축이 이뤄질 경우 차세대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기초연구 축적으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육성 및 세계4대 제조강국 도약 기반이 구축될 것이며, 기초과학과 산업기술의 융합으로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 성장을 선도할 것임
- 또한 충청권에는 이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기능지구가 조성돼 있어 상당한 시너지효과도 기대됨

2) 추진방안

-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오창 일원 ※ 가속기 구축에 적합한 화강암반층
- 사 업 비 : 1,000,000백만원 (국비 850,000, 지방비 150,000)
- 규 모 : (부지) 539,000㎡
- 내 용 : 방사광가속기연구센터 구축, 융합연구, 전문인력 양성 등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지자체의 재량권 확대와 지역민의 환경권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필요성

- 충남지역은 대규모 산업단지 및 제철소, 전국의 50%에 해당하는 30여개의 화력발전소 입지 등으로 환경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는 특성과 더불어 수도권에 인접하고 대도시의 배후도시 기능으로 각종 폐기물 처리업 신청이 쇄도하여 갈등이 이어지고 있음
- 충북지역도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총 10개가 있는데 모두 청주에 집중돼 있고 시설용량이 전국대비 무려 18%를 차지하는 최고 수준임에도 신규 허가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가하면 운영상의 문제로 인근주민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까지 실시하고 있는 등 소각장의 신규허가와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 진행 중에 있음

○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등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영역으로 두고 있음
- 민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에 주민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음
- 처리시설 운영에 있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업체의 특성상 폐기물수익 극대화를 위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운영과정도 공개되지 않아 환경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인근지역 주민의 불신이 있음

○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매립장/소각장)은 전국 어딘가에는 반드시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특정 지역에 집중 되는 경우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음

○ 주민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이나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민간 처리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음

○ 또한 환경기초시설의 성격으로 인해 폐기물처리시설 허가의 근거 법률인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어도 해당 지자체가 불허가 할 재량권이 거의 없음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허가제한이 가능하나, 대부분 기속행위이며, 재량권은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이지만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오히려 재량권 행사가 제한되고 행정소송 등 법적분쟁이 발생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이고 조성 면적이 50만㎡ 이상인 산업단지는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산업단지 조성권자는 수익극대화 및 편의를 위해 대부분 타인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를 분양하고 있음

※ 위 규정 중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반면에,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영업구역 제한을 금지하고 있어 입법목적과 다르게 사실상 전국의 폐기물이 유입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

2) 추진방안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지역 주민의 환경권 우선에 배치되는 조항의 개정추진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적용대상에 민간이 설치하는 일정규모 이상(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1일 100톤 이상의 소각시설, 매립용량 330만㎥ 이상 매립 시설)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시켜 입지선정부터 운영에 대한 주민감시, 주민지원 등을 강제함으로써 주민의 의사결정 및 참여성 제고
 - ※ 지금까지는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불신이 많아 전국적으로 무조건 반대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환경기초시설인 소각, 매립장 확충에 걸림돌이 되어 폐기물 처리에 곤란을 겪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점이 있음
- 「폐기물관리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가에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2항 허가제한 사유에 주민수용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 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에 한하여 해당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을 매립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에 따른 영업구역 제한을 금지하는 규정을 개정
 - ※ 산업단지 조성 시 분양원가를 고려하여 공장과 아파트 용지를 복합 개발하므로써 주민밀집지역 바로 옆에 매립장이 설치되는 사례 방지(ex. 오창과학단지, 오송산업단지 등)
- 단기적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에 민간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시키게 되면 소각장 집중문제, 주민참여 제고 등의 효과 기대
- 장기적인 과제로 국가에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방안마련
 - ※ 이 경우 민간과 공공이 서로 경쟁하는 문제점 해결이 필요해 보임

10. 서해선 서울 직결 추진과 충청권 2단계 광역철도망 조기구축

1) 현황과 문제점, 필요성

- 충남 서북권 교통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한 서해선복선전철사업은 홍성에서 경기 송산까지 90km 구간으로 총사업비 2조9084억원이 투입되어 현재 6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서울까지 직결이 아닌 관계로 효과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서해선이 서해안의 철도 인프라를 높이고, 남북 철도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까지 직결이 반드시 필요함. 또한 서해선을 이용해 서울까지 가기 위해서는 환승을 해야 하는 관계로 기존 국철과의 차별성이 없음
-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은 충청권을 하나의 단일한 생활권으로 형성하고 세종시 건설의 파급효과를 확산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 현재 1단계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고 2단계 사업은 국가계획반영을 위한 타당성 용역 중으로 대전의 도시철도를 세종시 및 정부세종청사-오송역-청주 도심-청주국제공항으로 연결하고, 충남보령에서 출발하는 충청권 문화산업철도를 정부세종청사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조기에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추진방안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해선 서울 직결 노선과 충청권 2단계 광역 철도망 구축사업 반드시 반영

<붙임>

국민주권·지방분권 개헌안의 주요내용

1.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제1조 제3항에 명시한다.

2. 주민자치권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민으로서 자치권을 가진다.

3. 지방정부의 종류

- 지방정부의 종류는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로 구분하고, 법률로써 광역은 시·도, 기초는 시·군·자치구로 규정한다.

4. 보충성의 원칙

- 국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간의 업무배분은 보충성의 원리를 기초로 한다.

5. 입법권의 종류와 법률간의 관계

- 국회는 국가의 법률을 입법하고, 광역자치의회는 광역지방정부의 자치법률을 입법하고, 기초자치의회는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률을 입법한다.
- 법률의 우선순위는 국가의 법률, 광역지방정부의 자치법률,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률 순이며, 헌법에 규정한 자치입법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자치법률이 우선한다.

6. 입법권의 배분

- 입법권의 주체는 국민과 주민이다. 다만 국민과 주민은 자신의 대표기관을 통하여 입법권을 행사한다. 국회와 지방의회는 국민과 주민의 입법권을 위임받아 소관사무에 대하여 법률제정권을 행사한다.
- 국회와 광역자치의회와 기초자치의회는 헌법에서 규정한 입법권을 행사한다.

7. 행정권의 배분

- 광역지방정부는 당해 광역자치의회가 제정한 자치법률을 고유사무로 집행하고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집행한다.
- 광역지방정부의 집행기관은 자치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자치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기초지방정부는 당해 기초자치의회가 제정한 자치법률을 고유 사무로 집행하고,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집행한다.
- 기초지방정부의 집행기관은 자치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자치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8. 자치조세권 및 자치재정권 배분

- 국세의 종류 및 기초자치세 및 광역자치세의 종류와 배분방식, 소득세 및 소비세를 포함한 공동세의 종류 및 세율, 배분방식은 법률로 정한다.
- 국세의 종목과 세율 및 징수방법은 국가의 법률로 정한다.
- 기초자치세 및 광역자치세의 세율과 구체적인 세목 및 징수방법은 자치법률로 정한다.
- 정부와 지방정부는 재정건전성의 원칙에 따라 재정을 운영한다.
- 위임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임하는 쪽에서 부담한다.
- 지방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지방간의 수직적 재정조정 제도와 지방-지방간의 수평적인 재정조정제도를 둔다.

9. 자치조직권

-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집행기관의 조직은 당해 자치의회가 입법하는 자치법률로 정한다.

10. 양원제 도입

- 국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 상원은 지역대표로 구성하고, 하원은 국민대표로 구성한다.

11. 직접민주주의의 도입

- 국민발안제 · 국민투표제 ·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

12. 헌법개정 국민발안제의 도입

-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발안제를 도입한다.

13. 수도 조항 신설

- 수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한다.

14. 풀뿌리 지역정당의 허용

- 정당의 자격요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한다.

15. 중앙-지방 협력회의

-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4대협의체가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 회의를 둔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총선 10대 의제 정책공약 채택 요구 답변서

번호	의 제 명	정책공약 채택 여부		
		전부 채택	부분 채택	미 채택
1	국민주권·지방분권 헌법개정 차기 대선 전 완료	○		
2	수도권 초집중화를 반전시킬 수준의 획기적 국가균형 발전추진	○		
3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대전·충남혁신도시 추가 지정, 충북혁신도시로 추가 공공기관 이전	○		
4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상생발전	○		
5	KTX오송역 국가기간 복합환승센터 구축과 강호선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오송·원주 연결선 건설	○		
6	KBS충남방송총국 설립과 지역언론 지원육성		○	
7	충청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충북 의대정원 증원과 대전의료원 건립	○		
8	중부권 방사광 가속기 구축	○		
9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지자체의 재량권 확대와 지역민의 환경권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10	서해선 서울 직결 추진과 충청권 2단계 광역철도망 조기구축	○		

※ 의제에 대한 정책공약 채택여부를 검토하여 해당되는 칸에 체크(✓)하여 주세요.

※ 의제에 대한 정책방향에 찬성하고 내용에 80%이상 동의하는 경우 전부채택으로 체크해 주세요.

※ 의제에 대한 정책방향에 찬성하고 내용에 80%미만 동의하는 경우 부분채택으로 체크해 주시고
그 이유를 별지에 작성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1. 정당명 : 더불어민주당

2. 담당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차장 황민수 / 02-788-2606

부분채택 또는 미 채택 이유

의제번호	의견
1	
2	
3	
4	
5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내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 사측은 수신료현실화, 방송법시행령 제36조(재원)에 ‘공사자산을 활용한 수입’ 추가 등 정책과제 해결과 연계하여 내포방송센터(가칭) 건립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 － 구성원 상호간의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임 ● 정당 개입시 공영방송의 독립성 훼손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의 공공·공익성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제외한 내부 경영 및 조직, 기구 운영 등에 개입할 경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 ● 결론적으로 KBS충남방송총국 설립 문제는 KBS 내부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7	
8	
9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선 서울 직결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충남도당의 공약으로 채택되었으며, 충남도에서 수요와 편익, 경제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충남도당과 함께 서해선 서울 직결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1단계 실시설계 및 2단계 타당성 용역 중.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추진 방향을 합리적으로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음

사회적 대전환 with COVID 시대의 비전과 전략,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세종

지 남 석 연구실장 (대전세종연구원)

-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회복력에 기반한 전환기에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전략을 종합적으로 제시함.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적 과제를 주로 논의하였지만, 결국, 대전환의 전제는 국가균형발전과 직결되는 사안뿐만 아니라 최근의 “사회환경 변화”와 “코로나19”와 관련한 문제를 동시에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국면이라고 볼 수 있음
- “사회환경 변화”는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소멸 등 지역사회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며, 여기에서는 지방자치역량,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포용적 환경 조성, 산업경제 등의 혁신적 성장 문제 등을 함께 포괄적으로 다룸
- “with COVID”라는 용어가 자주 언급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전염병과의 싸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임. 역사적으로 아테네를 비롯하여 런던, 파리 등이 도시 인구 급증과 위생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발전해 왔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싸워나가야 할 과제임. 코로나19 이후에 안전·위생, 감염·전염병 문제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보완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면 “with COVID” 시대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임
-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모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사람(시민)이 양질의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임. “사회환경 변화”와 “코로나19” 이후의 재해·감염·전염병 등의 안전문제, 그리고 “계획의 패러다임과 트렌드 변화” 등은 앞으로 도시의 계획 수립을 포함하여 성장·발전을 논의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임. 새로운 도시 발전의 비전과 전략에는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적극 담겨야 함

- “사회적 대전환”과 “국가균형발전”은 상호 연관성이 낮아보일 수 있지만, 기존의 문제를 개선하여 회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모색한다는 점에서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절대적 명분으로 탄생한 세종시는 지금 ‘행정수도 세종’ 건설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세종시는 사회적 여건변화에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대응가능한 시스템임. 또한, 초기 코로나19 확산단계에서의 대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체적인 역량도 상당수준에 이른 상태임. “변화가 빠른 시대”, “with COVID 시대”에 행정수도 건설의 국가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지역 상생 등의 효과를 구체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마련된다면 국가 균형발전 선도도시로서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보다 빨리 실현될 것임

Memo



Memo



Memo



Memo

